

ISSUE REPORT

혁신가 21인 포커스 그룹 인터뷰 보고서

한국 혁신 생태계의 혁신 방향

2017. 7. 14

정한울(여시재 Solution Designer)



<목 차>

I 왜 사회 혁신가 FGI인가?

| | |
|-------------------------|---|
| 1. 사회혁신 논의의 현황 | 4 |
| 2. 정부의 혁신 지원 현황 | 7 |
| 3. 혁신 생태계 진단의 방법론 | 9 |

II 혁신가들이 본 한국사회의 혁신 생태계

| | |
|--|----|
| 1. 한국사회 혁신 생태계 총평 - 개선된 창업 환경/지속가능성은 비관 | 13 |
| 2. 지속가능성 위기 요인 ① - 경쟁 심화 | 15 |
| 3. 지속가능성 위기 요인 ② - 정부 규제의 제약 | 18 |
| 4. 지속가능성 위기 요인 ③ - 지원체계의 한계 : 비효율성·비효과성 | 23 |
| 5. 지속가능성 위기 요인 ④ - 지체된 혁신문화 : 혁신적 사고 부재, 반기업 문화 | 28 |
| 6. 지속가능성 위기 요인 ⑤ - 혁신가의 부족, 혁신가 육성체계 미비 ... | 31 |

III 혁신 생태계 2.0을 위한 정책 제언

| | |
|---|----|
| 1. 혁신 생태계 2.0의 방향 - 정부 주도 생태계에서 협력·분산·자율 생태계로 | 35 |
| 2. 정책제언 ① - 정부 규제의 혁신 | 36 |
| 3. 정책제언 ② - 자본조달 생태계의 혁신 | 40 |
| 4. 정책제언 ③ - 정책 지원체계의 혁신 | 45 |
| 5. 정책제언 ④ - 혁신인재 육성체계의 혁신 “Learning by Doing” | 48 |
| 6. 정책제언 ⑤ - 혁신 평가체계 | 50 |
| 7. 정책제언 ⑥ - 친 혁신기업 문화 확산 | 52 |

IV 혁신 생태계 2.0을 위한 연구과제

| | |
|--|----|
| 1. 쟁점 ① - 혁신 전략의 우선순위 : 생태계 개선 대 내부 혁신역량 강화 .. | 55 |
|--|----|



| | |
|--|----|
| 2. 쟁점 ② - 사회적 임팩트와 경제적 임팩트의 조화 | 57 |
| 3. 쟁점 ③ - 혁신 지원의 효과 : 모럴 해저드 대 중복투자론 | 59 |
| 4. 쟁점 ④ - 혁신기업의 인권과 보상체계 | 60 |
| 5. 쟁점 ⑤ - 정책 우선순위 : 청년 창업지원인가 성숙창업 지원인가 | 62 |
| 6. 쟁점 ⑥ - 저변 확대 정책의 효과성 : 1인 기업/여성 창업 지원정책 ... | 64 |

V 맺으며

| | |
|--------------------------|----|
| 1. 정부혁신 없이 사회혁신 없다 | 66 |
| 2. 혁신역량에 대한 자성 | 68 |
| 3. 혁신 생태계 2.0 과제 | 69 |

| | |
|------------|----|
| 참고문헌 | 71 |
|------------|----|

| | |
|----------|----|
| 부록 | 74 |
|----------|----|



I 왜 사회 혁신가 FGI인가?

1. 사회혁신 논의의 현황

21세기에 접어들면서 세계화, 정보화라는 거대한 변화 트렌드 속에서 산업 및 인구 구조가 급격히 변동하고 있다. 특히 한국사회에서는 성장 동력이 급격히 위축되고, 사회 양극화 및 경제적 불평등이 심화되는 등 전통적인 사회 위험이 중첩되어 나타나고 있고, 최근에는 쓰나미, 메르스 같은 자연재해 문제처럼 새로운 사회적 위험의 심각성도 커지고 있다(Beck 1994; 이재열 외 2011).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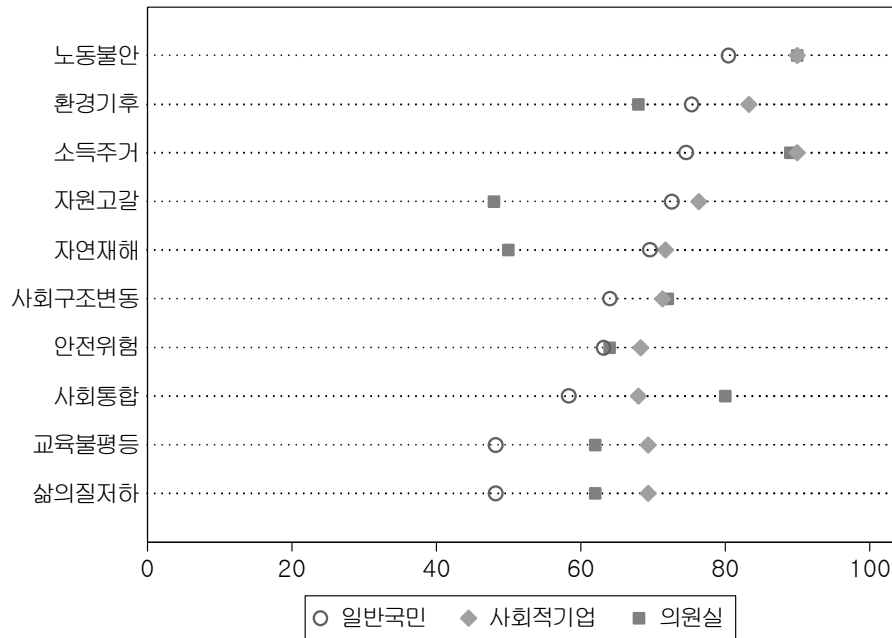
경제성장률, 실업률, 가계부채 규모, 소득불평등 지수 같은 국가적 차원의 거시경제 지표가 일관되게 악화되고 있으며, 고령화 및 저출산으로 인한 인구학적 구조 및 결혼 가정, 1인 가구 증가 같은 가족구조에서도 급격한 사회변동이 확인되고 있다. 최근에는 대학 진학률의 하락세로 사회적 분위기가 침체되고, 자살과 우울증 등의 사회적 병리 현상도 심각해지고 있다. 동시에 여러 사회적 변화들이 경제, 사회, 정치, 문화 전 영역에서 걸쳐 복잡하게 얽혀 나타나고 있다. 문제의 수준으로 봐도 개인수준의 문제로부터 집단, 국가, 초국가적 단위의 문제에 이르기까지 다층적인 양상을 보이고 있다.

사회적 변동의 다층화 복잡해지면서 발생하는 사회적 위험요소들에 대한 새로운 솔루션을 요구하는 여론이 커지고 있다. 2016년 1월 <사회적기업연구소>가 일반국민, 사회적기업, 국회의원실 대상으로 실시한 <사회문제와 사회혁신조사>에서도 확인된다(그림1). 경제, 사회, 환경 분야의 10대 사회적 문제를 선정하여 각각의 심각성을 조사한 결과, 세 집단 공히 고용불안, 소득/주거 문제를 심각하다고 인식하는 비율이 높았다. 사회구조의 변동이나 세월호 사건 이후 안전위험 문제 등에 대한 위기의식이 커지고 있다. 동시에 환경 및 기후변화, 자원고갈, 자연재해와 같은 글로벌 차원의 이슈도 더 이상 남의 문제가 아니라고 생각하고 있다. 전통적인 사회문제 외에 새로운 사회적 위험들이 중첩하면서 전통적인 패러다임과 방법론에서 탈피한 혁신적 솔루션(innovative solution)에 대한 관심과 논의가 심화되고 있다(Mulgan et al. 2007; Phills et al. 2008; 장용석 외 2015).



<그림1> 일반국민/사회적기업/국회의원실의 사회문제 별 심각성 인식

(“심각하다”고 응답한 비율, 단위: %)



출처 : 사회적기업연구소 <사회문제와 사회혁신조사>
(2016, 국민 1,000명, 사회적기업 300명, 국회의원실 100명)

한국사회의 혁신 솔루션에 대한 논의는 대체로 다음과 같은 네 가지의 큰 흐름으로 수렴되어 왔다. 첫째, 한국사회의 당면한 사회적 문제들을 해결하기 위해서는 “경제적 가치”와 “사회적 가치”를 조화시켜 나가야 한다는 문제의식이 확산되고 있다. 전후 개발독재 시기까지는 경제문제가 모든 사회적 의제를 잠식하던 시기였다. 그러나 민주화 이후 2000년대 초중반까지 한국경제의 규모가 커지면서 분배와 복지, 삶의 질과 문제와 같이 그 동안 잠복된 사회 문제가 분출되었고, 새로운 갈등 요인으로 등장했다. 성장 대 분배, 시장 대 국가 논쟁이 이념대결 양상으로 치달기까지 했다. 이 시기에는 경제적 가치실현과 사회적 가치실현을 양립할 수 없는 과제로 인식하는 경향이 강했다. 국가적 차원에서는 성장과 국가경쟁력 강화, 개인 차원에서는 “고용/일자리”와 “소득 안정” 등 경제적 가치 실현의 문제가 여전히 사회적 문제의 한축을 담당하고 있지만, 사회적 가치를 훼손하는 경제적 가치의 추구는 지속가능하지 않다는 사회적 인식이 확산되어 온 것이 사실이다. 반대로 사회 양극화의 위기를 완충하기 위한 재분배와 사회안전망 확충, 삶의 질 개선을 위한 사회복지 서비스(주거, 교육, 보건 영역) 개선은 경제적 뒷받침 없이 가능하지 않다는 인식도 커지고 있다(동아시아연구원 2009; 손을춘 2014; Kerlin 2010). 결국 경제적 가치와 사회적 가치를 대립시키기보다 양 가치의 조화와 공유를 강조하는 입장으로 수렴되고 있다는 평가가 가능하다



(장용석 외 2015; Phills et al. 2008; Porter and Kramer 2011).

둘째, 직면한 사회적 문제와 위험요인들에 대응하는 전략으로서 “국가”와 “시장” 모두 실패하고 있다는 문제의식이 확산되고 있다. 그 동안 사회적 환경의 변동과 이로부터 야기되는 위험요인에 대한 대응방법으로 크게 시장 중심적 패러다임과 국가 중심적 패러다임이 경쟁해왔던 것이 사실이다. 이는 복지 중심 접근법과 성장 중심 접근법의 경쟁으로 치환될 수 있다. 그러나 대기업 경쟁력에 기반한 성장의 결실이 사회와 개인의 삶의 질 개선으로 이어진다는 낙수효과에 대한 신뢰에 균열이 생기고 있다. 반대로 저성장, 경기침체가 장기화되면서, 고용불안과 가계부채가 급증하고 있으며, 이러한 문제들은 기존의 복지체계 및 사회안전망으로만 감당할 수 있을까라는 의문을 제기하고 있다. 그 결과 국가-시장의 이분법을 뛰어 넘는 새로운 혁신 모델이 필요하다는 공감대가 커지고 있다(이숙종 2010; 장훈 외 2006; 정한울 2016).

셋째, 혁신의 성장 동력(growth drivers)으로서 국가 대 시장, 공공 대 민간, 사회적 가치 대 경제적 가치라는 이분법에서 탈피한 “사회경제적 하이브리드 조직(hybrid organization)”의 역할에 대한 기대가 커지고 있다. 즉 영리를 추구하는 기업조직 특성과 사회적 가치실현을 목적으로 한 사회적 경제조직의 성격이 혼합된 하이브리드 조직은 전통적 영리기업과 전통적인 비영리부문을 양 극단 사이에 “기업의 사회적책임(CSR) 혹은 “공유가치 창출형(common shared value) 기업”, “IT기반 혁신형 스타트업”, “소셜 벤처”, “마을기업”, “사회적기업”, “협동조합” 등 다양한 형태의 조직들이 포함된다. “혁신적인 벤처 스타트업(innovative venture startup)”, “사회적기업(social enterprises)”, “협동조합” 등이 새로운 사회혁신 경제의 핵심 동력으로 주목받아 왔다.¹⁾

넷째, 영리추구 목적의 비즈니스 활동 못지않게 사회혁신 과정에서도 기술 혁신의 중요성은 강조되고 있다. 사물인터넷, 3D 프린터, 인공지능, 빅데이터로 상징되는 기술의 발전은 일자리 위기 등 새로운 사회적 문제의 근원으로 지목되고 있지만, 동시에 기후변화 또는 인구고령화 문제 등 각종 사회문제를 해결해나가는 동력으로 인식되고 있다. 무엇보다 기술 혁신에 기반한 사회혁신은 “사적인 손실(private losses)”에도 불구하고 모두가 향유할 수 있는 “거대한 사회적 이익(large social gains)”을 만들어낼 수 있기 때문이다. 기술혁신을 통해 기존 제품이나 서비스의 기능을 개선시켜 나가면서도 가격을 절감시키면 빈민층의 구매력 향상과 삶의 질을 개선에 기여할 수 있다. 신기술 기반 스타트업(New Technology-based Firms, NTBFs) 육성은 한국경제의 새로운 성장 동력을 확보하는 방법이 될 수 있으며, 보다 직접적으로 일자리 창출에 기여할 수도 있다(Colombo and Grilli 2010, 611; Colombelli et al. 2016; Malchow-Møller et al. 2011; Mulgan et al. 2007, 5; Rodrik 2015, 1)

1) 사회경제적 “하이브리드 조직(hybrid organization)”은 사회적기업(social enterprises), 공공성에 기반한 비영리조직의 성격과 효율성에 기반한 영리조직의 성격을 공유하며, 국가-시장-공동체가 중첩되는 교차 영역에서 활동하는 조직을 의미한다. “혁신적인 스타트업”은 주로 “1990년대 말 미국의 IT버블 과정에서 IT기술 기반으로 생겨난 벤처기업”을 의미했지만 최근에는 “새로운 비즈니스 모델과 새로운 아이디어 기반으로 영리를 추구하며 공익에 기여하는 소규모 신생기업”을 의미한다(Alter 2007; Defourny and Nyssens 2013, 2012; 이재열 외 2016; 정한울 2016; 이윤준 2013).



2. 정부의 혁신 지원 현황

정부도 사회혁신 지원을 위해 사회적 가치와 경제적 가치의 조화를 추구하는 사회적 경제 조직과 혁신적 스타트업 창업을 장려해왔다. 2007년 <사회적기업육성법> 제정과 <벤처기업에 관한 특별조치법> 개정(1997년 제정), 2012년 <협동조합기본법>, 2014년 <사회적경제기본법>을 연이어 공표하며 사회혁신의 법적 제도적 기반을 정비해왔다. 그 결과 하이브리드 사회경제조직과 혁신적 스타트업은 양적으로 급성장해왔다. 이명박 정부에서는 2009년 9개 부처 공동으로 “기술창업 활성화대책”을 마련하여 다양한 지원정책을 펼쳤고, 박근혜 정부 시기에도 “일자리 중심의 창조경제”를 5대 국정목표 중의 하나로 제시하였다. 이를 뒷받침하기 위해 (1)창조경제 생태계 조성 (2)일자리 창출을 통한 성장동력 강화 (3)중소기업의 창조경제 주역화 (4)창의와 혁신을 통한 과학기술 발전 (5)원칙이 바로선 시장경제질서 (6)성장을 뒷받침하는 경제운영을 6대 전략/국정과제로 제시하였다(이윤준 2013; 대통령직 인수위원회 2013).

실제로 적지 않은 재원과 제도적 지원이 이루어지고 있지만 정부정책의 효과에 대해서는 적지 않은 의문이 생기고 있다. 창업기업 10개 중 4개는 1년 이내에 소멸되고, 2014년 활동기업 기준으로 보면 5년 평균 생존율은 27.3%에 불과하다. 해마다 5년 평균 생존율은 하락경향을 보이고 있다(2013년 30.9%→2014년 29.0%→2015년 27.3%, 표1). 특히 벤처기업의 경우 성공 확률은 매우 낮은 것으로 알려져 있다(Gage 2012; 조성주 외 2014). 일반적으로 규모가 작은 기업의 경우 기업의 성장은 생존을 결정하는 중요한 척도다(김정호·한정희 2014). 물론 고 위험, 고 보상(high risk, high return)의 특성을 갖는 벤처기업에 대해 그 성공과 실패를 단순히 초기 생존율로 판단하는 것은 한계가 있을 수 있다. 그러나 창업벤처기업의 실태와 현황을 보면 단순 생존율이 낮은 것만이 문제가 아니다. 주목할 점은 ① 혁신형 창업이 아닌 생계형 창업이 많다는 점 ② 실패의 경험이 축적되지 못하고 “실패=재기불능”으로 귀결된다는 점 ③ 성장단계로 보면 성장기에 접어든 벤처기업들이 성숙기로 접어들기 직전에 성장률이 정체되고 퇴출되고 있는 현실이다. 즉 창업한 스타트업들이 실패하는 원인의 질이 좋지 않다는 것이다(김정호·한정희 2014; 이용희·박수홍 2014).

<그림2>에서 대표적인 하이브리드 혁신조직인 사회적 기업의 경우 2007년 인증 사회적기업 수가 55개에서 2015년 말 현재 1,506개로 늘어났고, 사회적기업에 고용된 근로자 수만 보더라도 2007년 2,539명에서 33,527명으로 늘어났다(정한울 2016). 또한 대표적인 혁신 스타트업인 인증벤처기업의 수를 봐도 1997년 첫째 2,042개에서 2016년에는 33,360개로 크게 증가했다(벤처기업협회 2017). 문제는 이러한 양적 성장에도 불구하고 이들 사회혁신 조직들의 지속가능성에 적지 않은 문제가 드러나고 있다는 점이다. 사회적기업의 경우 5년 생존율은 78%로 일반기업에 비해 월등히 높은 것은 사실이다(손을춘 2014). 그러나 이러한 높은 생존율은 정부 지원에 의존한 결과이다. 영업 및 비영업 적자를 정부 지원금 등 외부 지원으로 메꾼 결과이며, 특히 인건비의 정부 의존도가 심각하다. 정부의 인건비 지원이 중단된 기업들이 누적되면서



사회적 기업에 채용된 평균 근로자수가 “2007년 49.8명, 2010년 38.66명, 2013년 22.3명, 2015년 22.2명으로 감소” 추세로 돌아섰다(곽선화 2011; 장용석 외 2015). 결국, 혁신 스타트업과 사회적기업에 대한 정책 지원이 강화되고 있지만, 이들 혁신조직의 성공과 지속가능성에 대해서는 자신할 수 없는 상황이다. 반대로 한계기업은 도태되지 않고 정부 지원으로 연명하는 상황이 반복되면서 정부 지원정책이 오히려 건강한 혁신 생태계를 구축하는 데 장애가 되고 있다는 비판의 목소리도 커져왔다(장용석 외 2015).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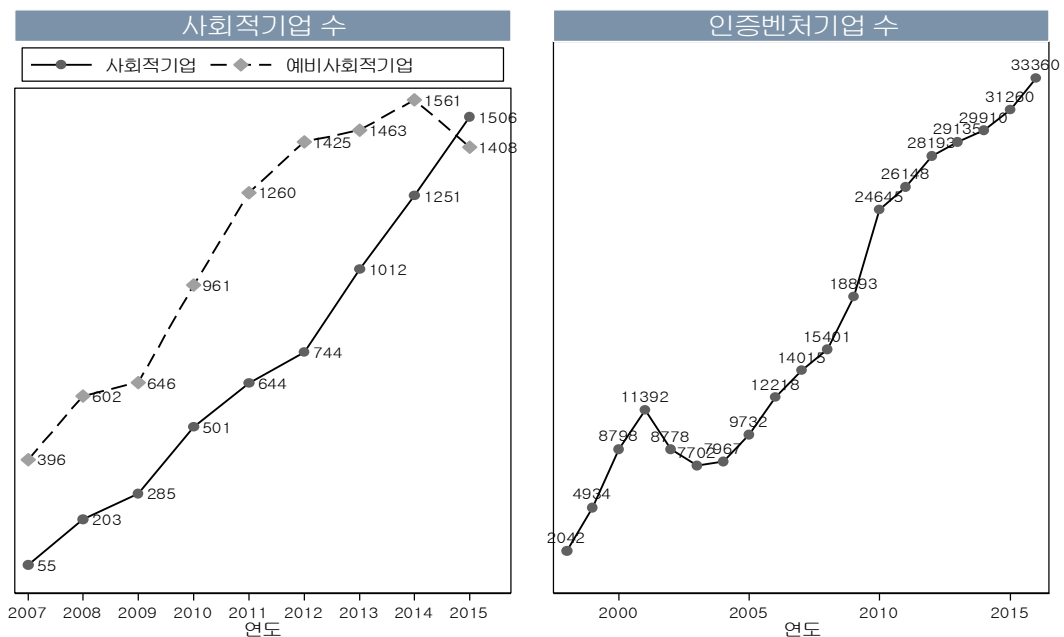
<표1> 기준 연도별 기업의 생존율

(단위: %)

| | 1년 생존율 | 2년 생존율 | 3년 생존율 | 4년 생존율 | 5년 생존율 |
|-------|--------------|--------------|--------------|--------------|--------------|
| 2014년 | (2013년) 62.4 | (2012년) 47.5 | (2011년) 38.8 | (2010년) 31.9 | (2009년) 27.3 |
| 2013년 | (2012년) 60.1 | (2011년) 47.3 | (2010년) 38.2 | (2009년) 32.2 | (2008년) 29.0 |
| 2012년 | (2011년) 59.8 | (2010년) 46.3 | (2009년) 38.0 | (2008년) 33.4 | (2007년) 30.9 |
| 2011년 | (2010년) 60.0 | (2009년) 46.9 | (2008년) 39.7 | (2007년) 35.8 | - |
| 2010년 | (2009년) 60.1 | (2008년) 48.1 | (2007년) 41.5 | - | - |

* ()는 기업의 신생연도임
출처: 통계청 <2015년 기준 기업생멸 행정통계 결과>

<그림2> 사회적기업 및 벤처기업수의 변화



출처: 정한울(2016); 한국벤처기업협회(2017)



3. 혁신 생태계 진단의 방법론

무엇이 문제인가? 사회 전반에 사회혁신의 필요성에 공감대가 커지고 적지 않은 지원이 범정부 차원에서 이루어지고 있음에도 왜 그 효과는 체감되지 않는가? 한국사회의 사회혁신 노력이 한 단계 진전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풀어야 할 숙제다. 이에 (재)여시재는 사회혁신의 최전선에서 사회혁신을 이끌고 있는 한국 사회의 대표적인 혁신가의 현장 경험과 안목을 집약하는 데서부터 질문에 대한 대답을 찾고자 했다. <한국사회 혁신생태계 연구>과제라는 이름으로 현장에서 사회혁신을 이끌고 있는 사회 혁신가(social innovators)들 스스로의 진단과 생생한 목소리를 정확하게 파악하는 데서 출발하고자 했다. 현장에 문제 해결의 솔루션이 있다는 문제의식 때문이다. 이를 위해 2017년 1월 4일부터 2월 23일까지 두 달여에 걸쳐 각 분야 혁신가 21명을 대상으로 포커스 그룹 인터뷰(Focus Group Interview, 이하 FGI)를 진행했다.

1) 왜 FGI인가?

FGI 조사방법은 연구목적에 맞게 포커스 그룹을 설정하고 해당 집단의 구성원들로 소그룹을 구성하여 솔직한 생각을 자유롭게 토론하는 과정에서 해당 집단의 인식 경향과 패턴을 발견하는 데 유용한 방법론이다. 응답자들이 특정 분야의 이해당사자거나 전문가들일 경우에는 해당분야의 인식지형을 파악하고 전문적인 정책 대안을 모색하는 데에도 매우 효과적이다. 주로 녹취록의 형태로 정리되는 FGI 논의 내용은 그 자체로도 독립된 연구 보고서의 재료가 될 수 있으며, 이후 심층연구 및 파생연구의 자료로 활용될 수 있다.

다만 FGI는 취합된 정보와 데이터는 대표성 있는 표본으로부터 얻어진 자료가 아니라는 점에서 일반화가 어렵고, ‘언어’로 이루어진 질적 정보라는 점에서 계량방법 적용이 용이치 않다. 또한 인터뷰를 통해 획득된 정보들은 참여자들의 “인식된 현실(perceived reality)”이라는 점에서 부정확한 기억에 의존하거나 자신의 이해관계를 합리화하는 편향된 정보를 제공할 수도 있다는 점은 유의해야 한다.²⁾

본 FGI 연구의 목적은 요약하면 (1)현재의 한국사회 혁신 생태계의 현 주소를 진단하고 (2)새로운 혁신 패러다임을 모색함과 동시에 (3)현장에서 활동하는 한국의 대표적인 혁신가들이 생각하는 정책대안을 수렴하여 정책화하는 데 있다. 정책의 실효성을 높이기 위해서는 공급자 중심이 아닌 수요자 중심의 정책 진단과 대안이 필요하다고 판단하였다. 포커스 그룹 인터뷰는 공통 주제와 각 포커스 그룹별 별도 주제로 진

2) 그럼에도 불구하고 FGI에서 획득된 정보와 데이터 일반을 부정적으로 평가해서는 안 된다. 동질적인 사람들과의 의사소통이 이루어지는 환경 하에서 의도성과 편향은 최소화될 수 있으며, 현실 그 자체도 중요하지만, 사람들은 자신들의 인식의 틀에서 현상을 평가하고, 이러한 인식이 태도와 행동을 규제하기 때문이다. 따라서 (특히 정책결정자들의 경우) 사실과 다른 진술(인식)에 대해 그 오차 자체에 주목하기 보다는 그러한 인식을 가져온 요인에 대해 관심을 갖고 대응 방안을 고민하는 것이 타당할 것이다.



행하였다. 공통 논의 주제는 다음과 같은 질문으로 구성되었다. (1)각 소속 조직의 미션과 미션 실행과정에서 발생하는 문제점을 공유 (2)한국사회 혁신 생태계 전반에 대한 진단과 정부 및 사회영역별 평가 (3)현장에서 생각하는 지속가능한 혁신 친화적 사회생태계 구축 방안을 공통적으로 다루었다.

FGI 인터뷰 자료 내용은 (1)원자료(raw data)로서의 녹취록 (2)FGI 결과를 요약한 보고서 (3)심층연구 보고서(<정책제안 보고서>, <법률 개정안> 등) 다양한 형식으로 출판할 계획이다. 또한 산출된 결과물은 사회혁신을 고민하는 각 분야 사회 혁신가, 예비 혁신가, 정책 결정자, 연구자, 언론 등 다양한 이해당사자들과 관심 있는 시민들이 활용할 수 있도록 공개한다.³⁾

<FGI 공통 인터뷰 주제>

- 주제 1. 소속 조직(기업)의 혁신 경험 공유
- 조직 미션 실현의 경험(사회적 가치실현과 경제적 가치실현의 조화)
 - 조직 운영 상의 애로 사항
 - 문제 해결 전략
- 주제 2. 한국사회의 혁신 생태계 평가
- 성장 단계별 평가 : 창업-생존-성장-성숙 및 출구 환경(스케일 업)
 - 지속가능성에 대한 총평
 - 공정 경쟁(기득권 구조, 불공정 경쟁 요인)
 - 혁신조직의 가치 체인(자본-인력 확보-판로)
 - 사회혁신의 제도적 환경 총평(진흥과 규제)
 - 혁신 조직 내부 요인 : 운영인력 재생산 구조
 - 정부 지원정책 평가
 - 금융 지원/경영 지원/R&D 정책의 효과성
 - 비효율성 및 비효과성의 원인
 - 사회적 환경
 - 사회혁신에 대한 인식
 - 사회적 임팩트의 평가 체계
 - 사회혁신 행위자간 협업 관계
 - 혁신역량 육성 환경(인큐베이팅, 교육체계)
 - 사회혁신 인큐베이팅 평가(정부 주도/사회 영역)
- 주제 3. 정책 제언
- 정부 지원과 규제 개선 방안
 - 효율성/효과성 제고를 위한 정치적/정책적 대안
 - 사회혁신 생태계 개선 방안
 - 사회혁신 조직에 대한 인식 전환 방안
 - 인큐베이팅 효과성 제고 방안
 - 공교육 체계에서의 사회혁신 교육 강화 방안

3) 연구결과들은 여시재 홈페이지(<http://yeosijae.org>)와 본 프로젝트의 온라인 플랫폼인 “혁신을 키우는 정책제안 프로젝트: 당신은 혁신의 편입니까?”(www.innovators.kr)에 게재된다.



2) 포커스 그룹 선정 기준 : 사회적 임팩트, 경제적 임팩트, 기술적 임팩트

혁신 생태계에 대한 진단과 현장의 아이디어를 취합하기 위해 인터뷰를 진행할 포커스 그룹은 다음과 같은 기준으로 선정하였다. 사회적 가치와 경제적 가치를 동시에 실현하고자 하는 혁신 조직 중 상대적으로 “사회적 임팩트(social impact)” 실현을 우선하는 조직군과 상대적으로 “경제적 임팩트(economic impact)”를 중시하는 조직군을 나누고, 양 집단의 인식 특성을 비교하고자 했다. 사회적 임팩트를 중시하는 조직군으로는 소셜 벤처, 사회적 기업, 혁신적 비영리 조직을 포함했고, 상대적으로 영리추구를 중심에 두고 혁신을 추구하는 조직군으로 혁신적 스타트업, 벤처 기업을 선택했다.

이와 함께 혁신 생태계의 수요자 입장(현장 조직)과 공급자 입장(지원 조직)별 시각 차이를 비교하기 위해 각 집단별로 각각 현장 조직의 혁신가 그룹과 지원조직(금융, 교육, 공간 지원, 정책지원 등)의 혁신가 그룹을 구분하였다. 이와 함께 이와 별도로 사회혁신의 기술혁신의 인프라에 대한 평가를 위해 일선 과학기술연구자와 과학기술 정책 지원을 담당하는 혁신가들로 과학기술 혁신분야 포커스 그룹을 추가하였다. 결국 (1)사회적 기업/소셜 벤처 기업 (2)혁신적 스타트업 (3)사회적기업/소셜 벤처 지원 기관 (4)스타트업 지원·혁신적 (5)과학기술자 집단 등 총 5개 집단을 우선 인터뷰 대상으로 선정했다. 각 그룹의 인터뷰 참가자들은 (1)실제 혁신 성과를 산출한 경험 (2)자기 분야에서의 평판 (3)해당 분야에서의 활동 기간 등을 고려하여 모집하였다.

<표2> FGI 표적집단 구성

| 영역 소속조직 특성 | 사회적 임팩트 우선 | 경제적 임팩트 우선 | 기술적 임팩트 |
|---------------|-------------------|----------------------|----------------------------------|
| 현장 조직 | ① 사회적 기업, 소셜벤처 | ② 혁신적 스타트업 (NTBF) | ⑤ 혁신적 과학기술자 집단, 과학기술정책 연구자 |
| 지원 조직 | ③ 사회적 기업, 지원조직 | ④ 스타트업 지원 조직 | |

3) 연구진 소개 및 조사 일정

본 연구팀의 구성 및 FGI에 참석한 분야별 인터뷰 참가자, FGI 진행 일정을 정리하면 다음과 같다. 일관된 진행을 위해 사회는 연구진 중 일인이 전담하였고, 인터뷰 참가자들 외에 연구진이 함께 참여하여 조사를 진행하였다. 솔직하면서도 내면의 실질적인 문제점들을 여과없이 드러내기 위해 보고서에는 참가자들의 익명성을 보장하기로 하였다. 임의로 기호화하여 발언자를 표기하였다.



(1) 연구 팀

<표3> 참여 연구진

| | |
|----------|---|
| 연구책임 | (사)사회혁신공간 데어 |
| 연구총괄기획 | 김병권 (사회혁신공간데어 대표) |
| 연구 팀 | 손우정 (바꿈 상임이사) 이원재 (여시재 기획이사) 임주환 (희망제작소 객원연구위원, 변호사) 전일주 (여시재 객원연구원) |
| 현장연구기획진행 | 김산 (오늘공작소 공동대표) |
| 연구기획큐레이터 | 권오현 (빠띠 대표) 박은지 (빠띠 브랜드 매니저) 신윤정 (사회혁신공간데어 코디네이터) 장수정 (사회혁신공간데어 코디네이터) |

(2) 인터뷰에 참여한 혁신가 (총 21명)

<표4> FGI 일정과 참여 혁신가

| 일자 | 포커스 그룹 | 참여 혁신가 |
|------------|---------|--|
| 2017.01.04 | 사회적 기업 | 사회적기업 대표(가-1, 가-2, 가-3, 가-4, 가-5) |
| 2017.01.24 | 스타트업 | 스타트업 대표(나-2, 나-1, 나-3, 나-4) |
| 2017.02.02 | 스타트업 지원 | 미디어(다-1) 벤처캐피탈(다-2) 벤처지원기관(다-3) 차세대창업교육(다-4) |
| 2017.02.03 | 소셜벤처 지원 | 교육비영리(라-1) 사회혁신 투자기관(라-2) 혁신가 양성(라-3) 혁신공간지원(라-4) |
| 2017.02.23 | 과학기술 정책 | 생명과학(마-1) 물리학(마-2) 국책연구원(마-3, 마-4) |



Ⅱ 혁신가들이 본 한국사회의 혁신 생태계

1. 한국사회 혁신 생태계 총평 - 개선된 창업 환경, 지속가능성은 비판

1) 개선된 창업 환경

각 분야 혁신가들이 본 한국사회의 혁신 생태계의 모습은 과거에 비해 창업환경은 개선되었다는 인식이 지배적이다. 창업환경에 대한 긍정적인 평가는 스타트업 혁신가와 벤처 인큐베이팅 영역의 혁신가들에게서 두드러졌다. 첫째, 창업절차가 과거에 비해 간소화되었고, 둘째, 창업 초기 금융지원이 풍부해졌다는 점을 주된 요인으로 꼽았다. 특히 스타트업 기업에 대한 정부의 직접적인 금융지원을 비판적으로 평가하는 주장도 있었지만, 대부분 정부의 초기 창업자금 지원에 대해서는 긍정적인 평가가 많았다.

가. 간소한 등록절차

“ 미국에서 창업을 한 적이 있어서 상대적으로 비교되는 경험을 하고 있다. 원래는 2005년에 한국에서 한 번 창업을 했고, 미국에 2010년에 창업을 한 다음 다시 돌아와서 창업을 했는데, 예전에 비하면 우리나라 환경이 창업하기 좋아진 것은 분명하다... 2005년만 하더라도 창업자들을 주변에서 찾아보기 힘들 정도로 IT 쪽 창업자가 매우 적었고, 법인 하나 만드는데 최소 단위 5000만 원 이상이어야 한다는 미국에는 존재하지 않는 왜 있어야 하는지 모를 그런 규정이 많았는데 그런 게 없어진 것은 확실하다.”(나-1).

“ 사실 우리나라가 창업하기는 쉽다. 사업자등록은 간단하니까... 기보(기술보증기금) 같은 데는 웬만한 사업자 등록 내고 사업계획서 제출하면 신용도가 크게 문제없는 경우 크게 1억까지는 받는다고 하더라... 우리는 다행히 특허가 등록된 게 하나 있었다. 초기 자금 1억에, 기보 특허넘버 매출이 1억, 이렇게 해서 그걸로 운영을 하며 스타트를 할 수 있었다. 그런 건 정부가 정책 자금이 있으니까 가능한 거다. 우리는 VC투자를 3개월 되는 시점에 굉장히 빨리 받은 케이스이다.”(나-2)

나. 풍성한 초기 자금 지원

“ 자금지원, 시설, 공간이 잘되고 있다. 과도하게 너무 많다. (다-4)

“ 대학생 애들에게도 4천까지는 뿌린다더라. ‘이 정도는 받아야 벤처 기업 인증이다.’ 기준이 있어서 그 금액까지는 뿌리는데 특허가 없으면 절대 1억은 못 가고 이런 식으로 구분이 있다.” (나-3)

“ 정부가 어떻게 해야 하느냐면 현 모태 펀드처럼 하는 건 잘하는 일이라 본다. 계속해서 스타트업에 투자해야 한다고 생각한다. 81만의 스타트업 종사자가 생겨



“나야 한다... 초기 자금 측면. 처음에 전세 자금 뺀고, 중기청에서 돈을 받았다. 이 건 긍정적으로 본다. 처음 시작할 때 5000만원이란 돈은 꽤 크다. 직업을 가지고 있었더라면 시간이 있었겠지만 도전할 때 도움이 되었다.”(나-4)

“과거에 비하면 스타트업 성장시킬 수 있는 금융환경 좋아졌다. 멀리 봐도 5년 전 까지만 해도 스타트업의 자본조달은 벤처캐피탈에 (의존하여) 갑을관계 만들어질 수밖에 없는 구조였다. 30년 가까이 벤처캐피탈만 자본가로 형성돼 있었던 상황. 투자 받으려면 접대하고 리베이트주고. 과거 5~6년 전부터 창업가들이 스타트업을 키우는 자본들이 생긴... 본앤젤스, 프라이머 등 그게 한 단계 더 진화하면서... 3년 전 정부가 잘한 정책이라고 생각한다.”(다-1)

“자금 지원은 잘 되고 있다고 보고. 허울뿐인 게 많다. 판로지원, 연수프로그램 체험. 올해도 중기청에서 글로벌 창업 지원하겠다고 실리콘밸리 보내자고 난리친 거 같은데... 정착한 팀은 한 팀도 없을 거다.” (다-2)

2) 지속가능성에 대한 우려

창업 이후 조직이 생존 단계를 거쳐 성장 국면으로 발전하고, 조직의 지속가능성을 확보할 수 있을지에 대해서는 대체로 부정적이거나 미온적인 태도가 확인된다. 기업의 진로 전망이 밝지 않을뿐더러 당장 현재의 운영부담이 작용한 결과로 유추해볼 수 있다. 기회가 되면 다른 사업을 하고 싶다는 냉소적 태도나 10년-20년 후 자신의 기업이 존재할 수 있을지에 대한 깊은 회의감도 발견된다. 전체적으로 조직의 존속을 이끄는 것 자체가 버거운 상황임을 보여주고 있다.

특히 사회적기업 혁신가들 사이에서 이러한 비관적 평가가 강한 것으로 나타났다. 우선, 이들은 스타트업 및 일반 벤처에 비해 사회적 기업에 대한 지원 환경이 상대적으로 크게 열악하다고 인식하고 있다. 뿐만 아니라 R&D 부문과 직접적인 운영 지원 부문 모두에서 상대적으로 정부 및 민간 지원이 취약하다고 지적하고 있다.

“(1000억 정도 규모의 굉장히 많은 자본을 독지가가 내놓고 쓰라고 하면 어떤 일을 하고 싶은가라는 질문에 대해) 지금 하는 일을 그만두고 싶다. 퇴직 플랜? (웃음) 새로운 사업을 찾으려 할 것 같다.”(가-1)

“사실 한국에서 전망이 없다고 생각해서 아시아 각지로 가고 있는 편이다... 10년 전에 일을 시작했을 때는 사회적 경제가 훌륭하다, 남을 돕는다, 그리고 비즈니스 영역에서 남을 돕는 게 가능하다, 이런 식의 설득과 명분이 있는 일에서 시작을 했다면, 10년이 지난 지금은, 지치는 건 그렇다 치고... 지금과 똑같은 양태로 가면 20년 후에도 10년 후에도 존재할 수 있을까에 대해서는 지금 계속 의문이 든다.” (가-2)

“창업하는 사람들도 사실 대표들끼리 모이면 되게 힘들다. 특히 투자나 지원금에 의지하지 않고 혼자 무언가 하려는 대표님들끼리 모이면 굉장히 생존의 이슈에 대해 고민하고 그러는데, 이 부분은 잘 드러나지 않는다.” (가-5)

“우리나라 R&D 국가예산은 18조인데, 소위 대기업이나 이런 쪽 섹터에 대한



R&D 지원 예산 말고. 소위 생활기술과 사회기술과 관련된 쪽의 예산은 거의 300억~500억원 수준이다. 이것도 만들어진지 얼마 안됐고. 그런 것처럼 사실은 소멸한 투자에 대한 정부 지원이 굉장히 인색하다고 봐야하나.” (라-4)

“자금자체가 정부쪽 지원자금도 그렇고 민간에서 오는 자금도 그렇고 되게 부족하고. 양쪽 다 부족한 가운데서도 양쪽 다 부족한 가운데서도 이것이 제대로 집행될 수 있는 구조가 아닌 것 같다.” (라-2)

2. 지속가능성 위기 요인 ① - 경쟁 심화

이러한 지속가능성에 대한 비관적인 인식은 어디에서 기인하는가? 이번 FGI 결과를 보면 무엇보다 사회혁신조직들의 비관적 전망에는 기업운영과정에서 경험하고 있는 이중, 삼중의 경쟁 구조에 대한 부담감이 작용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본 FGI에서는 (1)정부 정책의 실패 혹은 정부가 관리하는 센터 기관에 의한 경쟁의 심화 (2)기존 시장의 지배적 경쟁자(대기업 혹은 대형법인, 종교단체 등)과의 경쟁 (3)세계화 및 정보화 등으로 변화된 시장 환경 하에서 해외로부터 국내 시장을 목표로 진출하고 있는 외국 기업 등과의 경쟁 심화를 부담스러워하는 경향이 확인되었다.

1) 생태계 내에서의 주요 위협 요인

가. 정부 정책 실패로 인한 경쟁

“ 현실에서 돌봄 서비스나 사업 자체는 예전부터 있었는데, 그 시장을 보면 굉장히 어마 무시한 경쟁을 하고 있다. 그것들이 가만히 보면 정부 정책의 실패로 인한 경쟁이다. 예를 들면 노인장 교양 보험제도가 생기기 전에 3년 동안 시범사업을 했다. 최종 결과가 공급 조직이 6,000개 정도 필요하다는 결론이었다. 그 당시 국가가 넣을 자금이 없어서 민간에 시장 방식으로 해라, 이렇게 이야기를 한 거다. 작년 말 기준으로 17,000개가 된다. 수요 관리를 못한 거다.” (가-4)

“ 기본적으로 정부에서 하려고 하는 정책이 경쟁 상대는 아니지만, 현장의 것들을 굉장히 베끼고, 안면물수하면서 일하는 게 없지 않다. 정부가 하는 센터나 기관을 보면 그렇다.” (가-2)

나. 전통적 비즈니스(대기업)와의 불공정 경쟁

“ 카드회사들 정말 좋은 것처럼 광고하는데, 수익 구조를 보면 뒤에서 고금리 사업하고 있다. 이거에 대해서는 아무 말도 안 하면서 새 금융 사업이 나왔을 때 형평성 이야기만 하니 황당하다.” (나-1)

“ 우리가 하는 일 자체가 메인스트림에서 하는 mass-touring으로 발생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만든 기업이다. 어떻게 보면 출혈 경쟁 환경 안에서 가전제품 파는 것 마냥 똑같은 제품을 누가 더 싸게 팔 것인가, 이런 구조로 만들어버린 거다. 그러다 보니 각종 불법적인 사기성 쇼핑을 넣고, 과도한 옵션 비용을 붙이고,



운영 전체는 지역 사람이 아닌 외국 자본이 주도하며 수익도 자신들이 가져간다. 이 비즈니스 때문에 망친 시장이라 가격 비교를 하면 망가진 시장과 제대로 반영한 곳 사이에 굉장히 큰 가격 격차가 나기 때문에 경쟁은 이를 해소하고 뚫어가는 데에 있다. 업계가 가지고 있는 문제점과 부딪혀서 극복하는 게 과제이자 미션이다.” (가-3)

“대기업의 경우 CSR 차원에서 사회적 경제 영역이나 청소년을 키우거나 이주여성 지원정책을 하는 곳을 보면, 예를 들어 SK를 보면, 청소년을 키우는 쿠킹 스쿨이 있다. 결국에는 리서치를 하면서 현장의 노하우를 (표현은 미안하지만) 빼갔다. 그 전에 리서치를 하는 단계에서 커뮤니케이션을 하면서 노하우나 사람을 빼가는 경우를 보았다.” (가-2)

“지금 가끔 심사 가서 보면 정부R&D. 예산 많은 나라인데. 서류심사에서 매출액 보고. 이익률보고. 4대 보험 했나 보고. 그러면 스타트업은 아예 못하는 거다.” (다-2)

“그리고 실제 들어가서 보니까 부동산 시장이나. 단위 사업이나 아니면, SOC나 이런 대단위 개발 사업들은 큰 틀에 보면 기존의 기득권시스템의 카르텔이 강력히 존재한다. 그와 관련된 시스템들을 변방에서 새로운 방식으로 깨는 것을 혁신이라고 한다면 그런 실험들이 앞으로 많이 나오면 좋겠다는 기대를 가지고 그걸 어떻게 풀어갈까 이런 부분이 고민이다.” (라-4)

다. 새로운 경쟁자 : 해외 자본의 침투(역차별)

“다만 보잘 것 없는 데에서 부자가 난다고 저숙련, 나쁜 일자리의 사람들이긴 하지만 규모가 크니까, 보온 도시락만 해도 3조 정도 된다. 그러다 보니까 작년부터 자본들이 들어오기 시작한다. 미국계 기업 자본이 들어오고 있다.” (가-4)

“금융권에서는 큰 대기업이 러쉬앤캐쉬나 웰컴저축은행 이런 쪽이 일본계 자금이고 저축은행을 사면서 거대한 금융 지주회사가 되었는데, 이곳과 (혁신기업들) 같게 본다.” (나-1)

“우리나라에서 열심히 콜버스 규제하는데 미국에서 쪽 빨아가고. 그렇게 떠나가는 회사가 한국으로 다시 돌아오느냐? 아니라는 거다. 잡아먹힐 것이냐, 바깥으로 나가느냐, 그 문제이다.” (나-3)

2) 기존 기득권 생태계 : 대기업형 중간지원조직과 복지전달체계의 말단 조직

사회서비스 관련 대형 민간기관(사회복지운동 모금회, 대형 법인, 종교단체, 대학 등)이나 전달체계 상의 중간조직/말단 조직(각종 정부 산하 센터)들이 혁신기업의 파트너가 아닌 혁신을 억제하는 기득권으로 인식되고 있다. 이들이 정부 지원금 전달체계 및 정부가 담당하는 사회서비스 위탁/용역 과정에서 정부지원을 독점적으로 수혜(모금 혹은 위탁사업의 독점)하면서 기득권 구조로 자리 잡고 있다는 것이다.

특히 시장 경쟁 보다 위탁/용역 수익에 의존하는 비영리 성향의 사회적기업 혁신가들 사이에서 이들 중간조직에 대한 비판적 인식이 강한 것으로 나타났다. 사회혁신



생태계를 강화시킬 목적으로 서울시, 경기도 등에서 도입하고 있는 ‘사회성과연계채권 (Social Impact Bond)’이 오히려 사회혁신조직의 경쟁상대로 기능하고 있다는 지적도 나왔다.

가. 사회복지모금회(민간복지지원의 독점적 지위)

“ 좀 더 큰 범위를 잡자면 사회적 모금 운동회나 교회들... 사회복지운동모금회라는 것은, 사업을 해보신 분들은 다 아시는데, 기본적으로 노동력을 착취하는 구조이다. 그리고 나머지는 정부의 특성상 그럴 수밖에 없다고 생각을 하는데, 좋은 사람들이 제대로 된 대우를 받아야 이쪽 industry가 발전한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아쉽다. 사회복지 운동모금회에는 10급 공무원 내지는 11급 공무원이어야 한다고 생각한다. 대놓고 왜 너희가 일을 하는데, 왜 이렇게 돈이 많이 들어가야 하니? 이런 식으로 이야기를 하니깐...그런데 사회복지 운동모금회가 기부권을 100% 인정해주니까, 세금 공제되는 부분이 있어서 돈이 그쪽으로 몰릴 수밖에 없다.” (가-1)

“ SK 제외하고는 사회적기업이나 사회 혁신 쪽에 돈을 쏟아 붓는 것들이 기업 사회공헌 자금으로 해서 투자가 아니라, 지원형태로 들어오게 되어 있는데. 그 지원역시도 아시다시피 많은 자금들은 다 공동모금회 쪽으로 들어가는 거고.” (라-2)

나. 대학/종교단체 대형 법인의 정부 입찰 싹쓸이

“ 사회복지나 사회보장 업계에서 재벌이나 대기업이라 하면 굉장히 큰 대규모의 법인들이다. 1년에 국가보조금 300억 이상 받아가는 막강한 법인들이 100개가 넘는다... 실제 하나의 법인이 수십 개의 사업자금을 거느리고 있는 것이 사실이다...이 새로운 문제를 해결하는 것에 있어서 누가 더 잘할 수 있는가에 대해서 공개입찰을 하거나 경쟁을 하는데 새로운 방식이나 철학으로 해보자는 곳들은 자본도 없고 규모도 작으니 상대가 안 된다. 주로 깨지는 게 학교법인이라 불어서 제대로 깨진다. 곰곰이 생각해 보면 “왜 그러면 그런 큰 법인이 이런 작은 일에 들어올까?” 이해가 안 되는 부분이 많다. 그럼에도 아직까지 그러고 있다. 전통적인 사회복지의 방식이 새롭게 생기는 영역까지도 그 방식대로 유지하려는 속성들이 가고, 이것이 적절하게 행정 세력과 맞물리다 보니까 변화된 방식으로 시도하지 못하고 있는 부분들이 있다. 이런 게 아쉽다.” (가-4)

“ 종교 재단, 사단법인, 복지 법인 이런 곳에서 자기네들 사업을 영위하기 위해서 새롭게 생겨나는 사회문제들을 자기가 다 할 수 있다고 생각하는 건 오버다...정부의 제일 밑단에 있는 사회문제를 해결한답시고 일하던 사람들이 매너리즘에 빠져서 해결되는 게 없더라. 그래서 가장 큰 문제는 밑단에서 정부 돈을 받는 사람들이 본의 아니게 가장 사악한 집단으로 전략해버리는 것을 보고 있다. 돈에 맞춰서 일을 한다거나.” (가-2)

“ 최근에는 SIB가 우리에게 주요 경쟁 상대이다. 우리의 첫 모델이 (서울이나 경기도의) 지금 SIB보다 한두 단계 앞서 있는 모델인 것 같다...SIB 민간의 영역, 새로운 시장이 열리면서 새로운 경쟁자들도 오는데. 그 열매가 가능하면 본질로 들어가면 좋겠다는 생각이 많이 든다. 예를 들어 SIB가 이자 10%를 주는 것은 정말 말도 안 된다고 생각한다.” (가-1)



3. 지속가능성 위기 요인 ② - 정부 규제의 제약

혁신기업 창업 생태계에서 모범 사례로 꼽히고 있는 미국, 영국, 이스라엘의 경우 민간 파트너십과 협력관계에 기반하고 있는데 반해, 한국은 전적으로 정부에 의존하는 모델로 평가받고 있다(<정부 창업지원사업 효율화 방안> 2015). 정부 의존도가 큰 만큼 정부 규제가 혁신 생태계에 미치는 영향은 지대하다. “규제”는 “진흥”과 함께 정부가 시장에 개입하는 대표적인 수단인데 규제는 공익(시장경쟁에서 불공정성의 개선)의 실현을 위해 구성원들의 자유와 권리를 제한하는 기능을 하기 때문이다(최병선·최종원 2008).

모든 규제는 나름의 명분을 가지고 정당화되지만, 과도한 규제는 시장 및 민간 현장의 활력을 오히려 억제하는 “규제의 역설”을 낳는다. 즉 규제정책 수립과정과 집행과정에서 불공정하고 비효율적인 규제를 제 때에 개선해나가지 못하면 “규제의 양은 증가하지만 질은 좋아지지 않는” 문제를 낳게 된다(이종한 2013, 2014; 이주선 2007; 이혁우·김진국 2015; 현대경제연구원 2013). 민주화 이후 모든 정부는 규제개혁을 핵심 국정과제로 내세웠고, 박근혜 정부 역시 초기부터 기업투자와 일자리 창출을 저해하는 규제 개혁을 강조해왔다(유정주 외 2012).

FGI 조사 결과를 보면 대부분의 참가자들은 혁신 생태계 구축의 최대 장애요인으로 정부규제를 꼽고 있다. 정부의 규제개혁 노력이 현장에서는 체감되지 않음을 보여주는 대목이다. 주목할 점은 중앙정부 못지않게 지방정부에 대한 불만도 크다. 정부 규제에서 나타나는 문제를 정리하면 (1)소비자 보호를 명분으로 기존 기득권의 보호 (2)인·허가권을 무기로 한 정부관료 자신의 기득권 보호 (3)혁신관련 규제의 비효율성·비효과성 (4)미흡한 규제개혁을 꼽고 있다.

1) 기득권 보호 : “국가후견주의 활용, 기존 지배적 사업자 보호”

FGI에서는 제4차 산업혁명 논의 과정에서 국내외적으로 주목받고 있는 정보통신기술(ICT) 기반 핀테크 금융기업이나 우버, 콜버스와 같은 민간 운송 서비스에 대한 규제가 사실상 기존 대형은행 혹은 대부업체, 기존 택시회사들의 기득권을 보호하고, 불공정 경쟁을 방지하는 것으로 평가받고 있다. 정부규제의 가장 큰 폐해로는 소비자들의 이익을 대변하고 보호한다는 후견 역할을 명분으로 사실상 신규 스타트업이나 사회 서비스의 성장 가능성을 제도적으로 봉쇄하고 있다는 비판에 공감대가 크다.

가. 정부 규제의 명분 : 소비자 보호(국가후견주의)

“국가후견주의. 규제라는 것은 소비자 보호로 만들어진다. 정부가 책임을 져야 한다. 특정 사업자만 일을 하게 만든 다음에 이 사업자가 잘못해서 소비자가 피해를 보면 결국 정부가 책임을 져야 한다... 소비자 보호가 아니다. 기득권 보호다. 기존 대부업-금융위에서는 법에 신용카드로 할 수 있다고 하는데, 정보통신법에서는 허가를 받으라고 한다. 방통위가 관장하는 사이트에서는 '못 쓴다. 허가 안



났으니 과태료 대상이다.’ 이러더라. 금융위에서는 쓸 수 있는데, 게임 사이트에서는 못 쓴다. 이게 독점이었다. 독점으로 500억을 벌고...” (나-2)

나. 정부 규제의 효과 : 기득권 보호

“ 규제는 필요하기 때문에 만들어진다. 규제는 이유 없이 만들어지지 않는다. 기존 시장도 있다. 여기서 벌어먹고 사는 사람들이 있다. 집단이 있다. 이익집단. 새로운 뭔가가 들어 왔을 때. 규제가 없다. 힘 있는 사람들이 규제를 만들어 준다. (규제가) 없어져야 이들이 활동가능한데, 힘 있는 자들이 오히려 만든다... 규제를 풀어주는 것처럼 하면서 꼬리를 만들어. 못 들어온다. 입법부 애들이. 정치하는 사람들이 결국 표를 보면서 이익집단에 종속된다, (표면적으로) 규제는 풀린 것 같지만 실제 스타트업은 못 들어오게 된다.” (다-3)

“ 키코(Knock In Knock Out) 사태⁴⁾만 하더라도 소비자 보호가 아니다. 소비자 보호를 내세우면서 특정 계층을 보호한다. 공인인증서도 재발급 수수료 먹는 곳이 은퇴한 별들이 있는 곳이다.” (나-3)

<사례> 고사 직전의 금융 및 운송 혁신

“ 스타트업 규제 막혀있는 곳이 금융하고 운송. 금융 같은 경우는 P2P 이야기 했는데. 가장 잘 할 수 있는 나라가 우리나라다. 대부분 신용으로 대출하고 투자를 하는 건데. 이 사람의 개인 수입정보, 건강정보. 모든 국민의 건강정보와 수입정보가 디지털화되어있는 나라는 우리나라밖에 없다. 알고리즘을 만들어서 해 보면 돌리면 나온다. 우리나라가 그런 기회를 다 놓치고 있는데. 금융위원회가 기존에 있던 이해관계를 대변하는 역할을 하기 때문에 클라우드 펀딩도 막다가 P2P도 고사 직전이다. 운송은 사회적 약자, 공공의 영역이라서. 우버는 다른 문제이지만 소비자들이 니즈가 있는 운송에 관한 사업모델들도 다 고사 직전이다.” (다-2)

“ 여전히 많이 그러는데 초반에는 더 심했다. 법적으로는 우리(핀테크 업종)가 대부업으로 분류되어 있다 보니까. 법적으로는 우리를 정확하게 분류할 그제 없어서 대부업 기준을 기형적으로 변형해서 우리를 관리하다보니까... 금리 27%인 곳하고 우리는 10%인데 이걸 같게 보는 거다. 네이버 댓글 보면서 상처를 받는다.” (나-1)

“ 우버에 대해서는 기득권이 반발을 했다. 택시 조합이 가장 썩었는데, 이들은 자신들 의견을 관철시킬 수단이 있다. 돈도 있고 로비도 할 수 있고 무엇보다도 쪽수가 매우 많다. 사회적인 영향력, 데모하겠다, 그리고 총선 두 달 앞인 상황을 이용했다. 그런 거에 엄청나게 시달렸다. 그나마 여론이 우리에게 우호적이었는데, 이게 지속가능하지 않은 형태의 규제 완화. 대충 보면 규제완화 같아 보이지만 까보면 결국 기존 택시에 전권을 준다. 새로운 player는 시장에서 힘을 발휘할 수 없게 허수아비로 만드는 지속가능하지 않은...” (나-4)

2) 정부 기득권 보호 기제 : 정부의 인허가권

정부의 규제는 기존 시장의 기득권 조직의 이익을 대변할 뿐 아니라 동시에 정부 스스로의 관료권력과 기득권을 지키는 수단으로 인식되고 있다. 특히 사회적기업, 스

4) 환율변동 리스크 관리를 목적으로 한 파생금융상품을 의미.



타트업 벤처기업에 대한 “인증제”(사실상 허가권)가 사실상 (1)수직적 민관 관계(갑을 관계를 형성 (2)진입규제, 가격규제, 혁신기업 사업 규제(불공정 경쟁)⁵⁾ (3)정부 관료의 행정편의(재량)를 공고화하는 부작용을 낳고 있다.

“ 우리나라는 (인증 혹은 인가)의 필수 여건이 갖춰지면 나머지는 용인되는 게 심하다. 연대보증이 되면 VC는 다음 펀딩이 이뤄져야하기 때문이다. 그런데 정부는 다음에도 돈을 준다. 그러면 갑질해도 되는 그런 게 된다. 상하관계 분위기가 생겨버린다. 미국은 민간에서 경쟁이 일어나고 평가도 민간에서 이뤄지기 때문에 그런 게 없다.” (나-1)

“ 콜버스의 경우 요금이 자율신고제이다. 지자체에 신고만 하면 된다. 10인승 이상 차량만 있으면 된다. 그런데 서울시의 경우. 맨 처음 1인당 요금을 했다. 그런데 빨리 1인당으로 하라 해서 했다가 나중에 요금제로 가려고 했다. 두 명 타면 택시보다 비싸지는데 말이 안 되니까. 그래서 줄여야 된다고 신고를 했는데, 서울시에서 반력을 해버렸다. 사실상 허가제로 운영하고 있는 거다. 그리고 차종도 비싼 차 6,000만 원 이상으로. 스타렉스 이런 건 못하게 한다. ‘시민들이 안 좋아할 것 같다.’ 자기들 마음대로. 이렇게 할 수 있는 건 자기들이 허가권을 가지고 있어서다. 이런 핵심 규제로 공무원들이 자유를 누리는 것이다.” (나-4)

3) 비효과적·비효율적인 규제

정부의 규제 정책이 정책 취지를 살리는 방향으로 효과적으로 추진되고 있지 못하다는 지적이 제기되었다. 혁신가들은 정부규제가 효과를 거두지 못하는 이유로 크게 ① 정부의 재정지원의 경우 직접비, 간접비 한도 규정, 과도한 정산 및 입증 절차 ② 과도한 문서행정에 의존한 관리 체계 및 규제법정주의 등을 꼽고 있다.⁶⁾

가. 비효과성: 규제를 위한 규제

“ 공무원에게 물어보면 이게 왜 있지? 이런 경우도 있다...국회의원도 입법개수로 평가를 하니까 자랑하듯이 규제 만들어내는 대회를 하잖아요. 이런 체제로는 안 된다. 특정 기한이 지나면 없애는 걸로.” (나-2)

“ 규제 자체는 필요하다. 시장경제 논리를 완전히 무시하는 방식으로 규제가 가는 게 문제다. VC(벤처캐피탈)가 무언가를 잘못해도 도태되지 않는다. 잘못하는 게 분명히 있는데 보호하고만 있다. 일단 다 틀어막고. 예를 들어 정부 지원금 받는 것도, 너무 문턱을 낮추다 보니 도덕적 해이를 막기 위해 온갖 무언가가 들어간다. 연대보증처럼. 그래서 전반적인 퀄리티를 보면 1이 100개 모였는데 50밖에 안 된다. 밑 빠진 독에 물 붓기.” (나-1)

5) OECD의 경쟁제한성 체크리스트에서는 “진입경쟁”, “가격규제”, “사업활동 규제”를 전형적인 경쟁제한규제로 정의라고 그 개선을 주장하고 있다(이혁우·김진국 2015).

6) 규제법정주의는 규제의 법적근거를 중시하여 자의적인 법집행을 막는 것이 취지이나 현재와 같은 포지티브 규제 제도 하에서 법적으로 정비되지 않은 영역(신산업)이나 미등록 규제는 역으로 행정재량을 강화시키는 기제가 된다(최병선·이혁우 2014, 18).



나. 비효율성1: 경직적인 예산 집행구조

“ 제발 R&D할 때 항목 정해서 뭐 % 이것 좀 안했으면 좋겠다. 요즘 같으면 재료 없이 컴퓨터 한 대로 미친 듯이 연구할 수 있는데. 재료비 30% 무조건 써야 한다. 그러나 R&D 받으면 무조건 컴퓨터 사고, 복합기 같은 거 빌려 써도 되는데. 검수는 명쾌하게 하되, (예산집행) 과정은 자유롭게...” (다-3)

“ 말씀하신대로 연구비를 지출해야 하기 때문에 프린터를 사는 거다. 심지어는 프린터를 못 사게 되어 있다. 지금은 가능하다. 사람들이 다 아마 제가 알기로는 우리나라에서 팔리는 레이저 토너의 개수가 전 세계 생산량을 넘는다는 그런 농담도 있다.” (마-4)

“ 실제로 IBS(기초과학연구소)에 돈이 많이 갔다. 거기서 뭘 하나 봤더니 정말 거의 년에 한두 번 쓰지도 않을 만한 그런 기계, 고가의 기계를 사는 거다. 돈은 써야 되니까 인건비를 굉장히 저희 연구원들 수준에 비춰봤을 때는 말도 안 되게 세계 주고 뭐 이런 식의 일들이 벌어지고 있는 거다.” (마-1)

“돈을 많이 투자해서 장비를 사게 되니까 기본적으로 고가의 장비는 최첨단 장비다. 누구도 사주지 않는. 그럼 어느 것을 살까. 해외 1위 것을 살 것이다. 검증된걸. 그 사람들도 고가는 1년에 한두 개 파는 건데. 한국이 사주니까 즉, 영국의 망해가는 DAKS를 우리나라 한국 아주머니들이 살려준 것과 같은 현상이 생긴 거다. 3D프린터가 최근에 많이 얘기가 되지만 몇 년 전까지 신제품이 나올 때 한국도 같이 신제품이 나왔다. 한국 것DMS 안 사주는 거다.” (마-3)

다. 비효율성2: 문서중심 행정규제, 포지티브 규제

“ 문서지상주의, 법 지상주의라 본다. 기존에는 법에 의해 문서를 남기고 그것을 통해 하고. 이것이 지금 와서는 오히려 비효율과 문제를 낳고 있다. 문서로 남긴다는 건 나중에 네가 잘못했을 때 처벌을 하겠다는 건데, 법을 통해 규제하겠다는 거다. 수단은 그것 말고도 많으니.” (나-4)

4) 규제개혁의 실패

정부의 규제혁신 노력이 실질적인 혁신으로 이어지고 있지 못하다는 지적도 한 목소리로 나오고 있다. 불필요한 규제로 합의되고 심지어 대통령 지시로 규제 완화를 지시한 사항(공인인증서)조차 책임회피, 행정편의, 규제권력 유지라는 이해관계가 작동하면서 실질적인 개선이 이루어지지 못하고 있다.

한편, 정부가 마련한 규제개혁안이 정치권의 논란과정에서 무산되기도 한다. 2014년 정부는 부분적으로 적용되어온 “규제비용 총량제”, “네거티브 규제원칙”, “규제일몰제” 등의 법적 근거를 포함하여 총 27개 조문 중 16개 개정, 13개 조문 신설을 담은 《행정규제기본법 개정안》(정부안)을 제출하였지만, 논란 끝에 19대 국회 내 처리가 무산되었다. 반면 외형적으로는 여론에 밀려 불필요한 규제를 완화하는 조치를 취했지만, 세부적인 독소조항과 비현실적인 부가 규제를 통해 사실상 기존의 진입장벽을 유지하는 방식의 폐해를 지적하는 목소리도 높았다.



<표5> 2014년 행정규제기본법 개정안(정부안) 주요내용

| 조항 | 현행법 | 법 개정안(정부안) |
|------------|--|--|
| 규제비용 총량제 | 없음 (2014년도부터 시범사업) | 규제의 신설강화에 상응하는 부담만큼 기존 규제에서 의무적으로 개선해 유제 총량 유지(의원입법 규제 포함) |
| 네거티브 규제 | 없음 (부분적으로 시행, 예: 화장품 원료규제) | 원칙허용, 예외금지의 규제설계 원칙을 마련 |
| 규제 일몰제 | 존속기한 또는 재검토 기한 (5년) | 원칙적 존속기한(5년) 예외적 재검토기한(3년) 설정 의무 부과 |
| 규제등록 | 공포, 발령 후 30일내 등록 | 14일 내 등록, 미등록 규제는 개선청구 대상에 포함 |
| 규제개선 청구제 | 없음 (규제개선 신문고제 시행) | 규제개선 청구에 대해 소관부처 책임자가 설명으로 신속 답변 |
| 규제의 탄력적 적용 | 없음 | 융합분야 적용 규제에 대한 신속 답변 및 특정 규제에 대한 한시적 규제 유예 |
| 규제의 유연화 | 없음 | 소상공인, 중소기업에 대한 차등규제 적용 |
| 연관규제 통합관리 | 없음 | 덩어리규제 정비의견 제출 |
| 고시에 의한 규제 | 없음 | 사전 행정 예고 및 법제처 협의 의무화 |
| 지자체 규제 | 없음 | 규제 정비결과를 규제개혁위원회에 제출 |
| 적극행정면책 | 공무원의 행위에 고의 중과실 없는 경우 불리한 처분이나 대우를 받지 않음 | 기존 조항을 '직무감출 등에 의한 불리한 처분이나 부당한 대우를 받지 않는다'로 보완 |

출처: 국무조정실, 이혁우·김진국(2015, 10p에서 재인용)

가. 책임회피, 행정편의, 재량 유지

" 공인인증서는 참 안타까운 게 다 바꾸고 싶어 한다. '책임은 누가 질 거냐?'에 대해 아무도 답을 못하니까..." (나-2)

" 규제. 할 말이 많다. 지금 한국의 공무원들이 너무 무사안일주의, 보신주의, 새 것 하기 싫어하고, 눈치를 많이 보고, 일 만드는 것을 싫어한다. 이렇게 하면 되잖아요, 제안을 하니까 조례집을 뒤져서 안 되는 이유를 다 찾아낸다. 그런데 안 되는 이유들이 너무 하찮다. 부작용을 막기 위해 세부사항을 만들고 문제를 막기 위해 또 디테일이 붙는다. 사회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만들어진 이 조항들이 오히려 다른 문제를 훨씬 더 크게 만든다. 꼬리가 몸통을 흔드는 격이다." (나-4)

나. 표면적 규제개혁, 세부 독소조항 유지



“ 콜버스의 경우 영업시간, 지역 제한, 등등 확인해 보니 다 풀어준 것 같지만 아니다. 전세버스도 할 수 있다. 운수업자 사업자등록을 해야 한다. 차 몇 대 있어야 한다. 60억 있어야 한다.” (다-3)

“ 작년에 이게 가능한 사례 몇 가지 있다. 여론전을 했다. 액션을 했는데, 일부 규제를 풀고 방법을 찾았는데, (하지만) 스타트업이 이렇게 하면 안 된다. 운송과 핀테크, 콜버스도 풀어줬는데, (문제는) 콜버스의 경우 100M² 이상의 주차장을 가져야 한다. 서울에 땅이 있는 스타트업이 어디 있나” (다-2)

4. 지속가능성 위기 요인 ③ - 지원체계의 한계 : 비효율성·비효과성

사회적기업과 스타트업 등 사회혁신을 표방한 혁신기업들에 대한 지원체계는 크게 (1)정부지원체계와 민간지원체계 (2)금융/정책자금 지원과 비금융/정책 지원으로 구분해볼 수 있다. FGI에 참가한 혁신가들 중 재정 지원 규모가 상대적으로 작은 사회적기업 분야 혁신가들을 제외하면 대체로 정부에 의한 초기 금융/정책자금 지원의 경우 양적으로 충분하고, 실제 신생 스타트업 활성화에 긍정적인 역할을 하고 있다는 점은 대체로 공감하고 있다. 그러나 지원의 효율성과 효과성에 대해서는 부정적인 평가가 팽배해있다.

1) 지원의 비효율성·비효과성

스타트업 창업을 위한 정부의 지원 방안은 크게 (1)금융/자금 지원(창업자지원금 최대 5,000만원) (2)비금융/정책지원(회계, 법률 등 교육프로그램과 멘토링 프로그램, 창업단계별 맞춤형 특화 프로그램)으로 구분해볼 수 있다(<대한민국 글로벌 창업백서>, 2015).⁷⁾

이러한 정부 지원에 대해 금융지원과 정책지원 공히 비효율적이고, 비효과적이라는 인식이 공통적이다. 앞서 정부 규제에 대한 평가와 비슷하게 (1)지원된 재정 규모에 비해 체감 효과가 크게 떨어지고 (2)지원 기준/지원 대상의 편중 (3)지원 효과의 미비 (4)모니터링/평가체계(성공률 기준 R&D 사업의 평가체제) 미비로 인해 실제 사회혁신 조직 활성화라는 애초의 목표를 기준으로 보면 매우 비효율적이고, 비생산적이라고 평가하고 있다. 예산 지원에서는 대형 R&D사업에서 문제점이 집중적으로 나타나고 있다.

가. 체감되지 않는 금융·자금 지원

7) 정부의 창업 지원(정책 자금과 비정책 자금 영역)의 내용에 대해서는 본 보고서의 [부록] 정부 창업지원 체계를 참조할 것.



“창업하기 좋다는 게 그냥 시장에 돈이 많이 뿌려졌다는 얘기이지, 당지도 않는다... R&D 사업 없애야 한다고 생각하는 게 R&D 사업 뿌리면 뭐하냐. 모니터링 전혀 안 하고 있는데. 우리가 창조경제, 청년 사업을 위해 지원하고 있다고 미디어에 이야기만 하지 다 기업을 위해 해쳐 먹는다.”(나-3)

“돈을 안 쓰는 게 아니다. 엄청나게 돈을 쓴다. 체험마을을 만들 때 2000개가 되는데 2조를 썼다. 그런데 10년째 마을은 그 모양 그 꼴이다. 정책이 완전히 실패한 케이스이다... 그 돈을 붓고 있는데도 그 효과나 효율성이 전혀 나오지 않고 있는 것이다. 한국 사회가 대통령이 누가 되더라도 이 문제를 일거에 해소할 수는 방법은 없다고 본다. 이 문제 이 꼴로 만드는 것은 사실 여러 세력이 결탁해서 만들어진 것이다. 정치권, 의회에서 예산 만들 때부터 시작을 해서 말단 공무원의 아주 사소한 자기 비위가 다 합쳐져서 이 덩어리로 있다.” (가-3)

“돈으로 해결해야 되는 게 아니라 방법론적으로 되어야 하는데, 우리나라에서 확실히 느끼는 차이는 규제 당국하고 이야기를 하거나, 어떤 이슈 거리에 대해 기존에 존재하지 않던 사업이 새로 생겼을 때, 받아들이는 사회적인 반응이, 이것은 단순히 금융 당국뿐만 아니라 언론을 포함한 전반적 사회적 분위기가, 미국하고는 상당히 다르다.” (나-1)

나. 편중된 지원 기준/지원 후 모니터링의 부재

“재미있는 게, 처음에 활성화정책 발표되는 순간에 이미 창업이 되어 있는 상태로 3-5년차에 들어선 기업에게도 지원이 들어가야 하는데, 그게 아니라 사업자 등록을 내게 만드는 데에다가 돈을 썼다. 그러면서 거시적인 지표라고 할 수 있는 청년 실업률 낮추기에는 집중을 했는데, 정작 실제 가치가 만들어지는 것을 모니터링하고 지켜봤는가 하면 그렇지 못했다.” (나-3)

“단지 인증 받았기 때문에 이 기업이 프로그램으로 가야 한다는 얘기는, 그 시기에 먹힐지는 모르지만 오래 가지는 못한다고 본다. 왜냐하면 늘 반론에 부딪히게 되어있기 때문이다. 여기서 먹고 사나 저기서 먹고 사나 똑같은데, 왜 유독 저기에 해주냐, 이런 이야기가 나올 수 있다. 오히려 접근 자체가 처음부터 명확하게 갈 필요가 있다. 그 자체를 건너뛰고 그냥 눈에 보이는 것으로 간다 하면 나중에는 우리 스스로가 부딪히게 되어버릴 것이다.” (가-4)

“정작 R&D 예산이 필요한건 스타트업. 그 친구들은 혜택을 하나도 못 보는” (다-1)

다. R&D/멘토링 프로그램 효과 미미

“한국의 R&D는 800만원 USB와 4대강 물고기 두 단어로 정리할 수 있다.” (나-3)

“개발비로 상당히 많은 돈을 쓰거나 안 되면 몸뚱. 오히려 그런 분위기 때문에 프로그래밍, 코딩하는 스타트업은 많이 생기는데. 케미칼 메카닉은 돈이 많이 드니까. 안하게 된다. 너무 쓸림현상이 생기는데...” (나-4)

“저희는 R&D하고 있는데, R&D 성공율이 높은 나라가 우리나라다. 성공의 기준이 연구를 끝냈냐 라는 건. 그건 성공인데, 상용화 되지 않는다. 연구 끝난 것을 또 R&D 하는 것이 가능하다. 그게 실패하지는 않는다. 연구는 종료된다, R&D는 R&D를 위한 R&D. 연구를 위한 R&D로 기업에 실제로 상용화되지 않는다.” (다-3)



라. 멘토링 지원 효과 미약

“ 예를 들면 스타 사회적기업가 육성이라는 사회적기업진흥원 사업이 있었는데, 그게 뭐냐면 전문 멘토를 선정해주고, 한 달에 100만원인가 80만원인가를 지원하고. 아쇼카 것을 베낀 것까지는 좋은데, 저는 적극적으로 베껴야한다고 생각을 하는데. 돈은 턱없이 적고. 멘토 지원이 5번인가 만날 수 있게 하는, 그런 거다. 그런 스타 사회적기업가를 지금 매년 선정하고 있다. 가보면 허탈하다.” (라-3)

마. 평가체계의 문제점

“ 페이퍼가 두꺼워지는 이유는 자주 들여다 볼 시간이 없거나 들여다 볼 의사가 없기 때문에. 지원하는 쪽에서.. 행정은 말할 것도 없고. 그러니까 결국 페이퍼만 든든하면 되는 거다. 증거로는 남아있고. 그렇기 때문에 지원받는 입장에서 보면 그 과정 자체가 돈을 받기 위한 과정인거지 자기성장의 과정이나 전략적 의사결정에 필요한 경우에 도움을 받는다는 생각을 못하는 거다.” (라-4)

“ 미리 고민해야 하는 R&D 자금 매칭하는 엑스연구위원회. 거기 위원으로 들어가 있는데. 아이디어와 연구자를 따로 모집해서 매칭시켜 주는 형태이다. 매칭시켜 주면서 심사해서 얼마를 줄지 결정한다. 문제가 아이디어는 나오는데, 골라내는 심사위원들이 고정관념 박혀있다. 3년 안에 결과 나올까? 기존의 연구체계가 다 프로세스화 되어 있어서'다 실패 하겠는데?' 이렇게 나온다. 사실 성공률을 따질 이유는 없던 프로젝트인데. 거기서도 따진다. 결론은 단기적 R&D만 선정되었다.” (다-3)

2) 민간투자 - 모험하지 않는 모험자본, 스톡옵션 제한

사회혁신을 위한 혁신기업들에 대한 민간투자 체제를 살펴보면, 벤처자본(Venture Capital), 엔젤투자자(Angel Investment)들의 투자효과를 체감하기 어렵게 하는 최대 요인으로서 (1)정체된 민간투자 (2)위험감수 없는 모험투자(연대보증제/스톡옵션 제한) (3)상대적으로 취약한 소셜 투자의 문제가 지적되었다. 모험자본을 표방하면서 자본 회수의 불확실성을 해당 기업에 전가는 관행에 대한 비판이 강하게 제기되었다.

모험자본의 책임 전가는 주로 “연대보증제”와 계약과정에서 “스톡옵션 제한”을 통해 이루어지고 있음을 알 수 있으며 상대적으로 사회적 기업, 소셜 벤처 등 사회적 성격이 강한 기업에 대한 투자를 등한시하는 경향에서도 확인되고 있다. 그 결과 현장 혁신가들 중 상당수가 민간 벤처투자의 확대를 체감하지 못한다는 응답을 강화시키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가. 체감되지 않는 민간투자

“ 그런데 아직도 솔직히 풀리지 않는 숙제인데, 미국에 있을 때는 정부 차원에서 스타트업에 돈을 뿌리지는 않는다. 그래도 훨씬 더 우리나라보다 잘 돌아간다. 민간 차원에서의 투자 활성화가 가장 큰 차이 같다.” (나-1)



“ 창업자를 위한 시장보다 창업 지원하겠다는 사람들 시장이 많고, 지원하겠다는 시장에 돈이 더 들어가고 시장에 2조를 풀었다 하는데, 어디 갔는지 모르겠다. 투자를 했다고 발표되는 내용 보면 외국에서 돈 받아서 1000억대 투자한 건데, 300억 짜리 80개 어디에 투자한 건지 모르겠다. 2조라는 돈은 결국 창업과 관련 된 주변시장에 뿌려진 거다.” (나-3)

나. 모험 감수 없는 모험투자: 연대보증제

“ 연대보증이 아직도 살아있다. 한진해운이 남편 죽고 아내가 제대로 경영 안 하고 빌딩이나 사다가 망했는데, 거기에 공적 자금 천억 투자하는 거에 대해서는 아무 말도 없는데, 지네들이 만든 위기에 수천억을 때려 박았는데, 지가 스스로 창업해서 살길 찾아가는 창업가들의 1-2억 청산에 대해서는 엇 먹어라 한다.”(나-3)

“ 불공정 계약 하셨는데, 이런 계약서도 봤다. 사업이 망하면 창업자가 모든 돈을 다 물어낸다. 이건 뭐 대출하는 것도 아니고 말이 안 된다. 그건 투자가 아니다. 현재 창업계 VC계의 표준 계약서라고 주장하시는데, 나는 말이 안 된다고 그럴 거면 하지 말라고 뿌리치고 나왔는데, 이런 불신이 투자업계의 관행이라면 바로잡아야 한다고 생각한다. 그리고 ‘연대보증’ 문제는 무조건 해결해야 한다. 젊은이들이 가장 꺼려하는 것은 실패에 대한 우려이다. 연대보증은 그걸 더 키운다.” (나-4)

“ 벤처 캐피탈이라고 하는 게 모험자금이라는 이름으로 되어 있는데, 대한민국 VC가 과연 모험자금으로서 역할을 하는가를 물어봤을 때 이걸 놓고 보면 항상 facebook 투자 이야기들을 하지만, facebook은 민간 투자자들이 자신의 돈을 통해 risk를 태워서 facebook이 상장하는 것을 인내하고 기다려주었다. <소셜 네트워크> 영화 봐도 7-8년 기다려주는 게 나온다. 매출 한 건 못 내고 있는데도 기다려줬는데...일반 기업들이 연구와 개발을 한다 했을 때 4년이 걸린다 하면 4년을 기다려 줄 수 있는 인내 R&D를 해야 하는데, 기다려줄 수 있는 게 없다.” (나-3)

다. 위험회피 투자, 스톡옵션 제한

“ 기본 벤처기업인 경우 (스톡옵션) 20%까지 할 수 있다고 했는데 계약서에는 10%로 고정을 해놓고 자기네 투자 Value 이하로 주면 안 된다고 해놓았다. 이미 그 당시 벤처 캐피탈한테 투자를 받은 value가 20억 value였는데, 직원들에게 그 이하 가격으로는 줄 수 없었다. 주주가치가 희석되는 것이다. 스톡옵션을 10%로 한다면. 기존에서 10%가 떨어지는 상황이다. 그런데 스톡옵션이라는 게 고액연봉자들을 못 데려오니까 그걸로 보상을 해서, 혹은 기존 업계에 있는 사람을 스카웃해올 때 급여나 비전으로 설득이 안 된 케이스에 해주는 것이다. 스톡옵션으로 설득해서 데리고 와야 하는데, 이것을 행사가가 그렇게 높게 되면 그 사람 입장에서는 ‘이거 받아 봐야 의미 없는 거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 정도의 금액이었다.” (나-2)

라. 지원의 사각지대, 소셜 투자

“ 비영리는 기부 받으면 공제가 된다. 벤처는 투자하면 공제된다. 그런데 사회적기업은 이도저도 아니다. 기부를 받을 수도 없고 투자를 받을 수도 없는. 그게 이상하더라.” (참-1)

“ 대출도 받기 어렵고 이러니까, 사회적기업이나 소셜 벤처에 투자를 하거나 할 때 세금을 면제해준다든지 빌려줄 때 저금리로 해준다든지 그런 게 있으면 좋을 것 같다.”(가-1)



3) 수직적 정부-중간지원조직-민간 생태계

사회혁신 생태계 구축에서 협력적 민관 지원체계가 구축되고 있지 못한 것도 큰 문제로 인식되고 있다. 소위 갑을관계로 표현되는 수직적 민관관계는 민간의 혁신역량을 키우고 정부 지원 효과를 활성화하는 데 핵심 장애와 최대 병폐 요인으로 지적되어 왔다(장용석 외 2015, 131-133).

FGI 조사 결과에 따르면 정부 스스로 민관관계를 수평적이고 협력적인 관계로 이해하기 보다는 정부 지원을 받는 민간 영역을 수직적 갑을관계로 간주하고 있다는 비판이 강도 높게 지적되었다. 심지어 정부와 민간 영역을 연계하는 중간지원조직이 정부를 대신에 “갑질” 행태를 보이고 있다고 한다. 실제 혁신경험이 부족한 신생 조직들이 정부-중간지원조직-혁신기업간의 원활한 소통과 역량강화를 인큐베이팅 해주는 제도적 환경이 부족하다고 지적한다. 정부 주도로 민관협력을 도모하기 위한 네트워킹과 커뮤니케이션 시도들이 부분적으로 이루어지고는 있지만, 실효를 거두지 못하고 있다는 것이다.

가. 갑을관계

“제가 공무원을 보며 놀란 게 뭐냐면, GDP는 기업이 만들잖아요. 그런데 공무원들은 이 사람들을 아래 취급 하거든요.” (나-3)

“한국에서는 자본가가 아니라 공무원이 기업가를 착취하는 구조예요.” (나-4)

“얼마 전에 서울시의 어떤 팀장이랑 이야기 하는데 사회적기업들은 보상이 없어도 일하는 조직으로 알고 있으니까. 예산은 부족하지만 그냥 해주면 안 되겠냐. 이런 이야기를 아주 자연스럽게 편하게 하더라. 결국은 뭐냐면 공유나 협력이나 지속가능성을 지원할 수 있는 정부지원이 되어야 하는데.” (라-4)

나. 중간 지원조직의 인식과 역량

“사회복지운동모금회에는 10급 공무원 내지는 11급 공무원이어야 한다고 생각한다. 대놓고 왜 너희가 일을 하는데, 왜 이렇게 돈이 많이 들어가야 하니? 이런 식으로 이야기를 하니깐.” (가-1)

“정부쪽은 저는 중간지원조직으로 선정하는 곳들의 가장 큰 문제라고 봤던 게 그 조직들이 창업을 해 본 경험이 없다. 함께 일하는 재단, 연대은행 등의 담당자들이 육성사업 집행들을 하는데, 이미 들어가 있는 돈도 제대로 집행을 할 수 없는 구조로 짜놔기 때문에 성과가 나오기 굉장히 어려운 구조로 짜여있어서, 창업 쪽으로 봤을 때 관에서 지원시스템 설계는 굉장히 문제가 있는 것 같고. 반대로 보면 민간에서 이런 접근들을 많이 하느냐, 라고 봤을 때, 일단 민간의 머니의 다양성 자체가 너무 떨어진다.” (라-2)

다. 일방적인 민관, 민민 커뮤니케이션

“작년 8월쯤 서대문 청년정책 위원들, 활동가들 중심으로 모였다. 발대식도 하고



위임장도 받고 했는데, 그 이후 한 번도 안 모였다. 우리가 운영하는 카페가 서대문구 첫 번째 일자리 카페로 지정이 돼서, 서대문구 일자리 경제와 협업을 그나마 밀접하게 한다고 했다. 그런데 그게 청년 일자리 문제에 어떠한 도움을 주지 못했다. 카페마다 엄청 큰 TV를 설치하고 인터넷을 깔고 되게 많은 인력과 자원이 투입되고, 서대문구에서도 몇 명이 카페를 이용했는지 피드백을 받으려 했는데, 정작 청년은 아무도 이용을 안 하고, 이런 카페를 해달라고 한 적도 없다. 정책위원회를 만들어 놓고 아무것도 묻지 않은 채 자기들끼리 정말로 보여주기 위한 판을 만들려 하니 카페는 모양새도 이상해지고 그렇게 됐다.” (가-5)

“ 투자한 이후에 지원 사항이 별로 없다. 그 회사가 가장 오래된 벤처 캐피탈 중 하나임에도 불구하고 특별히 비즈니스 적으로 연결한다거나 어디를 파트너가 될 만한 곳을 소개해준다거나 그런 게 별로 없다. 왜 없냐고 물어봤더니 사실 심사의 역량에 많이 달려있지 시스템적으로 자기네 투자회사들끼리 두 달에 한 번 씩 모여서 의견 교환을 하든지 재 교류를 할 수 있게 열어준다거나 스킨십을 통해 같은 프로그램을 고민해본다든지 이런 내용들이 없다.” (나-2)

5. 지속가능성 위기 요인 ④ - 지체된 혁신문화 : 혁신적 사고 부재, 반 기업 문화

FGI 참여 혁신가들은 사회혁신 생태계의 성숙을 가로막는 환경적 요인으로서 한국 사회에 확산되어 있는 (1)사회혁신에 대한 왜곡된 인식과 (2)혁신에 비우호적인 사회 문화적 풍토에 대한 우려의 목소리가 높다. 구체적인 내용을 정리하면 다음과 같다.

1) 혁신기업에 대한 반감과 몰이해

사회혁신가들은 (1)사회혁신 기업에 대한 반감과 몰이해 (2)실패 비용에 대한 과도한 오해가 사회혁신가 및 혁신기업에 대한 부정적인 인식을 키우고 있다고 꼽았다. 사회혁신기업의 성공을 “정경유착”의 산물로 이해하거나 사회혁신가들을 탐욕스러운 잠재적 범죄 집단으로 이해하는 몰이해가 큰 반감으로 이어지고 있다는 것이다. 이와 함께 스타트업 창업이 실패할 경우 재기가 불가능할 정도의 심각한 타격을 받는다는 잘못된 인식은 창업자의 가족, 지인들부터 창업을 부정적으로 바라보게 하는 주된 요인이라고 목소리를 모았다. 다만 과거에 비해 일부 개선되었다는 지적도 있었다.

가. 반기업 정서, “대기업이나 스타트업이나”

“ 얼마 전 KBS에서 클라우드 펀딩 소재로 한 드라마가 있었는데 주요 플롯이 사기였다. 대학생들이 천사펀드 만들어서 동급생들과 선배들이 돈 넣고, 후배 여학생을 돈을 빌미로 성폭행하는 내용이었다. 창업에 대해 얼마나 안 좋은 인식을 심어놓겠나...한국사회의 반기업 정서, 사실 이것은 대기업 전횡 때문에 발생한 것이다. 정경유착으로 쉽게 빠져나가니까 국민들에게 미움을 산 건데, 국민들은 대기업과 스타트업을 나누지 않고 기업으로 그냥 통쳐 버린다. 정치권에서도 이런 프레임을 이용한다. 여야 할 것 없이 다. 대기업이 저지른 도덕적 해이로 인해 기



업을 위해 좋은 거 하자 할 때 국민들은 '대기업을 또 도와줘?' 이른다. 그런 인식을 야당이 더 키운다." (나-4)

" 정치권의 기업에 대한 인식과 관련해 인수에 대해. 정치권이 얼마나 무지하냐면 박원순 시장이 콜버스 논란이 되었을 때 '인간은 탐욕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 탐욕을 조절해야 합니다.' 이런 투로 말했다. 자기가 공유 시장 키우겠다 하면서 대표적 공유시장에 대해 '탐욕' 운운한다. 이게 야권 정치인의 기본적인 인식이다. 현 대선주자도 별 다른 차이가 없다." (나-4)

" 문화적인 측면에서, 주변 친구들은 다 반절이 로스쿨을 가고 반절이 고시를 준비하고 있다. 그래서 창업이나 새로운 재밌는 신기한 이야기들에 대해 전혀 관심이 없다. 조소어린 시각, 이런 게 대부분이었다. 그런 게 현재 젊은이들의 표상이다. 부모님은 왜 기자 생활 잘 하다가 굳이 고생을 사서 하느냐? 그런 사회 분위기가 있다. 조금 문화적인 개선이 필요하다고 생각하는 게, 이게 잘 몰라서 그렇다. 그리고 risk 지는 것에 대해 사회가 보수적인 건데, 이전에 벤처 붐이 꺼지면서 수많은 실패자들이 나왔고, 이들이 어떤 삶을 살았고 알기 때문에 이미지가 추락한 게 있다." (나-4)

나. "스타트업 창업=패가망신" 등식

" 위인전에 스티브잡스가 들어가 있다 그런데, 부모들이 너도 이 사람처럼 되라는 말은 안 한다." (다-2)

" 창업의 적은 엄마. 왜냐면 하지 말라고 하니까. 고속성장의 과정에서 그냥 직장만 다녀도 년 20%성장을 했던 세대인 부모. '왜 개 고생하니' 무조건 못하게 한다." (다-3)

" 예전에 창업을 한다 했을 때 주변에서 보는 시선이 예전에 비해 확실히 달라졌다. 어떨 때 가장 느끼냐면, 리크루팅을 하기 위해 사람 채용을 위해 돌아다니다 보면 요새는 좋은 학교를 나오시거나 안정적인 회사 다니는 사람도 스타트업에 올 때 예전보다 훨씬 수월한 분위기인 것 같다. 예전엔 듣도 보도 못한 곳에 왜 가냐? 이런 이미지가 있었는데 요새는 새로운 것을 받아들이는 속도라든가 이런 게 많이 달라졌다고 느낀다...쿠팡이나 티몬, 배달의 민족이나 이런 케이스를 보면서, 이게 단순히 중소기업으로 남는 게 아니라 어느 정도 클 수 있는 시장을 새로 만들 수 있다는 걸 봤기 때문에 젊은 사람들 인식이 바뀐 것 같다." (나-1)

2) 사회혁신 부작용에 대한 잘못된 인식 : "인터넷 쓴다고 A4 안 쓰냐"

FGI에서는 사회혁신기업들에 대한 사회전반에 확산된 잘못된 인식으로 사회혁신 조직들의 사회적 임팩트에 대한 왜곡된 평가를 낳고 있다고 보고 있다. 사회혁신 조직들의 부상이 기존 사업자들의 일자리를 위협할 것이며, 사회혁신 기업에 대한 지원은 기존 산업에 대한 역차별이자 모럴 해저드를 유발할 것이라는 인식이 대표적이다. 이러한 인식은 사회혁신 조직이 창출하는 사회적 임팩트를 과소평가하고 있다고 지적한다.



“ 인터넷 쓰면 A4 안 쓴다는 논리와 같다. 오히려 더 많이 쓰지 않나... 절대 그런 것을 고민해가지고 세상의 발전을 막을 수도 막아서도 안된다. 마차에서 자동차로 넘어갈 때도 그런 문제가 있었을 텐데 결국 발전해서 오지 않았다. 이 부분은 논쟁을 해서 해결할 것이 아니라 효율적인 사회구조를 만들어서 해결해야 한다.” (나-4)

“ 기존 시장 죽이면서 기존 시장의 매출을 줄이는 건 맞다...일자리 창출과 관련해서 이야기를 할 때 무슨 생각이 드냐면, 페이스북이나 유튜브가 일자리를 창출했다고 물어보면 전문가들은 지가 보는 것만 보는구나 생각이 든다. 새로운 영상 포맷을 찍는 애들에게 기회가 생겼고, 자기 주장을 하면서 돈을 버는 사람들이 생겼다. 고발 뉴스 이런 게 존재할 수 있는 것도 유튜브라는 플랫폼이 생겨서 그런 것이다. 직접 고용은 없지만 관련한 플랫폼에서 니즈가 있는 사업자들이 뛰어들기 시작한 거다. 페이스북 광고 설정을 잘 하는 전문가들이 생기고 카드뉴스 만드는 사람들이 생긴 거다. 지표만으로 보면 '40명 채용했는데,' 하는데 어불성설이다.” (나-3)

3) 혁신을 억제하는 문화 - “권위적 유교 문화”, “명성·추종효과”, “비밀주의”

한편, 한국사회에서 사회혁신 생태계를 억제하는 요인으로 (1)서열과 권위를 우선하는 유교문화 (2)학력주의와 허명(虛名)을 추종하는 문화 (3)비밀주의 문화를 꼽고 있다. 유교적 전통에 기반을 둔 장유유서의 문화가 “생산적이고 수평적인 논쟁”을 어렵게 하고 실력보다 허명과 자격이 우선하는 부작용을 낳고 있다는 지적이다. “명성 효과(reputation effect)”는 당연히 인정해야 하지만, 허명을 쫓는 문화로 인해 현장 경험과 실적이 무시되어 실질적인 멘토링과 인큐베이팅을 어렵게 하고 있다고 진단한다. 또한 혁신기업 활동의 전반에 만연해있는 비밀주의는 사회혁신 기업에 대한 부정적인 인식과 편견을 강화시켜온 요인으로 꼽힌다.

가. 유교문화

“ 저는 일단 유교 갖다 버리라고 하고 싶다. 제일 어이없는 게 장유유서 때문에 못 가지는 창업자들이 많다. 저는 중학교 때문에 돈을 벌었으니 15년 넘지 않나. 그 동안 다양한 경험을 하면서 쌓은 게 있을 텐데, 선배라고 찾아왔으면 리스펙트(respect)를 가지고 물어보고 찾아야 하는데, 갑자기 태세전환을 해서 나이 가지고 갑질을 한다. 우리나라 변화가 안 일어나는 상당한 이유가 된다고 본다. 정말 많은 디베이트(debate)와 갈등을 겪어야 하는데,” (나-3)

“ 문화적인 측면에서 한국은 상대방 의견에 대해 말로 공격하는 문화가 너무 부족하다. 자기보다 윗사람이라 생각하면 피한다. 아니면 맨날 좋은 게 좋은 거지 이렇게 통 치거나.” (나-4)

나. 명성추종/학력주의

“ 돈, 공간의 문제가 되었으면. 그럴 수 있는 사람을 많이 만들어야 한다. 그 중에 멘토는 태반이 교수, 사회적 인지도가 있는 사람, 창업의 경험자는 정말 적다.



10%이지 않을까? 집중 육성해야 된다.” (다-2)

“ 아까 ‘삼성’이 만들었다, 이런 건 당연한 거고 그게 브랜드라고 본다. 스타트업이 그래서 불리한 건 하지만, 오히려 그래서 새로운 브랜드를 창출할 수 있는 이점이 되기도 한다.” (나-4)

“ 우리나라는 지금의 대학구조는 창업을 가르치려가는데도 학위가 필요하다. 저는 변호사 자격증을 가지고 뚫었다...지금의 학교시스템은 창업과의 지금의 상황과 맞지 않다. 새로운 시스템을 짜야 한다.” (다-4)

다. 비밀주의

“ 앞 선배들은 안 알려준다. 비밀주의 문화가 문제다. 누구의 성공은 뭔가 야로가 있다, 누가 돈 많이 버는 행동은 음지에서 뭔가 짜고 친 결과로 보는 분위기가 만연해 있다. 지금 문화가 많이 바뀐 것은 과정이 드러나게 된 것 때문. 사례발표, 네트워크, 커뮤니티 형성해서 장을 형성하는 것이 나의 역할인데. 이제는 1억의 투자도 보도자료로 낸다. 그 동안 성공의 과정을 본적이 없었다. 공유되고 망하는 것도 덜 부끄러워하는 분위기이다. 그러나 여전히 우리들의 문화 속에만 있고 일반화되지는 않았다. 전반적 인식변화까지는 덜 왔다. 창업한다고 죽지는 않다는 인식 전환까지는 아직이다. 창업 스타트업 종사자 인식. 주변의 가족의 인식. 스타트업과 같이 일하는 대기업과의 대화방식 오픈해야...” (다-2)

6. 지속가능성 위기 요인 ⑤ - 혁신가의 부족, 혁신가 육성체계 미비

FGI에 참석한 혁신가들은 한국사회 혁신 생태계가 한 단계 성숙하고 발전하기 위해서는 “혁신역량”의 강화의 중요성을 이구동성으로 강조한다. 혁신가들은 혁신역량의 축적 및 육성을 어렵게 하는 요인으로 크게 (1)열악한 처우로 인한 인적자원 확보의 어려움 (2)혁신가 육성 프로그램의 문제점을 공통적으로 지적한다.

1) 혁신가의 부족

혁신가들의 재생산과 육성을 어렵게 하는 장애 요인으로서는 무엇보다 창업 이후 생존단계에 있는 혁신 기업들의 열악한 처우가 중요하게 지적되고 있다. 유능한 인재의 영입과 유지를 어렵게 하는 최대 난관이라는 것이다.

가. 신념의 소진, 열악한 보상체계

“ 처음에는 신념을 가지고 들어온다. 그런데 급여가 낮으면 현실의 문제에 부딪힌다. 어느 정도 급여를 올려서 현실화시켜야 한다. 그런데 현실화시킬 정도로 기업 기반이 안 되어 있다. 그러면 이 친구들은 떠난다. 그러면 이게 조직에게는 악순환이 된다. 그 친구들에게 필요한 돈이 얼마나? 대단히 큰돈도 아니다. 그 돈만 적절히 보장해줄 수 있으면 이 친구들은 여기서 굉장히 행복하게 일할 수 있다. 그런 자원을 다 놓치는 게 그놈의 돈 때문인데, 이 돈을 구하는 게 현재 은행이



돌아가는 논리 회로 안에서는 소기업이나 미션을 기반으로 해서 어렵게 쥐어 짜 내면서 가는 이런 비즈니스는 눈에 들어가지 않는다.” (가-3)

“ 신념 있지만 말이 한 두 번이지 흔들린다. 무엇을 개런티 받나? 창업의 능력을 키운다고 이야기하지만 스타트업 세계에서 모른다. 돈 안 되는 사업하면 생존이 목표인데. 공통창업자는 서바이벌 할 수 있지만, 이 후에 우리의 결실을 어떻게 나눌지 잘 모른다.” (다-4)

2) 혁신가 육성체계의 문제점

특히 현재 진행되고 있는 정부나 대기업의 지원을 받아 진행되는 혁신가 교육 및 멘토링 프로그램들이 다양한 프로그램들이 진행되고 있다. 정부안만 보더라도 크게 <창업교육>과 <창업 멘토링·컨설팅> 프로그램들이 여기에 해당된다. 실제로 아래 표에서 살펴볼 수 있듯이 2017년 계획 중인 정부 창업 교육 및 멘토링, 컨설팅 프로그램만 해도 다양하게 진행되고 있다. 그러나 현장에서의 반응은 냉담하다. 문제는 혁신 경험을 갖지 못한 멘토(‘좀비 멘토’)들이 현실 트렌드에 맞지 않는 콘텐츠를 유포하거나 사회혁신기업에 대한 왜곡된 인식을 야기하고 있다는 것이다.

<표6> 2017년 정부 창업지원 계획 중 창업교육, 혁신가 육성 및 인큐베이팅 프로그램

| 사업명 | 모집구분 | | 예산 (억원) | 소관 부처 |
|-------------------------------------|--|-------------------------------|------------|----------|
| | 지원대상 | 주관(수행)기관 | | |
| .창업교육지원 | | | | |
| .청소년 비즈쿨 | 초·중·고등학생 등 청소년 | 초·중·고교 등 | 76.6 | 중기청 |
| .창업아카데미 | 대학생, 예비 및 3년 미만 기창업자 | 대학, 연구·공공·민간기관 | 20.8 | 중기청 |
| .창업대학원 | 창업학 석사과정 희망자 | 창업대학원 | 7.2 | 중기청 |
| .장애인 맞춤형 창업교육 | 장애인 예비창업자 및 장애인지업 | (재)장애인지업 종합지원센터 | 9.7 | 중기청 |
| .시니어기술창업지원 | 만 40세 이상 (예비)창업자 | 지자체 및 대학 | 47.4 | 중기청 |
| .스마트창업작터 | 예비창업자 및 3년 이내 창업기업 | 대학 등 전문기관 | 98.4 | 중기청 |
| .대학창업교육 체계 구축 | 대학생 및 대학 교수 등 대학 관계자 | 한국연구재단 한국청년기업가 정신재단, 대학 | 15.5 | 교육부 |
| .스포츠산업창업지원 | 스포츠산업 예비창업자 | 대학, 선정된 연구·공공·민간기관 | 26. 5 | 문체부 |
| | 스포츠산업 3년 미만 초기 창업기업 | 선정된 창업엑셀러레이터 | | 문체부 |
| .창업 멘토링/컨설팅 | | | | |
| .선진글로벌 교육 제공(K-Global 기업가정신 및 | ICT 기반 우수 유망 스타트업, 중소·중견 벤처기업 대표(내국인) 해외 진출 가능성이 높은 국내 | 정보통신산업진흥 원 | 7 | 미래부 |



| 사업명 | 모집구분 | | 예산 (억원) | 소관 부처 |
|---|--|--------------------|------------|----------|
| | 지원대상 | 주관(수행)기관 | | |
| 인큐베이팅 인턴십) | 우수 스타트업 | | | |
| .벤처1세대 멘토링 프로그램 운영 (K-Global 창업멘토링) | ICT기반 창업초기·재도전기업, 대학창업동아리 | (재)한국청년기업가 정신재단 | 29.9 | 미래부 |
| .6개월 챌린지 플랫폼 사업 | 아이디어의 사업화를 준비하는 예비창업자 및 신청일 기준 창업 1년 이내 기업 | 연구개발특구진흥 재단 | 112.5 | 미래부 |
| .엑셀러레이터 연계지원 사업 | 혁신센터를 통해 검증된 창업기업, '6개월챌린지플랫폼' 졸업기업 등 | 연구개발특구진흥 재단 | 91 | 미래부 |
| .우주기술 기반 벤처창업 지원 및 기업역량 강화 (STAR-Exploration)사업 | 우주기술을 활용한 창업/신사업 창출에 관심있는 예비창업자 및 기업 | 한국항공우주연구 원 | 2.5 | 미래부 |
| .농식품 크라우드펀딩 컨설팅 비용지원 | 창업 7년 이내 농식품 기업 | 농업정책 보험금융원 | 1.2 | 농식품부 |
| .농촌현장 창업보육 | 창업 5년 미만 농식품 기업 | 농업기술 실용화재단 | 4.8 | 농식품부 |
| .IP 디딤돌 프로그램 | 예비창업자 | - | 26 | 특허청 |

출처: 중소기업청 공고 제2016-410호, 미래창조과학부 공고 제2016-578호, (2016.12.30.)중 발췌

가. 정부주도 창업교육의 비 효과성

“ 정부에서 하는 건. 창업교육은 부정적이다. 창업하는 친구들한테 시행착오 비용
을 줄여주는 것은 교육만으로 절대 안 된다. 직접 부딪혀봐야 하는. 줄이는 역할
은 가이드들이 한다. 인큐베이팅 엑셀러레이팅 하는 기관들은 있는데. 입주시키
고. 교육시켜주고. 네트워킹 파티. 이벤트 하는데. 정작 스타트업을 1:1로 붙어서
할 수 있는 전문가들이 부족하다. 대기업 임원 매칭. 효과적이지 않다...” (다-2)

“ 선배, 후배가 주고받는 교육이 되어야 하는데, 현업에 있지도 않은 사람들이 멘
토니 전문가랍시고 와서 90년대 이야기를 하고 있다. 전체 환경 중에 아무것도
건드리지 말았으면 좋겠다고 생각한다. 교육 사업을 하는 창업자가 나와야지, 관
에서 나오면 안 된다.” (나-3)

“ 그쪽이 목표로 하는 것과 우리가 만들어내고자 하는 것 사이에 상충이 많고 괴
리가 심했다. 민간과 협력 없이 만든 계획서는 검토도 안 하겠다 해서 소통을 해
보자고 창구는 만들어놓았지만 소통을 해본 적이 없어서 적극적으로 활용을 잘
못하는 것 같다. 그쪽도 그렇겠지만 우리 입장에서 많이 낯설었다. 또 막상 물
어보면 이야기가 잘 안 나오기도 하고. 그래서 시간을 가지고 채널이 공고해져서
활성화를 시켜야 한다.”(가-5)

나. Learning by Doing 시스템의 미비

“ 좀비 멘토, 선무당은 문제인데, 굳이 콘텐츠를 만드는 게 아니라, 초등학교 때부
터 네가 어떤 서비스를 만들어봐! 해서 돈을 벌어드는 그런 것을 해야 한다고 생
각한다. 직업교육이 북유럽 쪽에서는 이미 도제식으로 하고 있다.” (나-4)



“수준 높은 이론가들이 나오는 것보다 더 중요한 것은 수준 높은 행동가, 수준 높은 실천가들이 나오는 거다. 세계는 지식인들이 생각하는 것보다 훨씬 더 복잡하고 미묘하다. 그래서 내공 있는 실천가와 행동가들이 더욱 중요하다. 그런 사람들이 지식인들에게 휘둘리지 않으면서 미래지향적으로 활동할 수 있기 때문이다.” (라-3)

다. “좀비 멘토”, “선무당”

“저는 VC분들과 여러 기회가 있어서 인터뷰도 하고 이야기를 해보면, 그렇게 전문성이 있다는 느낌을 저는 사실은 못 받겠다... 창업 경험을 해보거나 아니면 그것들을 상쇄할 수 있는 어떤 형태가 있는 사람이 필요한데, 그런 사람 별로 없다는 것이다.” (라-4)

“돈 안 줘도 되니까 되도 않는 전문가들 활동 못하게 하고, 창업자들에 대한 인식 개선을 시켜줬으면 좋겠다. 지금은 잠재적 범죄자인 양 취급을 한다.” (나-3)

“갑자기 하려하면 준비된 사람은 없다. 당연히 이런 부작용은 있다. SK에서 작년 창업수업들을 한 학교에 3억 이상을 주면서 돈을 주면서 만들게 했다. 어쨌든 사업은 따라 하는 상황 전국 10개 이상. 준비 안 된 사람들이 새로운 잡으로... 본질은 모르면서 하는 과도기적 현상인데. 없던 것을 만드는 것은 이런 상황이 있을 수 있다. 다만 이것이 교통정리가 되어야 할 것 같고.” (다-4)



Ⅲ 혁신 생태계 2.0을 위한 정책 제언

이 장에서는 앞에서 정리한 혁신 생태계의 문제점에 대한 해법으로 제기된 정책적 대안들 중 혁신가들의 공감대가 모인 내용을 정리한다. 편의상 사회혁신 의제의 등장부터 현재까지의 과정을 “사회혁신 1단계(혁신 생태계 1.0)”로 정의하고 앞으로 한 단계 나아가야 할 단계를 “사회혁신 2단계(혁신 생태계 2.0)”으로 명명한다.

1. 혁신 생태계 2.0의 방향 - 정부 주도 생태계에서 협력·분산·자율 생태계로

FGI에 참여한 혁신가들의 논의를 집약해보면 혁신 생태계 2.0의 최대 과제는 “정부 주도형 생태계”를 “자율·분산·협력의 생태계”로 전환하는 것으로 이해하고 있다.

1) 혁신 생태계2.0 - 정부 주도에서 민관협력 및 분산·자율·코웍 시스템

한국사회에서 정부 주도로 사회혁신 기업의 준비-창업-성장 단계별로 지원하며 규제했던 것인 혁신 생태계 1.0의 특징이었다. 이제 사회혁신을 주도하는 사회적기업 혹은 혁신 스타트업들의 자율·분산·하이브리드적 협력과 혁신경쟁을 통해 사회혁신을 실질적으로 이끌어 가는 2.0 단계로 나아가야 한다는 데 의견이 모아지고 있다.

가. 정부 주도모델에서 탈피

“국가가 그렇게 삽질을 하면서 엄청나게 비난하는 국가의 삽질이 일부는 작용한 것이다. 그러나 2단계는 완전히 다른 메커니즘인 거 같다. 진짜 창업할 사람을 뽑아내는 것과 외연을 넓히는 작업은 다르다.” (다-4)

“정부가 삽질을 했고, 이제는 알겠다 라는 분들이 나오고 있다. 정부의 삽질은 줄이고, 효율적이게 제대로 하는 사람들로 교체를 해야 하는 시기가 온 거라고 생각된다. 10년이 다 되어 가고 있다. 계속 정부가 삽질만 해주길 원하면, 발전이 안 된다. 창업을 지원하는 자들만 지원받는 상황에 지나지 않다. 창업자가 지원받으려면 민간의 열정 있는 분들이 그 자리를 채워져야 한다...민간으로 지원해야 하는 형태로 바뀌어야 하는데, 관에서 끌고 가는 시스템은 바뀌어야 한다.” (다-3)

나. 자율·하이브리드·코웍 모델로

“국가가 100%를 지원하는 구조의 재단은 기본적으로 운영의 자율성이 보장될 수 없다.” (라-4)

“목표를 위해서 다양한 형태의 조직들이 협업할 수 있는, 하이브리드 방식으로



협업할 수 있는 판이 필요하다.” (라-3)

“기본적으로 대기업이 잘 할 수 있는 것과 사회적 기업, 스타트업이 잘 할 수 있는 게 각자 다 다른 것 같다. 우리가 잘 할 수 있는 분야는 기업이나 정부가 효율성을 따졌을 때 잘 하기 어려운 부분을 더 잘할 수 있다고 생각한다. 그 부분에 대해서는 당연히 어떠한 형태로든 지원이 들어가면 좋겠다고 생각을 한다.” (가-1)

“하나하나 업계가 가진 문제들에 대해 합의를 만들어 내고, 사회적으로 가장 필요한 것부터 하나씩. 정부가 규제를 하는 게 아니라 합의들을 하나하나 늘려가는 방식이 가능하지 않을까 한다.” (가-3)

2. 정책제언 ① - 정부 규제의 혁신

1) 규제의 방향 - SMART Regulation, 소비자 보호 우선에서 소비자 선택권 보장으로

세계은행 그룹은 매년 전세계 180~190여개 국가의 기업 활동에 대한 정부 규제 현황을 모니터링한 결과를 Doing Business Report 시리즈로 발간하고 있다. 보고서는 정부의 바람직한 기업 규제 방향을 “SMART Business Regulations: Streamlined, Meaningful, Adaptable, Relevant, and Transparent”로 제시한다. 기업의 규제는 교통 신호등처럼 시장의 작동에 원활한 흐름과 시장에서 거래 활성화를 촉진하는 기능에 집중해야 한다는 것이다. 스마트 규제는 환경 변화에 맞게 규제 목적을 실현할 수 있어야 하며, 적절하고 투명한 방식으로 작동해야 한다는 점을 강조하고 있다. 즉 기업에 대한 규제가 기업의 운영 방향이나 방법은 자율적으로 맡기고, 이들의 원활한 운영을 보장하는 방식으로 작동해야 한다는 것이다(World Bank 2013; 2017).

실제로 혁신가들이 주장하는 규제의 방향도 세계은행의 권고와 일맥상통한 내용을 담고 있다. 우선, 정부가 기존 기득권 사업자나 중간지원 조직의 독점을 보장하고 “혁신 경쟁”을 억제하는 논리로서 활용해 온 “소비자 보호주의” 대신 “소비자 선택권 확대”의 관점으로 속도감 있게 전환하자고 제안한다. 특히 불필요한 규제의 과감한 축소와 실질적인 규제 효과를 위해 현재 부분적으로 추진되고 있는 “포지티브 규제”로부터 “네거티브 규제방식”으로의 전환 과정을 보다 적극적 추진하자는 제안이다. 다만 대기업, 중간지원 조직 등의 불공정 거래에 대한 강력한 규제는 필요하다는데 인식을 같이하고 있다. 특히 사회적기업 혁신가들은 정부-시장 실패 영역을 보완하는 사회 서비스 제공 영역에 대해서는 최소한의 보호 장치가 필요하다는 것이다.⁸⁾

8) 포지티브 규제방식은 특정산업의 가능한 영업영역 또는 보호지역 등 특정 지역에서 가능한 행위를 열거하거나 원칙금지 후 예외 허용경우를 열거하는 방식이며 네거티브 규제방식은 원칙허용·예외금지하여 금지된 것 외에는 모두 허용하는 규제방식으로 포괄주의 또는 원칙중심 규제 방식으로 불린다. 이명박 정부, 박근혜 정부에서 추진되고 있는 규제개혁의 내용에 대해서는 최원락(2015); 이혁우·김진국(2015)을 참조할 것.



<표7> 세계은행이 권고하는 SMART 규제 방향

| | | |
|---|-------------|-------------------------------------|
| S | Streamlined | 기대하는 목표를 가장 효율적인 방식으로 달성하는 규제인가 |
| M | Meaningful | 시장에서의 상호작용을 촉진하는 데 긍정적인 영향이 확인 가능한가 |
| A | Adaptable | 환경 변화에 적절하게 조응하고 있는가 |
| R | Relevant | 해결하고자 하는 문제에 대한 적실성 있는 규제인가 |
| T | Transparent | 명료하고 필요로 하는 사람에게 접근 가능한 규제인가 |

출처: World Bank Group Flagship Report, *Doing Business 2013*⁹⁾

가. 혁신 경쟁의 보장, 불공정 경쟁은 제한

“하나은행이 P2P를 못하도록 할 필요는 없다. 우리가 정부 혜택을 받아서 살아남아야 한다는 게 아니다. 경쟁을 해서 이길 것이다. 그런데 정정당당하게 제대로 된 경쟁조차 할 수 없는 그런 규제가 많아서 문제이다. 횡령하거나 배임할 수 있는 여지를 준다거나, 뒤에서 무언가 할 수 있도록 하는 무언가를 막는 규제는 필요하다. 그런데 기존 금융기관과의 형평성, 이런 차원에서 만들려고 하면 안 된다는 거다.” (나-1)

“골목상권에 대기업이 침해하는 것을 규제해야 한다. 계절밥상 이런 애들이 분식점을 없애고 있다. 엄마들이 하던 일들을 대기업이 다 가져가고 있다. 외식업자로서 말하자면 대기업이 골목 상권에서 장사 하는 것에 대해서는 정말 제대로 규제를 하고 침해를 안 하도록 했으면 좋겠다.” (가-2)

나. 소비자 보호에서 소비자 선택권으로

“(스타트업이 망했을 때 소비자 보호방안에 대한 질문) 왜 보호해야 하죠?...물건을 산 고객은 보호를 받아야 한다. 물론. 그런데 예를 들어 내가 은행에 돈 넣어서 잠재적 리스크가 있는 걸 알지만 리스크 테이킹 해야겠다고 계약을 했으면 보호받으면 안 된다고 생각을 한다...제 정말로 패러다임 전환이 필요하다... 그것을 위해 이재명 시장은 기본소득을 외치고 문재인은 공무원 일자리를 이야기하는데, 나는 그것이 스타트업에 가야 한다고 본다.”(나-4)

“소비자에게 선택권을 주느냐 안 주느냐의 문제도 정말 중요하다. 금융 회사들이 적정 금리를 했으면 P2P가 나오지 않는다. 가계부채가 벌써 1300조다. 여기에 대한 솔루션이 없다. 부동산 규제로는 안 되고. 서민 경제는 힘든데. 중간점의 선택권을 제공하는 곳이 없기 때문에 우리 회사 같은 곳이 나오는데...택시 운전자 일자리나 기존 대부업과 형평성이 맞지 않는다는 황당한 논리로 왜 너희만 유리하

9) *Doing Business 2017* 보고서에 따르면 1. 기업설립(starting a business) 2. 건설 허가(dealing with construction permits) 3. 전기 공급(getting electricity) 4. 재산권 등록(registering property) 5. 신용대출(getting credit) 6. 소수 투자자 보호(protecting minority investors) 7. 납세(paying taxes) 8. 무역(trading across borders) 9. 계약 이행(enforcing contracts) 10. 지급불능(파산) 해결(resolving insolvency) 11. 노동시장 규제(labor market regulation) 지표로 측정된 결과 한국은 190여개 국 중 5위로 긍정적인 평가를 받았다. 혁신가들이 체감하는 인식과 달리 상당히 효율적인 규제를 하고 있다는 평가인 셈인데, 주로 세계은행의 지표가 법, 제도의 정비 수준과 규제에 소요되는 절차와 비용(시간, 돈)의 간소화에 주안점을 두고 있어 실제 규제의 질 보다 높은 평가를 받고 있는 것으로 추정된다(World Bank 2017).



게 하려고 하느냐는 건데. 사업의 유리성이 아니라 소비자가 어떤 선택권을 가지느냐의 문제다... 이자율이 (은행권은) 5% 아니면 (대부업) 20%인데, 러쉬앤캐쉬 같은 거대 일본자금기업인데, 우리처럼 작은 업체들이 비용 구조를 절감해서 절반 금리로 제공하는데, 똑같은 잣대를 들이치는 것 자체가... 기존 금리와 렌딩의 10% 정도 금리. 기존 은행에 넣으면 2%가 안 된다. 투자하는 사람은 그 리스크를 받아들이는 것이다. 다 위험을 감수하면서 하겠다는 거다.” (나-3)

다. 포지티브 규제에서 네거티브 규제로

“규제는 항상 사후적으로 만드는 거라 해결도 아니고 예방도 아니다. 그래서 이 규제는 네거티브(negative) 규제를 제대로 할 수 있는 특별법으로 가야 한다고 본다... 국민의 자유와 행복추구권을 헌법은 이야기하는데, 그 조레라는 게 오히려 자유라는 헌법적 가치를 해치고 있다. 이건 법적으로 따지고 들어가도 해볼 만한 것 같다.” (나-4)

2) 혁신경쟁을 촉진하는 규제 개혁

혁신가들은 현재 혁신경쟁을 억제하는 규제들을 약화시키기 위한 구체적인 방안으로서 “규제 샌드박스”, “규제 프리존”, “규제일몰제”, “역차별 금지” 등이 구체적인 대안으로 제시되었다.

앞 장에서 살펴본 대로 이들 정책 대안 들은 새로운 것이 아니라 오히려 정부가 추진하고 있는 규제개혁안과 맥을 같이하고 있다. 즉 이미 행정규제기본법에 근거를 두고 있지만 사문화되어 있던 방안(“규제 일몰제”, “규제등록제”), 이명박 정부와 박근혜 정부에서 도입되었거나 도입 중인 새로운 규제개혁 수단(“규제 기요틴”, “한시적 규제유예”, “규제비용 총량제”, “네거티브 규제개혁” 등)들과 크게 다르지 않다. 따라서 규제개혁은 새로운 제도를 도입하는 차원보다 현재 진행되고 있는 규제개혁 정책들이 실제로 체감할 수 있도록 확산시키는 것이 중요한 것이다.

하지만 규제개혁(완화)만을 대안으로 생각하는 경향에 대한 문제제기도 있었다. 즉 규제 프리존만 하더라도 경우에 따라 수도권 대기업에게만 유리한 효과가 있을 수 있으며, 스타트업의 규제개혁 요구가 무조건 옳은 것으로 봐서는 안 된다는 지적이다. 혁신친화적인 규제 환경을 만들기 위해서는 당위 차원이 아닌 구체적인 연구와 검증 과정을 통해 규제 개혁방안을 제시하는 객관화된 접근법이 중요하다는 것이다. 즉 (1) 사업 실행 이전 단계에서 규제 요인 및 효과 검토 (2)규제의 실효성에 대한 근거 제시를 해주는 규제관련 싱크탱크 역할이 필요하다는 지적이다.

가. 규제 샌드박스 / 규제 프리존

“결국 법을 못 바꾸면 할 수 있는 게 없다. 규제 샌드박스처럼 현행법에서 한시적으로 예외조항 주는 것. 시장에서 테스트할 수 있도록 기회라도 줘보자. 그런데 자문단과 위원회를 만들어서 이걸 해보고 싶습니다. 만 명을 대상으로 6개월 테스트. 한시적인 라이선스인데, 반응이 좋으면 고칩시다 하는 건데, 법을 안 건드



리면서 하려면 금융위가 힘이 있어야 하는데, 힘이 없다고 한다.” (나-2)

“대기업 규제를 해야 한다. 반대로 스타트업에는 규제 프리존. 시대가 변화되면서 니즈가 생기고. 법률 위반이 대단한 것은 아니다. 검토해 볼 여지가 있으면 시작부터 싹을 죽이지 말고. 프리존으로 트라이 하게 한다. 프로세스 절차가 있고. 갑론을박하고 공동체를 위해 필요하면 개선을 하는 방식으로 프로세스를 만들어야 한다.” (다-4)

“듣다 보니까. 창업이 잘 되서 떠올랐는데 분쟁이 나면 법의 속도는 느다. 사업을 하다 말고 쉴 수도 없고. 주문이 밀려오면 캔슬하는 것이 어렵고. 그럼 이 사업 고꾸라지는 것은 아무리 빨라도 6개월 1년이 걸리는.” (다-3)

나. 일몰제와 역차별 금지

“ 만든 규제는 3년 마다 재검토를 의무화하도록 해야지. 그리고 차별적인 규제 없어야 한다. 역차별이 일어나면 안 된다. 쇼핑할 때 우리는 신용카드 쓰거나 공인인증서 해야 하는데 외국인은 이메일이면 다 되고, 유튜브 왜 성장한 줄 아나? 판도라, 다음, 네이버에 있었던 실명제가 없었다. 상대적으로 역차별이 일어나니까. SBS가 거꾸로 유튜브에 찾아간다. 근데 판도라는 한 건만 올라가도 소송을 한다. 유튜브는 소송의 대상이 아니니까 합의를 보고.” (나-2)

다. 규제 효과의 연구: 규제연구 싱크탱크?

“ 플러스 연구자가 있어야 한다. 뭐가 문제인지, 연구자가 없다. 이렇게 해서는 지속가능하지 않다. 구체적으로 팀이 만들어져야 한다.” (다-4)

“ 스타트업의 문제제기가 꼭 선한 문제제기라고 생각하지 않는다. 규제 프리존을 만들자고 했는데. 수도권 규제는 만들어지고 대기업한테만 유리한 방식이 되고... 규제 프리존보다 스타트업이 사업계획을 할 때 규제를 발견해야 하는데 사업을 진행하면서 규제를 발견한다. 너무 어렵다. 문제가 있는 규제가 무엇인지, 사문화된 규제는 아닌지, 연구가 있어야 한다. 반대로 (정부는) 규제 필요 없었는지에 대한 책임을 우려해서 일단 규제를 만들고 있다. 규제를 풀어주는 사람도 명분을 가질 수 있는 프로세스를 만들어주는 것이 좋지 않을까.” (다-1)

3) 상호투명성 제고와 신뢰기반 강화

정부 규제가 개혁방향으로 진전되지 못하고 규제를 위한 규제가 양산되고 이에 대한 저항과 순응 비용이 높아지고 있는 것은 정부와 규제대상인 기업들 간의 상호불신에서 비롯된 것으로 인식되고 있다. 정부의 규제는 사실상 “기득권 보호”라는 인식과 기업들이 정부 돈을 눈먼 돈으로 인식하는 모럴 해저드에 대한 우려로부터 “규제의 역설”이 심화되고 있는 것이다. 혁신가들은 이에 대한 대안으로서 상호 투명성 제고를 위한 조치들을 요구하고 있다. 즉 정부 불신에 대해 정부는 지원 사업들에 대한 회계 공개수준을 강화하고, 기업 불신에 대해 기업들은 실시간 회계 기장제도 등을 통해 상호 투명성을 높이자는 제안이다.



가. 상호 투명성 제고

“안보 관련된 예산 제외하고는 정부가 어떤 기관에 돈을 어떻게 어디에 썼는지도 투명하게 공개되면 그게 없을 것 같다. 나중에 돈이 어디 갔는지 추적만 되면 어떤 이권과 관련해서 규제가 만들어졌는지 밝혀낼 수 있다. 그래서 정부 회계가 안보 관련한 것 빼고는 완전 공개가 되어야 한다.”

“사전 모니터링 안 해요. 실시간으로 받고 바로 tracking 해서 계좌를 아예 막으라고 제가 이야기를 했어요. 직원한테 급여 준다 해놓고 술집 가는 게 도덕적 해이지, 열심히 하다가 망하는 건 아니잖아요. 기업인들에게 물어보면, 차라리 실시간 기장하겠다고 해요” (나-3)

3. 정책제언 ② - 자본조달 생태계의 혁신

혁신기업들의 창업-생존-성장-회수/재창업의 선순환 사이클을 마련하기 위해서는 무엇보다 정부주도 생태계를 자율/분산/코워킹의 단계로 전환하는 과제가 시급하다. 혁신가들은 그 중에서도 자본조달 생태계의 대대적인 혁신이 필요하다고 주문한다. 혁신가들은 정부 지원의 관점과 기존 관행의 전면적인 혁신을 요구함과 동시에 몇 가지 구체적인 정책 대안을 요구하고 있다.

1) 자본조달의 관점 전환 : 정부인·허가제 재검토/성실실패 인정

혁신가들은 정부의존형 생태계를 고착시키고 있는 (1)인증기업에 대한 지원제도의 전면적 개혁의 필요성을 제기하고 있다. 정부인증제 자체를 폐지하거나, 인증기업의 선정과 지원 과정에서 민간 역할을 확대하자는 의견이 제기되었다. 또한 (2)지원 사업을 평가하거나 지원 대상을 선정할 때 실패를 혁신의 필요조건으로 인식해야 하며 (3)창업의 실적 수에 연연하지 말고 창업기업이 성장 단계로 진입하려면 실패를 감수하는 인내 자본의 필요성을 주장하고 있다.

물론 성실실패의 문제의식은 정부의 정책자금 지원 정책에 이미 반영되어 있다. 예를 들어 중소기업진흥원(SBC)의 사업별 정책자금에는 “재도약지원자금”이라는 명목으로 사업전환, 구조조정, 재창업 지원을 꾀하고 있다.¹⁰⁾ 문제는 역시 실효성이다. 막대한 예산을 투입하고 있지만, 정작 정책 수요자들인 혁신가들의 평가가 냉담하다는 것은 정책 전환의 필요성을 뒷받침하는 결과이다.

가. 인증제 폐지/개방, 민간 자율성 강화

“인증 받았기 때문에 이 기업이 프로그램으로 가야 한다는 얘기는, 그 시기에 먹

10) 2017년 예산으로 2,550억원이 책정되어 있다([부록] 2) 정책자금 중 A. 중소기업진흥원 정책자금 용자 계획 참조.



힐지는 모르지만 오래 가지는 못한다고 본다. 왜냐하면 늘 반론에 부딪히게 되어 있기 때문이다. 여기서 먹고 사나 저기서 먹고 사나 똑같은데, 왜 유독 저기에 해주냐, 이런 이야기가 나올 수 있다.” (가-4)

“ 예를 들어 육성 사업하고, 예비 사회적기업 받고, 인증 사회적기업 단계로 넘어가는 사이에서 보면, 공통적으로 하는 이야기가 뽐을 팀이 없다는 얘기를 하지만, 저는 그것 역시나 정부가 실수를 했다고 보는 건. 벤처섹터가 그나마 나왔다고 하는 건 민간이랑 제대로 손잡고 한 것이다. 심지어 민간은 자기돈 태워서 하니까... 기본적으로 민간의 이해관계가 얹혀 들어가는 구조로 설계했기 때문에...” (라-2)

나. 성실실패의 인정, “실패는 이노베이션의 과정”

“ 99%가 뽐 짓 하느냐? 1%의 성공을 위한 원재료가 된다. 실패는 경험 자본이 되어서 축적이 되고, 그 다음에 나오는 창업자들은 거인의 어깨에 서게 된다.”(나-4)

“ 소위 말하는 키스트(KIST), 과학계 기술계 원로라는 사람들이 다음이 4차 산업이고 그때 이러이러한 기술이 필요하니까 이걸 해라, 해서 한 게 R&D이다. 그게 필요하면, 그곳에서 공부하던 카이스트 포스텍 학생들이 시장에서 자연스럽게 창업하게 만들어주면 된다. 이 사람들이 열심히 하겠다 할 때 ‘망해도 좋으니 미친듯이 해봐!’ 해주면 된다. 그냥 정부가 사업 만들어서 R&D 사업만 하는 기업들이 생존하게는 만들어놓고, 그렇게 해서 만들어내는 부가가치는 적다.” (나-3)

“ 성실 실패가 왜 만들어졌냐 하면 혁신적인 걸 하려니까 실패를 인정해달라고 하니깐 만들어졌다. 10년 전에 만들어졌다. 그런데 10년 동안 운영된 걸 보니까 성실 실패로 인정받은 것도 별로 없을 뿐만 아니라 인정받은 건 뭐냐. 진짜 실패인데, 실패로 하면 너무 찌그러지니까 성실 실패로 돌려서 귀책사유 없어지게. 즉, 진짜 성실 실패 그 제도에 맞는 게 아니었던 거다.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게, 우리나라 게 없는 제도가 없이 다 만들어졌다. 없는 제도 없이 다 만들어졌는데 그냥 왜 안 되는지 모르고 그냥 덮어 버린 거다. 관리들은 그렇게 생각 안 한다. 아 해봤는데 안 된다. 구조로 들어가자는 거다.” (마-3)

다. 인내자본

“ 자본도 없고, 담보로 걸 수 있는 무엇도 없고, 사람이 혁신하겠다는 아이디어만 가지고 뭉친 거니까. 여기에 주어지는 돈은 예전 벤처들에 들어갔던 눈먼 돈 말고는 없다. 그걸 구하지 못하면 기업은 죽는다. 돈을 공짜로 주는 건 바라지도 않는다. 다만 10년 정도 빌려줄 수 있으면 된다. 그런 종류의 인내자본 같은 걸만 만들어내는 기금으로 활용하면 좋겠다. 그러면 다른 시스템으로 움직일 수 있을 거다.”(가-3)

“ 인내하게 되는 근거는 있어야 한다. 무조건 기다릴 수는 없으니. 인내하게 만드는 그것을 찾아내야한다고 생각을 하는데. 일반기업의 리턴은 돈이지 않냐. 숫자로 나오고, 돈이라는 게 확실히 있으니까. 그런데 확실히 소셜이나 소셜이노베이션 쪽은 그러면 그 리턴을 무엇으로 볼 것이냐. 그것은 당연히 변화이다. 임팩트인데. 그러면 그 임팩트, 리턴이라고 말할 수 있는, 돈을 내는 사람들이 봤을 때 이게 확실한 리턴이라고 인정할 수 있게 하려면, 저는 확실한 문제 정의, 우리가 풀려고 하는 문제 정의와 임팩트가 뭐라고 할지에 대한 합의를 하고, 선언하는 게 매우 중요하다고 생각한다.” (라-3)



2) 지원체제 혁신 제안

혁신기업 지원정책 차원에서는 (1)창업의 부담을 키우는 “연대보증제의 폐지” 및 “실시간 기장 제도” 도입 (2)민관 협력 지원체제(하이브리드 펀드 혹은 사회혁신기금) (3)자율성 없는 중간지원을 통한 지원 대신 직접 지원을 통해 지원효과의 극대화를 요구하는 목소리가 높았다.

가. 연대보증제 대신 실시간 기장제 도입

“ 사전 모니터링 안 한다. 실시간으로 받고 바로 tracking 해서 계좌를 아예 막으라고 제가 이야기를 했다. 직원한테 급여 준다 해놓고 술집 가는 게 도덕적 해이지, 열심히 하다가 망하는 건 아니잖나. 기업인들에게 물어보면, 차라리 실시간 기장하겠다, 이런 분들이 많다.” (나-3)

나. 하이브리드 펀드 : 펀드는 민간 연계, 인프라는 정부

“ 저는 하이브리드 펀드가 많아져야 한다고 생각한다. 차라리 정부가 그 펀드를 다 할 욕심을 버리고, 양쪽 언어를 다 쓸 수 있는 하이브리드 펀드가 많아지고, 펀드하나하나를 작더라도. 왜냐하면 한 펀드의 기금이 커져버리면, 성과에 대한 부담이 안 생길 수 없다. 3조짜리 펀드인데 2개 했어? 하는 소리를 듣는 거는 누구나 싫을 거니까, 작고 유연한 하이브리드 펀드들이 늘어주고, 그러면 정부가 할 수 있는 게, 안 유연해도 되는데, 큰 돈 드는 것, 예를 들어 수많은 사회혁신가 집단의 지금 허리춤이 없다는게 가장 큰 문제 중 하나라고 생각한다. 차라리 주택 문제를 그 사람들 것을 풀어주는 걸 커다란 단지를 건설 해주던가. 뭔가 안 유연해도 되는 인프라에 정부가 돈을 썼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고.” (라-1)

다. 기관지원에서 직접지원으로

“ 직접 꽃아서 R&D를 해야 한다. 정부가 너희 기술 좋은데, 돈 줄 테니 해봐. 이렇게 가야지 입찰해서 우리가 평가해? 이거 아니다.” (나-3)

“ 지금 R&D가 연구소나 진흥원, 진흥원이 뭘 진흥한다는 건지 모르겠다. 세금 나 뉘먹기만 진흥하고 있다.” (나-4)

3) 민간투자 방식 다양화 : 엔젤투자/P2P 금융/증권형 크라우드 펀드

혁신 스타트업의 경우 민간투자의 자율성을 높이기 위해서는 정부의 모태펀드 영향을 크게 받는 벤처캐피탈 대신 민간 플레이어가 주축이 된 (1)엔젤투자 활성화 (2)P2P 기술기반 금융 (3)증권형 크라우드 펀드 등 기술혁신 기반 민간 펀드의 활성화를 제안하고 있다. 이를 위해서는 혁신기업들의 지원에 대한 인식변화도 필요하다고 지적한다. 그러나 <그림3>에서 볼 수 있듯이 투자조합과 창업투자사를 통한 신규 투자는 최근 활성화 추세이지만 여전히 민간주도의 엔젤투자는 정체되어 있다.



가. 엔젤투자

“ 미국에서 엔젤투자 매칭해주는 회사들이 잘 되고 있다. 벤처캐피탈 문화 무너뜨리고 있는 선순환 만들어지려면 마지막 고리는 엔젤투자라고 생각한다. 생태계 안 만들어졌을 때는 정부가 하다가 엔젤투자협회 같은 민간 플레이어들이 생기고 개인까지 들어오면 자본 연결고리가 만들어진 거라고 생각한다. 부정적인 일면 있지만 잘되고 있다. 선의의 투자자들이 수익도 나고 있고. 초반에 돈의 규모라는 관점에서 보면 엔젤투자자들은 1억 미만. 몇 백만 원에서 2000~3000만이지만. 옛날에 비해 굉장히 많아진 것. 이제 벤처 캐피탈들도 초기 스타트업 단계 투자하는 거 경쟁한다. 3억부터 투자하고 있고 1억 미만은 활성화될 것. 용감한 팀이 몇 개 성공시키고 난 뒤부터 경쟁하기 시작. 3억 이상의 시장도 활성화되고 있다. 정부가 돈을 밀어주는 SBA(서울산업진흥원) 같은 곳에서 시작했다. 이제는 정부에 의존하지 않는 벤처자본(VC) 늘어나고 있다. 그러나 여전히 비어있긴 하다. 자본의 연결고리 만드는 중인데. 몇 십억 이상은 외국 투자자들도 들어와 있고. 자본의 규모 연결고리는 만들어졌다고 생각한다. 그 기점이 2016년 기준. 자본의 상승구조는 다 만들어졌고 이제는 그걸 얼마나 가속시킬 수 있느냐에 따라 달려 있다고 생각한다.” (다-1)

“ 소액단위의 500-1000만원 단위 투자로. 미국에서 봤을 때 할머니 할아버지들이 창업자들에게 설명하는 것을 듣는다. 그리고 투자한다. 증권형 크라우드 펀드 영역이 인식 개선과도 연결될 것으로 생각한다.” (다-4)

4) 투자회수(exit) 시장의 활성화

스타트업의 성장 생태계를 위해서는 초기 지원 뿐 아니라 투자자본의 원활한 회수(exit) 통로와 제도적 경로를 다양화하는 것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강하게 제기되었다. 현재까지 혁신스타트업의 경우 투자자본 회수는 코스닥 신규상장으로 대표되는 기업공개(Initial Public Offering, IPO) 제도에 의존하는데 그 실적이 매우 저조하다. 실제로 2000년 벤처붐 당시 연간 IPO 건수가 200건에 달했지만 2016년에는 전체 IPO 건수가 48건에 불과하며 그 중 벤처캐피탈이 투자한 기업은 33개에 불과하다(벤처투자정보센터, 2017.1).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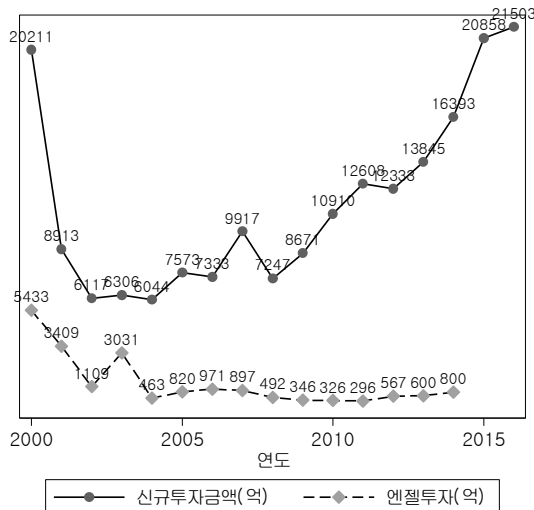
<그림4>에서 중소기업청이 조사한 엔젤투자 부진 이유에 대한 조사결과를 보면 “투자금 회수에 대한 우려”가 47%로 가장 높았다. “정보가 부족해서”라는 응답이 27%, “기업발굴이 어렵다”는 이유가 14%, “자금조달 규제 때문”이라는 응답이 9%로 뒤를 이었다. 이는 현재 한국사회의 모험자본의 위험회피 경향이 주된 원인이기도 하지만, 코스닥 상장 경로만을 허용하면서 M&A 자체를 경원시한 결과이기도 하다. 결과적으로 벤처기업들은 M&A 등이 활성화되지 못하면서 2014년 기준으로 56.2%는 장외매각 및 상환을 통해 자금을 회수하고 있으며, M&A를 통한 자금회수 비율은 0.5%에 불과한 실정이다.

M&A 시장의 침체는 투자 회수 시점의 불확실성, 기업가치의 평가절하를 야기하면서 혁신 기업의 출구전략 및 사업 전환을 크게 제약하고 있다. 다수의 혁신스타트업 혁신가들이나 지원기관 전문가들도 IPO 이외의 자본회수 시장, 특히 M&A 시장의 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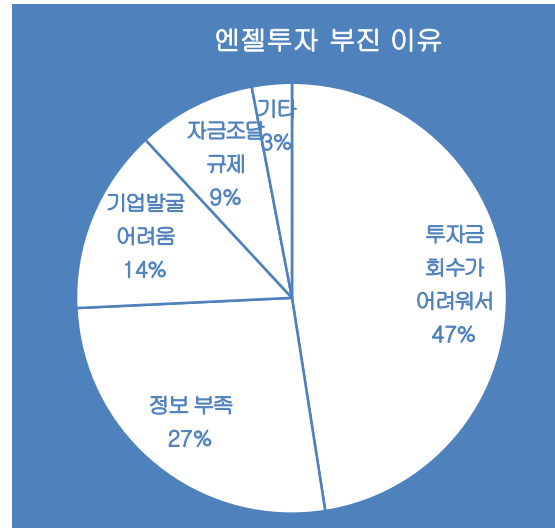


성화가 중요하다고 보고 이는 스톡옵션 등 혁신기업 종사자에 대한 보상체계를 현실화하는 데에서도 필요하다고 주장한다(<2015 글로벌 창업백서>).

<그림3> 전체 신규투자 및 엔젤투자 규모



<그림4> 엔젤투자 부진 이유



출처: 벤처투자정보센터(2017), 미래창조과학부, <2015 대한민국글로벌 창업백서>

가. IPO·M&A 활성화

“우리는 VC투자를 3개월 되는 시점에 굉장히 빨리 받은 케이스이다. 우리가 받은 VC가 KTB 네트워크라는 우리나라에서 가장 오래된 VC 중 하나였다. 거기 계약서를 보면 이상한 내용이 있었다. Exit에 대한 조건이 있었다. 코스닥만 인정이 되고, 코넥스나 지금 이야기하는 몇 가지 벤처 펀드나 투자자들이 엑시트(exit) 할 수 있는 다양한 장외 마켓(market)들이 생겼는데, 코스닥에 올라가는 것만 허락하고, 나머지는 안 된다! 그분들 입장에서는 당연한 거지만 코스닥 상장이라는 게 100분의 1이 넘는 확률인데... 그걸 전제로 투자한다는 것은... 투자할 만한 회사들이 그만큼 줄어든다는 이야기이다. 그래서 exit이나 회수 전략도 다양화할 필요가 있는데, 시장 환경이 코스닥 말고는 M&A도 잘 안 이뤄지고, 그러다보니까 그런 내용이 들어가게 된다. 출구계획(Exit plan)에 대한 것은 정부나 벤처투자업계나 스타트업이나 똑같이 고민해봐야 하는 부분이라 본다.” (나-2)

“M&A에 대한 정서도 바뀌어야 한다. 먹튀라느니, 대기업이 싼 값에 먹어치운다든지. 사실 M&A는 규모를 키워서 시장을 장악하는 생리일 뿐이다. 대규모 마케팅이 필요한 찬스에 대기업이 들어와 회사를 키우기도 하고. 대기업이 인수를 해도 비난하니, 인수를 못한다. 그래서 대기업은 벤처 캐피탈을 별도로 만든다. 결국 자회사로 편입도 못 시킨다.” (나-2)

“ICT쪽에 있는 많은 기업들의 노동자들은 사실 지분 보상이 가장 큰 보상일 것 같다. 지분보상이 가치를 가지려면 M&A, IPO가 선순환 되어야 하는데. 스타트업



에 들어오는 친구들에게 지분을 줄까 월급 올려줄까 물으면 월급을 이야기. 지분을 나눠주고 싶어도 가치가 없다는 것을 안다. 뒷단에 것이 있어야 한다.” (다-1)

4. 정책제언 ③ - 정책 지원체계의 혁신

혁신기업들 중 혁신적인 스타트업이나 벤처 혁신가들은 혁신기업의 정착화를 위해 기술지원(R&D)의 중요성을 강조하지만, 사회서비스 제공에 비중이 큰 사회적기업 혁신가들은 적정한 수준의 정부 복지지원이 필요하다는 입장이 강하다.

1) 기술 R&D

사회혁신에서 기술 R&D의 중요성에는 이견이 없으며, 현재 진행되고 있는 정부 R&D사업의 효과에 대해서도 매우 부정적이다. 관주도의 폐해가 대표적으로 드러나고 있는 영역이 연구개발 영역으로 보고 있다. 정부 주도 대신 민간 주도력을 키워야 한다는 여론을 반영하여 TIPS(Tech Incubator Program for startup Korea, 민간투자 주도형 기술창업지원)처럼 민간이 창업팀을 선발하고 국가가 매칭해주는 협업 프로그램에 대한 관심도 커져왔다(<http://www.jointips.or.kr/>). 그러나 이러한 제도의 도입에도 불구하고 연구기관의 선발과정에서 민간의 자율성이 주어지지 않고 사회혁신가들은 들러리로 활용되고 있다는 인식이 지배적이다. 또한 정부는 기술창업의 사업화를 돕기 위한 다양한 컨설팅과 사업화 지원 프로그램이 진행되고 있지만, 혁신가들의 평가는 냉정하다. FGI에서는 기술개발이 창업으로 원활하게 이어질 수 있도록 “스텔스 창업”과 “실험실 창업”을 활성화해야 한다는 주장도 제기되었다.

가. TIPS 모델의 정착 : 민간 자율성 확보가 관건

“ 사실은 민간의 경영방식을 과감하게 도입을 할 필요가 있다. 공공연구기관 같은 경우에는. 원장도 낙하산이 워낙 많지만. 민간에서 오거나 원장이 그렇다면 연구PM이나 행정실장이나 이런 사람들이 지금은 다 공무원이 내려온다...근데 이 부처의 만년과장들을 승진을 못 시켜주니까 거기에 꽂아 넣으려고 압력을 넣는다.” (마-4)

“ (일본은) 민간주도로 창업팀을 선발하고 국가가 R&D 자금을 매칭해주는 형태다. 상용화를 목적으로 하는 R&D 지원 사업의 가장 적절한 모습이다...일본에 노벨상을 안겼다. 30년 기다렸는데. 우리나라는 안 된다는 말이 있다. (한국의) Tips와 똑같은데 학교와 산학이 같이해서. 뭔가를 성공해서 하면 되는데. 중소기업이. 놀랐던 건 물 안에서 두 시간 안에 콘크리트가 굳는 것을 만들어 냈다. 이런 것들이 50억밖에 안 들었는데도 지원하니 성공했다. 학교에 필요한 것을 기업이 연구해주면 얼마씩 주는데. 30억-50억씩 준다. 중장기적인 성공까지는 아니어도 돈이 들어갔으면 그 쓰임에 대해서 효율성을 가지면 좋겠다.” (다-2)

“ 지역사업으로 갈수록 부실하다. 황당했다. 전국 지역사업. 그 무슨 사업이라더라 지역마다 다 돈을 뿌리고 있더라. 몇 백억씩. 한번은 검토를 갔는데. 전 지역에



온 모든 사업이 80점 이하를 줄 수밖에 없었다. 즉 다 리젝을 줘야 되는데 구조적으로는 리젝트 해봐야 다음에 또 소집해야 되니까 여기서 그냥 보내라는 거다. 결국 그 들러리로 온 거죠. 근데 그 짓을 거기서만 하느냐 큰 사업일수록 다 들러리다.” (마-3)

나. 스텔스 창업과 실험실 창업 확대

“ 고단위 기술 집약되는 것은 결국 실험실 창업이 이루어져야한다. 기존의 경로로 돈을 받고 R&D도 되는. 손가락 하나만 더 얹으면 된다. 팀을 이뤄서 나오는데. 요 단계만 교통정리만 되면. 국가 돈을 받아서 교수직 내려놓고 할 필요 없고, 뚝뚝한 애가 나가서 하면 좋다.” (다-4)

“ KIST에도 기술거래 제도는 있다. 두 가지만 정리하면. 기술거래소들 있다. 많다. 우리나라 창업 문화가. 스탠포드에서 누가 창업해야지 하면 기술거래소로 간다. 기술 갖고 세트로 하나 만든다. 우리나라는 집에 들어가서 공부를 시작한다. 기술이 있어도. 혼자 하다가 끝난다. 기술거래 시장이 있다. 기술거래를 할 수 있다. 이런걸 알 수가 없다. 스텔스 창업존. 기업에서 기술을 연구한 애들이 짱박아놓고. 내가 창업해야지 하다 어느 정도 무르익으면 갖고 나온다. 공식적으로 하고 있다.” (다-3)

2) 인력 연계 지원 프로그램

정부가 지원하는 다양한 멘토링, 해외 판로 지원, 홍보 등 다양한 정책들 중에서 일자리 및 인력과 관련된 프로그램에는 긍정적인 평가가 많았다. 특히 현장 실습교육 프로그램의 일환으로 진행하고 있는 인턴제 지원 프로그램(예를 들어 “창업인턴제”)의 경우 스타트업 기업에서 효과적이라는 평가를 받았다. 한편 사회적기업 및 혁신스타트업에 대한 병역특례 제도의 적용이 시급하다는 의견도 개선되었다.

가. 일자리-교육-병무 연계 지원프로그램(스타트업 인턴제, 병역특례)

“ 정부에서 인턴을 채용하면 50만 원을 준다. 우리는 인턴을 채용하고, 인턴 기간이 끝나면 정직원으로 채용을 한다. 그리고 인턴이든, 취준생이든 그들 입장에서 150만원이라는 게 작은 돈인데, 회사 입장에서는 원래 생각해서 보너스까지 얹어서 200 주는 거다. 이 사람들이 들어오면 압축 성장을 한다. 1인 다역을 하니까. 이 사람들은 일반 기업에서 3-4년 배울 것을 6개월 이내에 배운다 나중에 이직을 하면 그만큼 인정을 받는다. 그래서 청년 실업이 문제라는데, 그 사람들을 스타트업에 잠깐이라도 있게 하는 취업 프로그램을 만들면 양쪽 다 도움을 받을 것 같다.” (나-2)

“ 우리는 청년들을 채용해서, 여러 가지 지원 사업을 해서 청년들 인건비를 지원을 받고 있고, 청년들에게도 이야기를 한다. 지금 우리 규모를 봤을 때 이 정도 인건비를 줄 수 없고, 지원금을 보태서 주는데, 어차피 6개월이든 1년이든 끝나는 지원 사업이다. 그러면 그 사이에 이 정도를 거뜬히 줄 수 있는 기업으로 성장해야 한다고 이야기하며 같이 가고 있다. 물론 그게 실현이 안 되면 대부분의 기업들이 거기서 고용이 끝나거나 기업이 없어지거나 한다. 실질적으로 기업을 운영하는데 돈이 큰 도움이 되고 있다. 그런데 그게 얼마나 지속될지는 미지수이



다. 이와 관련된 이슈들이 많다. 우리 청년 사업하는 사람들 채팅방에서도 가장 이슈가 되는 것이 어떤 고용 관련 지원이 있는가, 대출은 어떤 것이 존재하는가 등 실질적인 돈에 관련된 이슈들이 엄청나게 많다. 그러한 것들이 조금 더 많아진다면 좋겠다.” (가-5)

“ 사회적기업 숙원 사업이다. 매년 무슨 일만 있을 때마다 병역특혜 넣어달라고. 2012년부터 이야기 했으니까.” (라-4)

3) 복지 노선에는 이견

반면 현재의 일자리 부족 등으로 발생하고 있는 문제 해결을 위한 정부의 복지정책 차원에서의 대책에 대해서는 입장이 엇갈리고 있다. 대체로 비영리 성향이 강하고, 사회서비스 복지 영역에서 활동하는 사회적기업 혁신가들의 경우 자신들이 시장-정부의 실패를 보완하는 사회서비스에 대해 보상의 의미를 갖는 “복지 정책의 확대”나 “기초소득제” 등에 긍정적이다. 반면, 혁신 스타트업의 혁신가들은 “보편적 복지” 및 기업 복지를 보완해주기 위한 정부의 복지지출은 비효율적이라는 인식이 강한 편이다.

가. 사회적기업: 복지확대, 기본소득제

“ 공정한 경쟁, 경쟁력을 갖추게 만들자, 이렇게 말씀을 하시는데, 그것을 위해 정부가 제도를 만들거나 정책을 만들면 잘못된 것이라고 본다. 왜냐하면 사회적 경제라는 조직이기 이전에 ‘가치’적인 문제가 있다. 국가가 해결해야 할 문제를 다른 주체들이 해결하고 있기 때문에 그 조직이 살아있어야 하는 것 아닌가. 지원을 하거나 또는 그 조직이 일정하게 지속가능성을 유지할 수 있는 환경을 만들어 주는 것은 그 조직이 갖고 있는 가치 때문일 것이다. 그 가치가 국가가 관리할 일인가 아닌가, 또는 국민들에게 필요한 것인가 아닌가에 대한 판단을 가지고 이 조직이 살아야 하는지 그렇지 않은지에 대한 정책이 필요한 것이지.” (가-4)

“ 병원을 안 가는 건 아니니까. 패키지를 만들어줘서. 스타트업에 종사하는 기간 동안은 4대 보험을 정부가 지원해주는 패키지를 만들어지면 그건 괜찮을 것 같다. 더 좋은 복지가 아닐까 싶기도 하다.” (다-3)

“ 우리 사회의 구성원이라고 인정해 줄 수 있는 문화를 복지적으로 제공하지 않으면 답이 없겠다, 라는 생각이 많이 든다. 그런 면에서 저는 기본소득 논의를 굉장히 긍정하느 편이다. 물론 여러 가지를 검토해야겠지만. 기본소득이 오히려 복지 후퇴다 이렇게 바라보는 시선도 있고... 그렇지 않기 위한 선별적으로라도 청년과 노인 중심으로 편성해보는 여러 가지 실험이 충분히 이뤄지면 추후에는 제대로 정착될 수 있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있다.” (라-2)

나. 스타트업: 성공이 복지, 선별복지론

“ 저 진짜 할 말 많다. 저는 한국사회가 놀라운 게, 뭘 했다고 복지를 이야기해... 스타트업은 BEP(손익분기점, Break-even Point) 넘길 때까지 복지하면 안 된다. 투자 받은 돈 가지고 복지를 어떻게 하나. 우리 스스로 이익을 낸 다음에 이익이 난 규모에 따라 복지를 해야 하는 거다.”(나-3)



“저는 회사에게 복지를 하게 하거나 강제하는 건 절대 반대이고, 국가가 담당해야 한다고 생각한다. 이 복지가 보편적 복지보다는 선별적으로 가야 한다고 본다. 기본소득도 똑같이 돈을 주면 같이 인플레이션이 되어서 아무도 누리지 못한다. 그래서 차등적인 복지를 얻어야 한다고 생각한다. 그리고 최고의 복지는 일자리다.” (나-4)

5. 정책제언 ④ - 혁신인재 육성체계의 혁신 “Learning by Doing”

혁신인재 육성을 위한 교육 프로그램의 혁신에 대한 주문도 다채로웠다. 크게 (1)정규교육차원에서의 혁신방안과 (2)민간영역에서의 교육체계에 대한 논의로 요약해볼 수 있다. 혁신인재의 육성은 기본적으로 “명사 중심의 강의”, “혁신 경험 없는 이론중심 교육”이 아닌 현장 속에서 체험하며 배우고(learning by doing), 현장 경험이 제대로 전달될 수 있는 교육 프로그램으로 진행되어야 한다는 생각이 다수 입장이다. 특히 정부 주도형 교육프로그램에 탈피해야 할 때라는 점에는 폭넓은 공감대가 형성되어 있다. 다만 교원제도 개혁만큼은 정부의 고유 역할이 큰 영역으로 인식하고 있다.

1) 정규 교육 혁신

혁신인재 육성을 위해 혁신가들은 (1)벤치마킹 사례로서 코업 프로그램(캐나다) (2)다양한 영역의 지식을 체험할 수 있는 융합교육 (3)초등학교 시기부터의 조기 창업교육¹¹⁾ (4)교원제도 개혁은 교육체계에서 정부가 담당해야 할 역할로 인식하고 있다.

가. 코업(Co-op) 프로그램

“캐나다의 코업 프로그램은 거기가 삼학기제다. 그 삼학기 중에 한 학기 정도는 학생이 회사에 가서 근무를 하는 거다. (사실) 그 학생의 실력이 있겠나. 기업은 월급을 많이 주고 싶지 않을 거다. 잘해야 한 삼십만 원 주거나 거의 공짜로 쓰고 싶을 거다... 그럼 그 학생은 삼십만 원을 가지고 그 기업에서 4개월을 근무해야 하는 인센티브를 찾기 좀 애매모호 할 거 아닌가. 그럼 주 정부가 70만 원 정도를 맞춰준다. 그래서 4개월을 일하면 그래도 좀 목돈이 생긴다. 그러면 그 돈으로 다음 학기 등록금을 낸다거나 좀 보태고. 그리고 더 중요한 건 코업 성장프로그램이 있다. 이 학생이 초보 수준이다 이러면 30에 70이 매칭 되지만 어쨌든 애가 괜찮은 애라 이게 금방 되네 그러면 한 50에 100 이렇게 매칭이 되는 거다. 2학년 때부터 계속 했는데 이 기업에서 다루는 것들을 4학년에 완전 숙련이 되었다. 그러면 200만원 정도가 되는 식이다. 그럼 이 친구는 장학금을 받지 않아도 산학협력의 경험만 가지고도 학비를 댈 수 있는 어떤 자립성도 생기는 거고 기업에 대해서 졸업 후에도 취업하고 싶은 마음이 생긴다는 말이다.” (라-4)

11) 초, 중, 고등학생 대상 조기창업교육의 경우 중소기업청 소관부처로 각 초, 중, 고등학교들이 시행기 하는 “청소년 비즈쿨”이라는 프로그램이 진행되고 있다. 2017년 기준으로 76.6억의 예산이 배정되어 있다(부록 참조)



나. 융합 교육

“ 우리나라에서 융합 이야기 엄청 많이 하면서 교육과정에 융합 내용이 없다. 과고 나왔는데 의대 가거나 전자 공학 하거나 대부분. 미국은 지원서를 받을 때도 여러 과가 섞이게 유도하고, 사회 경험이 없으면 1년 동안 뭐라도 하라고 한다.” (가-1)

다. 조기 창업 교육

“ 아주 어렸을 때부터 경제에 관한 창업에 관한 교육이 있어야 한다고 생각한다. 물론 말씀해주신 좀비 멘토 선무당은 문제인데, 굳이 콘텐츠를 만드는 게 아니라, 초등학교 때부터 니가 어떤 서비스를 만들어봐! 해서 돈을 벌어드는 그런 것을 해야 한다고 생각한다.” (나-4)

“ 창업 교육이 필요한데, 그 교육이 언제부터 필요하냐면 저는 초등학교 때부터 필요하다고 생각한다. 창업에 대해 거부감을 갖지 않고, ‘도전해봐 이것도 재미있는 일이야. 하고 싶은 일 할 수 있고, 심지어 돈을 많이 벌 수 있어’ 그런 과정이 필요한데, 이거는 공공이 해야 할 일은 아니라고 생각한다. 철저히 민간의 전문가가 해야 한다고 생각한다. 차라리 민간이 할 때 공공이 지원해 주는 것.” (다-2)

라. 교원제도의 변화

“ 혁신의 영역에서는 나라가 뭘 많이 하려고 하면 쉽지 않으나 그런데 나라밖에 못하는 일이라는 걸 생각해보면 교원제도인 것 같다... (혁신가는) 트랙에 있던 모범생이 아닌 분 중에 많다는 생각이 들었는데, 대부분의 교원들은 정말 모범생이어야 하고, 교대에서도 모범생이어야 교사가 될 수 있다. 그런 선생님도 필요하지만 좀 더 다양한 교원 풀이 생겨야 한다고 생각한다.” (라-1)

2) 민간 혁신 인큐베이팅

FGI에서는 정부가 운영하는 다양한 창업교육 대신 민간영역의 자율성과 현장 경험 이 실질적으로 교류할 수 있는 커뮤니티 기반 네트워킹 및 커뮤니케이션의 활성화가 필요하다는 지적이 많았다. 기존 멘토링과 컨설팅은 주로 일방향적이고, 일회적 성격 이 강한 반면, 혁신가들은 지속적인 네트워킹과 전략적 커뮤니케이션이 필요하다고 주장한다.

가. 커뮤니티형 네트워킹 프로그램

“ (미국은) 창업과 관련해서 지역 커뮤니티가 정말 잘 만들어져 있다. 지역별로 도서관 같은 곳도 창업을 원하는 사람들이 모이는 커뮤니티 공간이다. 그 지역의 창업가들이 그 날은 그 도서관에서 일을 하는 것이다. 그래서 강의를 하는 게 아니라 생활 속에서 서로가 부담스럽지 않은 방식으로. 지금의 교육시스템은 창업과는 맞지 않다. 단계적으로 되어야 한다. 억지로 밀어낸 것에 대한 부작용이 있다고 생각. 갑자기 시작하면서 불가피한 면도 있었다. 그러면 지금은 큰 틀을 만들기 위해 큰 그림을 그릴 필요가 있고, 구조는 소수의 엑셀런트한 전문가 풀러



스 다양한 발롱티어 그룹들. 전 지역기반(학교 도서관, 주민 센터)의 창업 커뮤니티 기반이 필요하다고 생각한다.” (다-4)

나. 민간 네트워킹 활성화

“ 한국에 몇 개 해외 계약 VC들이 들어오고서 들어온 게 그런 정기적인 행사를 자기네끼리 만들어서 자기네 투자회사들끼리라도 뭐라도 할 수 있게 서로 연결시켜주는 것을 하더라.” (나-2)

“ 교대에 엑셀레이터 센터. 대기업 임원들이 현직일 때 5천만 원 내고 퇴직하고 망한 센터를 인수 일당 2만원 받고 커피타고 청소한다. 오셔서 인사하고. 스타트업 오면 대기업 임원과 이야기할 기회가 없는데. 애들이 매일 온다.” (다-3)

“ 임원도 연습하지 않으면 퇴직 후에 등산만 다녀야 한다. 인터뷰도 많이 하고. 그분들이 왜 하나? 2만 원이면 일당이 안 된다. 4시간 2만원. 스타트업 애들과 대화하는 연습을 하는 것. 교육비 치고 싸다. 스타트업의 눈높이를 맞추는 연습한다... 서울에 같은 곳에 위탁을 해서 대기업 임원 연수를 하나 도움 안 된다” (다-4)

다. 전략적 커뮤니케이션

“ 특히 우리나라 비영리 쪽 투자자들이나 돈을 주는 데들이 이렇게 씨프로그래머 전략적 고민을 같이 해주지도 않았고, 그들도 그렇게 납득을 해줘야하는 것을 모르는 게 조금 더 많았을 것 같다. 그러니까 페이퍼로만 계속 받으니까. 결국 돈을 주는 사람 입장이니까 내가 굳이 이렇게 설명하거나 이해하려고 하는 게 많이 있다고 생각 안할 수도 있었을 것 같다.” (라-3)

6. 정책제언 ⑤ - 혁신 평가체계

비효율적, 비효과적 정부 지원체계와 규제가 유지되는 데에는 형식적 차원의 실적주의, 성과주의가 작동하고 있다는 것이 혁신가들의 진단이다. 따라서 혁신 생태계 2.0시대를 열기 위해서는 평가체계의 혁신이 필요하다는 것이다. 주목할 점은 정부의 평가제도 자체만 보면 FGI에서 논의되었던 성실실패의 문제, 사전 모니터링과 질적 평가의 확대, 민간 참여형 평가 제도를 반영하고 있다. 기존의 평가체계에 대한 문제점을 인지하고 있으며 이를 개선하려는 방향으로 정책을 개선해나가고 있다고 할 수 있다. 그러나 문제는 외형적인 제도 개선에도 불구하고 책임회피 문화, 부처 이기주의, 행정편의 주의적 사고는 유지되면서 대안으로 도입된 평가 제도를 악용하거나 형식화함으로써 실질적인 개선으로까지 이어지고 있지는 못한 상태로 보인다.

1) 혁신 평가 체계의 현실화

가. 성실실패, 실패는 혁신의 과정(World Bank 2017)



“ 미국은 창업 한 번 해본 것보다도 두 번 실패한 사람이 높은 평가를 받는다. 100 중에 한두 개 성공한다는 인식 자체에 익숙해지지 않으면, 당연한 것으로 체득되지 않으면, 뒤로 빠질 수밖에 없다. 누군가는 먹게 될 시장이다. 우리가 나서서 빼앗아야 하는데 당장 내수도 지키지 못하고 있다. 교육이나 문화 콘텐츠로 될 게 아니라 정책도 이것에 맞춰서 짜야지 관리하겠다는 것 자체가 착오적이다.” (나-1)

“ 상업화도 R&D 과제 KPI는 성공률인데. 만약 바뀌서 실패를 했다. 왜 실패했는지 데이터가 남으면 또 다른 사람이 도전한다면 데이터를 넘기고. 연속해서 활용할 수 있게 만들면 그게 진짜 R&D가 되는 거라고 생각한다. 쓸 때 없이 예산 나눠주기 R&D가 아니라.” (다-2)

나. 제도의 악용

“ 성실 실패가 왜 만들어졌냐면 혁신적인 걸 하려니까 실패를 인정해달라고 하니 까 만들어졌다. 이미 10년 전에 만들어졌다. 그런데 10년 동안 운영된 걸 보니까 성실 실패로 인정받은 것도 별로 없을 뿐만 아니라 인정받은 건 뭐냐. 진짜 실패인데, 실패로 하면 너무 찌그러지니까 성실 실패로 돌려서 귀책사유 없어지게. 즉, 진짜 성실 실패 그 제도에 맞는 게 아니었던 거다.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게, 우리나라 게 없는 제도가 없이 다 만들어졌다. 없는 제도 없이 다 만들어졌는데 그냥 왜 안 되는지 모르고 그냥 덮어 버린 거다. 관리들은 그렇게 생각 안 한다. 아 해봤는데 안 된다. 다시 원래 구조로 들어가자는 거다.” (마-3)

2) 정책적 대안

현재 평가제도 하에서 경직된 예산집행 구조가 비효율과 편법 전용으로 이어짐에 따라 (1)예산 자율권 확대(lump-sum 럽섬방식 배분) (2)외형적 성과지표(R&D의 경우 단순 성공률) 대신 연구 성격에 맞는 평가지표 구축 (3)민간 평가 위임 강화 (4)실시간 모니터링 시스템의 도입 등의 대안이 제시되었다.

가. 예산자율권 보장(lump-sum 방식)

“ 영국 네스타인가, 거기하고 이야기를 해보니까, 거기는 예산 구조가 다르다. 혁신 쪽 예산은 통으로 준다. 그리고 어쨌든 거기는 결산, 정산 방식도 다르다고 한다. 저희는 승인 받고 나서 다시 계약 심사를 받아야 하는데. 저희 쪽의 예산 쓸 수 있는 구조 설명을 했더니 이해를 못한다. 그 구조에서 수없이 결국 많은 허들이 생기면서 혁신가들이 좌절한다.” (라-4)

“ 방향은 대학에 대한 직접적인 재정지원이 아니라 대학에 대한 럽섬(lump-sum)에 대한 지원의 방식. 그래서 대학에서 연구를 중심으로 운영을 하던 교육을 중심으로 운영을 하던 상단을 중심으로 운영을 하던 그건 대학의 방식이다. 교수님들이 그것도 못하게 했다. 그러니까 못 믿어도 너무 못 믿는 거다.” (마-4)

나. 맞춤형 평가체계(기준)



“저는 투 트랙으로 봐야 된다고 생각. 당장 답이 안 보이는 인류에 대한 긴 호흡이 필요한 R&D도 필요하다. 길게 가는 것. 상용화 영역에 있는 것들은 상용화에 비중을 두고 가야 된다. R&D가 교수님들 학교에 머무르다 보니까 상용화에 관심이 없다. 본인의 실적과 무관하기 때문에 관심이 없다.” (다-4)

다. 민간자율 성과 관리 강화

“성공률이 90%라는데, 말이 안 된다. 쓸모없는 것만 만들어놓고 돈 따먹기 하는 거다. 세금 그런 방식으로 가져간다. 기업은 소비자가 원하는 게 뭔지 눈에 불을 켜고 진짜 R&D를 할 텐데, 민간보다 정부가 잘 아나? 인공지능에 대해.” (나-4)

“R&D는 실패를 전제로 하긴 하지만 효율이 매우 낮다. 스타트업에게 하도록 하면 된다. VC에서 옥석 가리기를 하도록 하면 된다. 시장 경제에 맡기면 된다. 왜냐하면 연구 과제를 할 때 성공할 수 있는지 여부를 따지기 때문이다. 이미 해놓은 것을 가지고 올해 안에는 하겠다고 하는 거다. 정부는 문서로 평가하기 때문에, 시장에서 무슨 가치가 있는지도 모르면서 들이민다.” (나-4)

라. 실시간 모니터링 시스템 도입

“그리고 사후약방문. 사전 모니터링 안 한다. 실시간으로 받고 바로 트래킹(tracking) 해서 계좌를 아예 막으라고 제가 이야기를 했다. 직원한테 급여 준다 해놓고 술집 가는 게 도덕적 해이지, 열심히 하다가 망하는 건 아니지 않나.” (나-3)

7. 정책제언 ⑥ - 친 혁신기업 문화 확산

1) 문화적 수단의 활용

혁신가들은 혁신기업에 대한 왜곡된 인식을 바로잡고, 친 사회혁신기업 인식을 확산시키기 위한 다양한 문화적 수단(드라마, 영화 등)을 적극적으로 활용할 필요가 있다고 주장하고 있다.

가. 창업에 대한 이해 제고

“창업으로 변화를 바꿔야 하는 것에 대해 공부 필요하다. 문화를 바꿔야 하는 것이 필요하다. ‘이거 해도 크게 죽지 않아. 경험이 될 거야 망해도 망하지 않아’라는 메시지.” (다-3)

“저희도 사업을 망해서 망할 뻔 했다. 센터장님 말씀하신 것처럼 가족까지 박살나지 않는 시대가 온다. 리스크가 똑같다. 평생공부해서 공무원, 취업해서 임원이 되면, 사업을 망하게 되는 리스크와 임원 이후에 퇴직의 리스크는 동일하다.” (다-2)

“구분해야 하고 짚고 넘어가야 하는데, 대기업과 스타트업 기업이 다르다는 것을 인지시켜야 한다. 스타트업도 나중에 커서 대기업 되면 그럴 수 있긴 한데, 당장 지금은 그렇지 않지 않나. 언론도 이걸 잘 구분해주고 정치권에서도 나눠서 봐야



하는데, 민주당 이런 쪽은 기업에 대한 이해 자체가 전혀 없다. 기업가 출신 국회의원도 없고 관심도 없고 운동권이나 법조인 출신이라 기업에 대해서는 어설픈 반감만 있다. 그런 것들이 많이 개선이 되어야 한다고 생각한다.” (나-4)

나. 친-혁신기업 인식의 확산

“ 문화적인 수단이 동원될 필요가 있다. 공산당의 선동 기법 이런 게 효과적인데, 정책적인 측면에서 필요하다. 미국에서는 실리콘 밸리라는 드라마도 있고 관련된 영화도 많이 나온다. 얼마 전 KBS에서 클라우드 펀딩 소재로 한 1부작 드라마가 있었는데 주요 플롯이 ‘사기’였다. 대학생이 천사 펀드를 만들어서 동급생들과 선배들이 돈 넣고서 후배 여학생을 돈을 빌미로 성폭행하는 그런 내용이었었는데, 창업에 대해 얼마나 안 좋은 인식을 심어주는지 알 수 있다. KBS MBC 다 정부에게 먹힌 방송국이라면, 왜 좋은 드라마는 안 만드는지...” (나-4)

“ 일본에서는 나의 성공의 비밀이라는 드라마가 2000년이 되기도 전에 나왔는데, 손 마사요시 소프트뱅크 회장 이야기로 만들었다...일본에 한자와 나오키라는 드라마가 있는데 금융권을 중심으로 보여준다. 우리나라는 창업가 성장기도 없지만 직업에 대한 드라마도 없다. 창업도 직업 중 하나인데, 그것을 인식해야 반기업 정서가 없어지는데, 창업과 관련된 드라마 말고도 직업과 관련된 드라마가 생겨야...” (나-3)

“ 드라마 정말 좋다. 카이스트 드라마 보고 카이스트 가고 싶어지더라. 나이 많은 기성세대도 쉽게 받아들이실 수 있을 것 같다.” (나-1)

“ 마스터 플랜이 있긴 해야 할 것 같다. 이런 것도 좋을 것 같다. 예를 들면, 광고 공사가 공익광고 하는데 옥외전광판이나 곳곳에 창업가로 성공한 사람들 보여주고, 사람들은 심리적으로 영웅을 쫓는다. 활용해야 한다.” (다-2)

“ 창업하는 것이 그래도 더 섹시하다. 야, 너 창업했어, 너 대표야, 이런 섹시함이 있는. 그리고 심지어 다른 이미 기존에 존재하는 곳에 들어가려고 봤더니 다 끈대들이 리더하고 있는데, 야 무슨 끈대들하고 일하냐, 우리가 하고 말지, 라고 여기는 약간의 그런 섹시함들이 있고, 그런 자부심들이 있는데. 소셜벤처나 사회경제섹터에서 일하는 것들을 외부적 시선에서 봤을 때, 되게 힘든 거 하는데, 대단하다고 인정해 주는 사람이 구린 것이 사실. 이런 것들을 사회 전체적인 분위기가 어떻게 만들어 줄거냐라는 것이 첫 번째 선행되어야 할 과제인 것 같고.” (라-2)

2) 혁신 억제하는 사회적 관행의 변화

동시에 이러한 문화적 접근이 실질적인 사회혁신 기업들이 직면하고 있는 사회적 문제들을 해결하지 못할 경우 근본적인 대책이 되지 못할 것이라는 지적 역시 주목할 대목이다.

“ 저는 오히려 엄마들의 문화를 바꾸기보다 산업의 관행이 크게 두 가지 바뀌어야 한다고 생각한다. ‘자유롭게 살아라’, ‘니 일을 해라’라고 하면 그런 아이들이 자라서 할 수 있는 일이 B2B 아니면 B2C겠죠. B2C로 뭔가 하려고 하면 젠트리피케이션 문제가 풀리지 않고는 자기 가게를 내건 자기 공간을 내건 뭔가를 해서 먹고



사는 게 쉽지 않을 거다. B2B를 하면 우리나라에서 서비스업을 하면 사실 서비스 비용을 제대로 받는 곳이 대기업부터 하나도 없다. 그 관행이 바뀌지 않고는 감히 누가 창업을 해서 대기업의 프로페셔널로서 일을 하겠다라는 얘기를 받아들이겠나. 내 딸이어도 저는 좀 걱정하게 될 것 같다. 결국은 B2C는 젠트리피케이션 문제, B2B에서는 서비스업에 대한 제대로 된 비용을 주고받는 관행. 그게 풀리지 않고는 내 일을 만들고 살아남는다는 게 쉽지 않을 것 같다. 그게 결국 문화의 문제가 아닌가.” (라-1)



IV 혁신 생태계 2.0을 위한 연구과제

이상으로 사회적기업, 혁신스타트업, 지원기관, R&D 분야 사회혁신가들이 진단한 한국사회 혁신생태계 진단과, FGI에서 도출된 정책 대안들을 살펴보았다. 전반적으로 인식의 공감대가 크고 대안에 대한 인식의 공감대는 형성되어 있었다. 공유된 문제의식과 대안은 당장 혁신 생태계 1.0에서 2.0으로 성장하기 위한 솔루션을 마련하는데 귀중한 기초자료가 될 것이다.

그러나 몇 가지 이슈에 대해서는 포커스 그룹별, 혁신조직별로 적지 않은 인식의 차이와 쟁점들도 드러났다. 이번 인터뷰 과정은 아직은 잠복되어 있거나 핵심 쟁점으로 부각되지는 않았지만, 향후 정책 수립과 추진과정에서 사회혁신 그룹 내부의 이해관계의 충돌을 야기할 수도 있는 갈등요인을 포함하고 있다. 이 장에서는 인터뷰 과정에서 드러난 현재 잠복된 논점들 중 혁신 생태계 2.0 단계에서 본격적인 쟁점으로 떠오를 가능성이 있는 문제들을 정리해보고자 한다. 이는 혁신 생태계 2.0으로의 도약 및 안정화하는 과정에서 풀어야 후속 연구의 정책 과제가 될 것이다.

인터뷰 과정에서 나타난 여러 쟁점들을 전략적 비전과 우선순위, 정책수단을 결정하는 데 판단기준과 근거가 되는 핵심쟁점 6가지로 압축하였다. 정리하면 (1)혁신동력은 생태계 환경에서 찾을 것인가, 내부 혁신역량에서 찾을 것인가 (2)사회적 가치 대 경제적 가치의 조화 방안 (3)혁신지원의 효과(생존 본능 약화 대 중복투자) (4)혁신기업의 인권과 보상체계 (5)혁신지원의 우선순위(청년창업 대 성숙창업) (6)혁신창업 저변 확대 정책의 효과성(1인 기업과 여성창업 지원)로 요약된다.

1. 쟁점 ① - 혁신 전략의 우선순위 : 생태계 개선 대 내부 혁신역량 강화

본 연구는 사회혁신 주체들의 내부 혁신요인이 아닌 생태계 환경에 대한 진단을 주목적으로 하고 있지만, FGI 진행과정에서 혁신가 및 혁신기업들의 내부 문제들에 대한 자성의 목소리도 엿보였다. 향후 혁신 생태계 2.0의 종합적인 마스터 플랜이 마련되기 위해서는 정부, 대기업, 중간조직 등을 포괄하는 사회혁신 환경과 생태계에 대한 진단뿐 아니라 혁신조직 내부의 요인들에 대한 종합적인 진단과 인식이 필요할 것이다.

인터뷰 과정에서는 생태계 환경의 문제 못지않게 혁신 조직 내부 요인에 대한 문제점으로 (1)혁신가들의 혁신 철학의 부재 (2)혁신의 실질적인 성과의 부재 (3)혁신 조직들의 모럴 해저드 (4)혁신조직간 협업의 부족을 지적하는 자성의 목소리가 제기되었다. 혁신 생태계라는 외부요인과 함께 사회혁신 조직의 내부요인(리더십, 조직 문화, 혁신역량)에 대한 문제의식은 우선, 혁신 생태계 2.0으로 가는 전략 수립에서 생태계 개선이 우선인가, 내부 혁신 역량 강화가 우선인가라는 전략적 논쟁점을 던져준다. 또



한 사회혁신 조직이 명실상부한 혁신조직으로 성장하기 위한 내부 결정 요인에 대한 추가적인 심층 연구의 필요성을 제기한다.

1) 내부 혁신 요인에 대한 자성

가. 혁신 철학에 대한 반성

“ 혁신가라는 단어가주는 뉘앙스가 근본적인 사회문제를 크게 바꿔내야만 한다면, 저희 주변 일하는 분들 중에 혁신가가 몇 분이나 있을 수 있을지 모르겠다. 그런 분들도 있겠지만. 그 변화는 근본적인 사회변화 외에도 한 명 한 명이 일하는 방식. 회사가 운영되는 방식 일하는 것의 퀄리티의 변화도 함께 만들어져야 한다고 생각이 든다. 제가 생각하는 혁신가들의 특징은 본인의 분야에 대한 분명한 철학이 있는데. 대부분 그 철학이 사회적인 것과 이타적인 것과 맞닿아 있는데 업에 대한 철학이 있고 탁월함을 추구하여 일을 잘하시는 분들이라고 생각한다.” (라-1)

“ 기존 사회복지, 내지는 NGO, 이런 곳에서 새로 생기는 사회 문제에 대해 -애정은 있다고 치고- 그것을 해결하기 위해 치열하게 일하고 있는가에 대해 완전히 실망스럽다.” (가-2)

“ 사회적 경제 분야가 대기업이나 금융 등 기존 메인스트림이 망하면 이쪽을 대체 한다는 의견에는 의구심이 있다. 우리 사회에서 사회적 경제 쪽은 사실 한 살림이나 몇몇 군데를 제외하고는 찻잔 속에서 우리들끼리 자위하고 정신승리하고 있는 곳들이라고 생각한다.” (가-1)

나. 혁신 성과의 부재

“ 생각해보면 사회적 기업이라는 딱지를 붙이거나, 그 전에 대안 경제나 또 다른 이름을 붙인 걸로 하면 10년-20년? 이 정도로 이야기를 하는데, 그 기간 동안 변화를 만들거나 성공적인 부분에 대해 아직은 부끄럽지만 없다고 생각을 한다. 여전히 생존에 허덕이고 대안에 대해 방향성을 이야기하지, ‘될 거야’라고 하는 확신에 대해서는 아직 미진하지 않나.” (가-4)

“ 그 변화는 근본적인 사회변화 외에도 한 명 한 명이 일하는 방식. 회사가 운영되는 방식 일하는 것의 퀄리티의 변화도 함께 만들어져야 한다고 생각이 든다. 제가 생각하는 혁신가들의 특징은 본인의 분야에 대한 분명한 철학이 있는데. 대부분 그 철학이 사회적인 것과 이타적인 것과 맞닿아 있는데 업에 대한 철학이 있고 탁월함을 추구하여 일을 잘하시는 분들이라고 생각한다... 저는 제품이 훌륭한데 시장에서 몰라주는 일은 없을 거라고 생각한다, 솔직히. 예를 들어 마리몬드에서 만드는 거는 그게 소셜인지 뭔지 뜻을 모르고 봐도, 수지가 들고 있는 걸 봐도 아, 저거 진짜 예쁘다, 저 케이스 어디거지? 라고 생각하지 않나...그것을 사야할 대상이 구매력이 약한 경우, 그 대상에게 필요한 물건일 경우 끼어드는 건 좋을 것 같다. 예를 들어 전동휠체어 같은 것은 시장성이 아주 좋지 않기 때문에 안하는 것을 누군가 자기 기술력을 여기 썼다거나... 병원 생활하는 어린이들이 밤에 외롭지 않게 하는 전구장난감을 정말 어렵게 현지 기술화해서 샀는데, 그걸 사줘야할 사람은 아이들 병원이거나 환자여야 하는데. 그럼 둘 다 아마 돈이 많지 않을 거다. 그런 부분을 지원할 수 있지만, 기업의 입장에서 우리의 시장을 만 들어줘라 하는 것은 반대로 투자자를 받지 말았어야 하는 거 아닌가.” (라-1)



다. 모럴 해저드

“ 국가 돈이 눈먼 돈이라고 인식되고. 평가요소도 리즈너블하지 않고 그런 게 있긴 하지만.” (라-3)

“ 일단 스타트업 관점에서 보면 아이디어가 있으면 대출을 받았다. 그래서 망하면 가세가 무너졌다. 대출은 죽을 것 같을 때 계속 받아야 한다. 끊임없이 그렇게 가다가 번아웃된다. 이제는 초기부터 정부자금이라든지 뿌리는 돈으로 맛을 보는 경우 대출은 늘 같은 것. 대출은 내가 진행해서 잘되려고 할 때 받고 안 될 때는 받지 말아야 한다는 인식이 필요하다. 내가 투자도 받지 못할 정도의 아이템이면 대출은 받지 말아야 한다. 투자는 사회가 검증하는 과정이다. 물론 소상공인은 제외다. 이제는 문화가 달라졌다. 엔젤투자는 검증받는 것이다. 투자받지 못하면 자기 아이템에 문제가 있다는 것을 인지해야 한다. 이런 구조를 가지고 있다는 걸 사람들이 알고 시작해야 한다. 잡을 구하기 위해 창업하지 말아야 한다. 출근하기 위해 창업하지 말아야 한다. 엔젤투자 받아야 창업이 개시된 걸로 봐야 한다.” (다-3)

라. 혁신조직간 협업 미흡

“ 일단 우리 섹터 자체의 역량이 부족에서 기인하는 것 같다. 우리조차도 협업이 안 되고 있어서. 일단 국가 얘기하기 전에 우리가 이걸 어떻게 하겠다는 논의가 없으면 국가가 아무리 뭘 해도 결국엔 이 열매는 정말, 엄한 사람들이나 가져갈 수밖에 없다.” (라-2)

2. 쟁점 ② - 사회적 임팩트와 경제적 임팩트의 조화

1) 사회적기업과 혁신스타트업의 정체성 차이

FGI 결과를 보면, 사회적기업 영역 사회혁신가와 스타트업 영역 사회혁신가들의 경우 외부 환경 진단에 대해서는 공감대가 크지만, 정체성과 조직임무에 대한 인식 차이가 뚜렷하다(표8). 복지, 보건, 교육 등 사회 서비스 제공을 담당하는 사회적 기업이나 소셜벤처, 비영리 혁신조직의 혁신가들은 사회적 가치 실현에 비중을 두고 있는 반면, 혁신 스타트업은 기술 기반 벤처로서의 경제적 가치실현에 우위를 두는 경향이 나타났다.

한편, 사회혁신의 가치를 실현하는 방식으로 사회적 기업이나 비영리 혁신조직은 정부 및 사회의 지원 및 보상의 필요성을 인정하고 사회성과연계채권(Social Impact Bond)의 대안을 선호하고 있다. 반면, 혁신 스타트업 혁신가들은 대기업에 대한 규제나 지원보다는 시장경쟁을 통한 이익창출을 중시하고 기업공개(IPO) 혹은 인수합병(M&A)을 통한 가치 실현을 추구하는 경향이 뚜렷하다.

기업내부 노동과 보상 체계(원칙론 대 현실론/진화론) 등에서도 양 집단 간 인식의 차이가 뚜렷하다. 사회적 기업, 비영리 조직 성격이 강한 조직의 혁신가들은 대체로 제대로 된 보상체계와 노동권을 보장하는 방향으로 가야한다는 원칙이 뚜렷한 반면,



혁신 스타트업 관련 혁신가들은 현실론이나 노동권 개념의 전환 필요성을 역설한다. 현실적으로는 스톡옵션을 대안으로 생각하는 경향이 강했다. 정부지원에 대해서도 전자 그룹이 정부의 복지 정책에 기대하는 반면, 스타트업 혁신가들은 공정경쟁 환경에 무게를 두는 경향이 뚜렷했다.

2) 협력 방안

양 조직군간 상호관계에 대해서는 각자의 정체성에 기반을 둔 협업을 강조하는 입장과 정체성의 구분 대신 융합 혹은 스펙트럼으로 인식하면서 하이브리드 협업 구조의 형성을 강조하는 입장이 맞서고 있다. 이러한 인식의 차이는 향후 정책 수립 과정에서 사회혁신 영역에 대한 통합적 정책을 우선할 것인지, 타겟팅된 개별 정책을 우선해야 할지에 대한 정책 편차를 낳을 가능성이 커 보인다.

가. 가치 대 영리의 구분

“우리가 방향을 잘못 잡은 것 같다는 이야기다. 그게 뭐냐면, 비즈니스 모델을 너무 강조하다보니 벤처와의 차별화가 없어진 것이다... 당연히 일반벤처나 영리하고 협업해야 하는 부분도 있고, 배워야할 부분도 있지만, 그런 부분에서도 지켜야 할 정체성이나 가치들은 유지하는 게 중요할 것 같다.” (라-3)

“소셜섹터는 벤처섹터에 비해서는 현격하게 적다. 벤처섹터는 돈이 남아도는 게 맞고. 심지어 보통 사회적 기업이나 사회적 섹터 이야기할 때 너무 정부 의존적이지 않느냐고 이야기 하는데. 벤처가 훨씬 더 그렇다, 사실. 예산규모도 비교가 안 될 정도로, 조 단위로 쏟아 붓는다. 박근혜 정부 들어와서도 2조 가까이 쏟아 부었다. 문제는 그 돈이 어디로 가는지 아무도 모른다는 게 어이가 없고. 심지어는 저는 가장 부럽기도 하고 좋았던 게, 매칭 펀드 쪽인데. 그게 워킹할 수 있었던 건 성공모델들이 나오면서 이 방식이 제대로 돌아갈 수 있겠구나.” (라-2)

나. 가치와 영리의 융합/스펙트럼

“기본적으로 혁신은 융합인데 융합을 하기 위해서는 본인이 몸담고 있는 곳과 알고 있는 분야와 이질적인 분야와의 만남과 연결을 통해서 새로운 혁신이 나타나기 마련인데. 근본적인 사회문제와 연결되지 않으면 거기서 비즈니스적으로 의미 있는 아이디어는 좋을 수 있지만. 소셜 혁신가로서의 아이디어는 나오기 어렵지 않을까.” (라-4)

“저는 이거를 그렇게 여기는 소셜이고 여기는 벤처고 라고, 분리하지 말고 그냥 스펙트럼으로 봤으면 좋겠다. 저 끝의 극한에는 진짜 진짜 돈을 강화시키는 사람도 있을 거고, 임팩트 위해서 비영리하시는 분들도 있고, 가운데 썸에서 둘 다하려는 사람 중에 일부는 자기들이 벤처인 줄 알고, 일부는 소셜 벤처인 줄 알거다. 저는 스펙트럼이라고 생각한다. 그런데 스펙트럼으로 생각하지 않고 소셜끼리 묶다보면 저는 이 안에서 성장하는 친구들의 성장에 너무 한계가 올 거라고 생각이 첫 번째로 든다.” (라-1)



<표8> FGI에서 나타난 사회적 기업 혁신가와 혁신 스타트업 혁신가의 인식 태도

| | 사회적 임팩트 우선 (사회적 기업) | 경제적 임팩트 우선 (혁신 스타트업) |
|---------|---|---------------------------------|
| 정체성 | 소셜벤처, 비영리 혁신조직, 제3섹터(사회적 가치 실현 우 위) | 기술혁신 기반 벤처 (경제적 가치실현 우위) |
| 가치실현 | 정부/사회의 보상/지원 사회성과연계채권(SIB) | 기업공개(IPO) 시장에서의 보상(M&A) |
| 기업 내 보상 | 원칙론(노동권, 인권의 보장) 현실화된 임금/노동조건 | 현실론 혹은 진화론 (보상의 유 예) 스톡옵션 |
| 정부 지원 | 복지 선호 | 공정 경쟁 선호 |

3. 쟁점 ③ - 혁신 지원의 효과 : 모럴 해저드 대 중복투자론

혁신을 형그리한 생존 경쟁의 산물로 보는가, 안정적인 자원을 가진 기업 여건에서 발생하는가에 대한 인식 차이도 분명하게 나타나고 있다. 최근 CEO의 인적 자본(human capital)과 벤처자본에 대한 접근성(access to venture capital)이 신기술 기반 스타트업 성공의 핵심 동력이라는 점에는 큰 이견이 없다. 이러한 인적자본과 자본 접근성은 CEO 개인의 경제적, 문화적 자산에 영향을 받기 때문에 최근에는 생존과정에서의 형그리함 보다 해당 스타트업의 자산과 자본에 영향을 받는다는 주장이 보다 설득력을 얻고 있다(Colombo and Grilli 2009). 다만 소위 ‘형그리 정신’을 강조하는 전자의 입장에 서면 사회혁신에 대한 지원이 혁신기업가들의 모럴 해저드로 귀결되는 것에 대한 우려로 이어지고, 스타트업 ‘금수저론’의 입장에 서면 혁신조직에 대한 지원이 결국 자원의 집중과 중복에 대한 우려로 나타난다.

“저는 반대로 잘하는 친구들을 지원받지 않는다. 창업은 홀로 서야 하는데. 너무 많은 혜택도 안 좋다. 자꾸 공짜로 주니까. 대표적인 안 좋은 게 문화창조융합센터. 광화문에 있는 것. 셀. 광화문. 대표적인 돈이 흐르는. 창업의 형그리함은 없는. 지원은 그렇게 하면 안 되는 대표케이스. 어쨌든 지원도 현명하게 사회적 공감대가 있어서 건강한 지원이 필요하다. 좀비처럼 연장하는 것은 안 된다.”(다-4)

“제가 투자했던 곳에서는 도드라지진 않는데, 벤처 쪽 투자하시는 분들 만나서 얘기해보면 재밌게 보이는 현상이 옛날부터 그랬다고 하는 사람들이 많긴 한데, 우리가 알만한 대학에 어느 정도 소득이 받쳐주는 집안에서 성장했던 친구들이 창업 성공률이 훨씬 높다는 얘기를 한다. 창업생태계만 봐도 서울대 카이스트 라인, 연대라인 짹짹하고. 심지어 투자자들도 신기하게 연대라인이 제일 많다. 심지어 그 모임을 총장이 관리한다. 그런 것 보면서 이런 얘기를 투자하는 사람과 하면 맨날 하는 얘기가 미국도 그렇다고 한다.” (라-2)



4. 쟁점 ④ - 혁신기업의 인권과 보상체계

사회혁신영역 종사자에 대한 보상과 근로조건 문제는 그동안 터부시 되어온 문제이다. 인터뷰 과정에서 본격적인 논쟁으로 이어지지는 않았지만, 크게 보면 (1)사회혁신을 목표로 하는 조직이기에 지속적으로 사회혁신조직의 적절한 보상체계와 복지, 노동권의 보장을 추구해야 한다는 원칙론 (2)현실적으로 생존이 걸린 상황에서 불가피한 선택이라는 현실론 (3)기술혁명 등 사회적 변화 인해 근본적으로 노동과 복지에 대한 개념 자체가 진화해야 한다는 입장 등 근본적인 시각차이가 확인되었다. 사회혁신영역의 인적자원 충원과 우수한 인재 육성을 위해서는 더 이상 미룰 수 없는 과제로 떠오르고 있다.

가. 터부화된 의제 : 원칙론 vs. 현실론 vs. 진화론의 대립

“ 우리나라의 일반 소셜 섹터가 돈에 대해서 이야기하는 것을 아직은 터부시한다. 우리나라를 대표하는 대부분의 NGO나 시민단체들도 임금 현실화가 안 되어 있고. 아마 00섹터 쪽이나 소셜벤처 쪽에서 얘기를 들어본 것으로는 놀랄 정도로, 거의 10년, 20년 전과 비교해서 임금 수준이 크게 달라지지 않았고...지금 소셜 섹터나 NGO의 임금 현실화라든지. 거기에서 일하는 수많은 20-30대 분들, 앞으로 중간 허리역할을 해야 하는 분들이 어떻게 좀 더 리더로서 성장하고 정당한 보수를 받고 필요하다면 조직 밖으로 나와서 새로운, 다양한 비영리 창업을 할 수 있게끔 할 것이냐가 굉장히 중요한 부분이라고 생각한다.” (라-3)

“ 스타트업 복지는 토론주제. 창업의 80%는 세상을 변화시키려는 의지 있다. 좋은 사례가 있고 안 좋은 사례가 있는데. 할 수 있는 복지를 만들어 내는. 한 달에 한번 삼겹살이라도 먹자. 영화라도 보자. 스타트업이 할 수 있는 복지문화는 이런 것일 것이다. 부정적인 상황은 좋은 인재를 영입해야 된다는 생각에 사무실 으리 으리하게 만들고. 대출해서. 그러다보면 망한다. 과거에 창업한 사람들과는 달리 요즘은 신경을 많이 쓰기는 하는데. 어떤 선이 우리가 할 수 있는 복지인가에 대한 연구는 필요하다.” (다-1)

나. 원칙론 : 보상체계 보장

“ 우리 회사로 보자면, 우리 회사는 올해부터 직원을 다 정규직으로 전환을 했는데, 기본적으로 계약직으로 시작했지만, 우리 회사가 스타트업이고 미래가 불확실하니 계약직이 맞다 생각했으나 당시에도 임금 수준이나 복지는 정규직과 다름이 없었다. 직원들 입장에서는 정규직이라는 타이틀이 주는 마음의 안정감이 있다. 회사 입장에서는 큰 차이가 없다. 물론 나중에 분쟁 생겼을 때 힘들어지는 건 있지만. 그럼에도 그게 더 가치 있다고 생각해서 정규직으로 바꿨다. 그리고 시간제 일자리도 올해 한두 분 더 뽑을 건데, 은행에서 오래 계시다가 아기 키우시는 여자 한 분이신데, 우리와 잘 맞았다. 업무의 특성을 고려해 맞춰서 고용을 하고 있고, 중요한 것은, 노동자와 사용자가 그것에 대해 서로 동의하고 합의하는 수준을 잘 시스템화 해놓는 것이 중요하다고 본다.” (가-1)

“ 직원을 뽑으면 월급 줘야하고. 팀원을 뽑으면 주식을 줘야하는. 방법을 알고 연습하면 해결할 수 있다고 생각. 가급적이면 돈 없을 때 팀원을 뽑아 주식을 나누는 것도 좋다고 생각한다.” (다-3)



“ 스타트업 포럼을 통해서든 알려야한다. 우수 사례가 있으면 좀 알려주고. 딴 곳은 어떻게 했을까. 소위 됐다고 하는 곳들은 어떻게 했을 지를 공유하는 게 필요. 무에서 유를 창조하는 과정에 직원으로 들어왔지만 창업자처럼 일했던 친구들에게 어떤 개런티가 필요한가.” (다-4)

“ 그러나 오너 조차도 스타트업이면 고생해도 된다는 인식이 있다. 노동이나 복지라는 단어가 없다... 스타트업에 대해서는 노동이나 복지에서 “너 희생해도 돼”를 너무 당연하게 생각한다. 보통 스타트업의 기준은 내가 오너십을 가지고 내가 내 사업을 하는. 직원까지도 그렇게 하라는 것인데. 보상은 그렇지 않다. 내가 나 잘 되면 너도 잘되는 그런 게 아니다... 이것도 문화에 가까운 이야기인데. 필요한 직원으로 채용했으면 직원으로써의 처우를 해야 한다고 생각한다.” (다-3)

다. 현실론 : 보상의 유예

“ 큰 기업들에게 법인세를 많이 내게 하고 큰 기업이 4대 보험을 많이 대는 것은 반대는 아니다. 작은 기업에게 부담시키는 것에 대해. 직원 하나를 뽑으면 최소 임금을 줘도. 160만원을 줘도. 퇴직금, 4대 보험해서 회사에서 220만원이 들어간다. 대표도 못 가져가는데. 그래서 우리는 사이즈가 있으니 버티는데. 스타트업에서 그걸 어떻게 감당하냐. 형평성과 평등은 다르다. 우리나라는 평등을 주장한다. 그건 바뀌어야 된다. 조금 내면서도 혜택을 받는 것. 기업도 프리도 조금 내면서 기회를 받아야하는데. 평등만 주장한다는 것은 아쉽다...스타트업에서 고용안정성은 우선순위가 아니다. 데스밸리의 과정에서 계속 사람이 바뀐다. 팀워크 만들어지는 과정이 중요하다. 아무리 개인 역량이 강해도 팀원 안 맞으면 나간다. 나가야 하는 사람들에게 고용 안전성을 이야기하면 생존에 밀린다.” (다-3)

“ 10명의 규모에 그런 잣대는 일하지 말라. 지금 말하는 기타 등등 챙겨가면서 하자는 것은 지속 가능성이 1년 이상의 된 경우에. 대표가 월급을 가져가는 곳에서. 그런 문제가 생존보다 더 중요하지 않다. 왜 일하냐? 여러 니즈가 있는데. 지분이 안주는데. 여행업서 창업하고 싶은데 여기가 잘해. 여기는 나를 인정해줘 그런 스토리가 있다. 그런 더 큰 무형의 니즈가 있다. 아까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내일 생존을 모르는 기업에 적용하는 것은 어불성설이다. 서로가 엑셉트하는 표준에 들어와야 하는 것을 설정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다-4)

“ 고대 갔더니 학생들인데 팀원들한테 200씩 월급을 주더라. 상금 받아서 월급주기 바쁘더라. 그건 비정상이라고 생각한다.” (다-3)

“ 우리 같은 경우 일자리가 후진 대신에-더 주고 싶어도 우리 사회가 우리 노동에 대한 가치를 폄하해왔기 때문에 어려운 상황이다-다른 곳에서 동기 부여를 해주려고 한다. 예를 들어 직장생활을 어떻게 재미있게 할 수 있을지, 아니면 소득 활동을 계속 해야 한다고 하면, 할 수 있는 능력이 되는 데까지 계속 할 수 있도록 보장해줘야 한다. 정년이 없다. 그런 것들에 따라 다르게 나타나는데, 사실은 처우가 좋으면 앞에 얘기한 것들이 다 필요 없는 이야기들이다. 그런 게 현실적인 아픔인 것 같다.” (가-4)

라. 진화론 : 환경변화에 맞는 새로운 잣대

“ 무언가를 리드하고 모두가 정규직이 된다는 것은, 지금 트렌드와 반하는 일이 되기 때문에, 그걸 만들어내기 위해서는 굉장히 많은 갈등과 에너지가 거기에 소



요될 것 같다는 생각이 일단 들고. 두 번째는 어쨌든 저는 사람들이 모두가 다양한 일을 하면서 살아가게 될 거라고 생각하는데 그 때 정규직이 머스트가 되는 게 과연 이 미래 세대들에게 좋은 일일까라는 생각도 든다.” (라-1)

“ 기존 근로기준법과 다른 형태가 필요하다.” (다-4)

“ 노동의 형태는 달라졌는데. 위반이 당연한 상황. 법 규제가 터부시되는 상황이다. 다른 의미로 보면 업무집중도나 의무적인 9 to 6의 규제. 스타트업한테는 9 to 6, 근무 장소가 아무 의미가 없다. 이런 것들이 조금 바뀌던가 리버럴한 형태가 되어야 한다. 근무형태가 표준화 할 수 있는 것일까? 표준화 된다면 침해받지 않는 형태가 되어야 한다. 필요 없는 곳들은 근로 장소가 지정되어 있는데. 그럴 필요가 없는 것 같다. 그런 근로 형태를 연구해서 근로기준법을 완화하고 체계전환을 해서 근로시간에 대한 명확한 가이드가 나오면 좋겠다. 지분보상이 교환될 수 있다. 그런 부분은 근로기준법은 안 된다. 사실은 변화되는 입장에서 지식산업과 서비스 산업의 발전 상황에서는 규정과 바운더리를 풀어주는 부분이 필요하다.” (다-3)

“ 복지가 의무가 되면서 이상해진 것 같다. 4대보험이 좋은 제도다. 취득하면 좋은데. 필요 없는 사람들 꽤 많다. 방송사에서 일하다보면 리포터들이 다 프리랜서다. 아나운서, 피디 다 프리랜서. 기획피디정도만. 작가도 다 프리랜서. 4대 보험 내기 싫어서. 역으로 이용하는 것. 서로 윈윈하는. 그것이 맞는지 모르겠다. 모든 것이 아웃소싱. 기초적인 것들이 없어진다. 숙박시설만 있고 에어비엔비가 있을 때 독점적 형태가 될 텐데 맞겠나?”(다-1)

“ 덴마크가 가장 해고하기 쉬운 나라라고. 가장 시민들이 국가나 정부를 신뢰하는 나라. 국민이 사법부에 대한 신뢰가 98%. 깜짝 놀랐다. 심지어 우울했다. 그런 관점에서 봤을 때 지금은 결국, 좌든 우든 결국은 이노베이션이 굉장히 중요하다. 지금 민주노동이나, 기존의.. 그래서 화두중의 하나가 노동관인데요. 혁신가들에게 지금 제일 통찰될 것 중에 중요한 것 하나가, 사회혁신에 있어서 노동이란 무엇인가이다.” (라-4)

5. 쟁점 ⑤ - 정책 우선순위 : 청년창업 지원인가 성숙창업 지원인가

1) 정책 우선순위 : 대학창업이 우선인가?

정책적으로 청년실업 문제가 심각해지면서 정부 및 대기업의 사회혁신에 대한 지원이 청년 창업을 강조하고 있다. 창업지원기관 혁신가들은 오히려 실패경험이 있고 네트워크가 축적된 성장단계 직접의 혁신기업에 대한 지원이 효과적이라는 진단이 제기되었다. 실제로 <표4>의 기업생멸 통계를 보면 30대 이하 청년 CEO 기업의 기업생존율이 이후 세대가 대표자인 기업에 비해 낮은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 그러나 창업의 시작만큼은 젊을수록 좋다는 조언은 참고할 만하다. 당장의 성공 가능성 대신 실패의 경험 축적과 함께 잠재적인 파트너십 자원과의 네트워크 필요성에 주목할 필요가 있다는 것이다. 정책 우선순위에서 짚어볼 대목으로 보인다.



“ 스타트업은 젊다는 편견에서 벗어나야 한다.” (다-1)

“ 올해 15-20개 정도 투자할 것 같은데... 일단 대학생 창업팀이 별로 없다. 비올적으로는 사회경험한 분들을 투자 많이 했다. 성장하는 팀들을 보면 더 도드라진다. 그런걸 보면서 개인적 생각은 깊이 분석하고 뜯어보진 않았으나, 표면적으로 쉽게 해결 될 수 있는 사회문제들에 대한 솔루션들이나 접근들이 있는 것 같다. 근데 더 사회문제가 복잡해지는데, 이 문제를 풀기 위해 사회경험이랄까 네트워크랄까 자원이 조금 더 풍부한 사람들이 접근했을 때 그 문제를 꿰뚫어보고 적절한 솔루션을 내고 심지어 호응도 긴 것 같다.” (라-2)

“ 실리콘밸리도 투자자들 만나보면 대학생창업 권장하지 않는다고 얘기를 하는데도 불구하고 저는 대학생 창업 권장한다. 그 이유가 뭐냐면 한국에서는 대학 때 창업을 안 하면 동료를 못 만나다. 실패하더라도 일단 창업해서 창업에 관심 있는 애들이 누군지 확인을 해놔야, 그 생태계에 젊었을 때 들어가 놔야 나중에 나 이 들어서 창업하거나 직장생활 하다가 나와서 창업을 해도 동료를 찾기가 수월한데, 그게 안 되는 체계가 있어서.” (라-2)

<표9> CEO 연령별 기업의 생존율 (2015년)

(단위: %)

| | 1년 생존율 | 2년 생존율 | 3년 생존율 | 4년 생존율 | 5년 생존율 |
|--------|-----------|-----------|-----------|-----------|-----------|
| 30대 미만 | 53.4 | 36.0 | 26.6 | 20.0 | 15.9 |
| 30대 | 62.0 | 46.3 | 36.9 | 30.2 | 25.2 |
| 40대 | 64.6 | 50.0 | 41.2 | 34.5 | 29.1 |
| 50대 | 63.3 | 49.3 | 41.7 | 35.1 | 30.5 |
| 60대 이상 | 59.3 | 45.5 | 38.3 | 32.2 | 27.8 |

출처: 2015년 기준 기업생멸 행정통계 결과

2) 대학 창업혁신 교육에 대한 이견

청년 창업을 둘러싼 정책우선 순위에 대한 시각 차이는 대학에서의 창업교육에 대한 평가에도 영향을 미치고 있다. 대학 창업 교육에 대한 긍정론과 부정론이 맞서고 있다. 스타트업 창업을 대세로 인정하고 대학에서의 창업교육 강화를 주장하는 입장과, 자칫 창업 드라이브 정책이 “생계형 창업”으로 이어질 수 있다는 부정적인 입장이 존재한다.

가. 긍정적 인식

“ 저는 결국 궁극적으로 대학을 바꿔내지 못하면 아무것도 못 바꿀 거라는 생각이 있어서. 물론 역대 사례가 드물지만. 협동조합형태의 조직구조 내지는 미국의 미네르바 같은 대학의 형태, 굉장히 혁신적이면서도 거기도 학위 준다. 물론 방통대 같은 시스템이지만 연합대학의 학위를 주면서, 그래서 이 친구들이 기존의 구조로 들어가려고 해도 들어갈 수 있게 해주거나. 파리 같은 경우도 그렇게 하고 있다고 한다. 그 대학에서는 학위를 안주는데, 학생들이 인근대학에 가서 수업을 듣



고 어느 정도 학점을 따면 그 대학의 학위를 받을 수 있게 체계를 다 구성을 해서 결국 궁극적으로 학생들이 성장해서 사회진입하기 직전의 단계에서 사회혁신에 좀 더 포커스를 맞출 수 있게 하는 교육 구조나 시스템이다.” (라-2)

“ 대학 교육이 창업 위주로 이뤄져야 간다고 본다. 사회와 맞닿아 있는 건데, 자기 일을 스스로 만들지 못하고 왜 기존의 시스템에 맞춰야만 하는지. 그래서 저는 대학 동아리들이 스타트업 쪽으로 바뀔 것이라 취재를 했는데 잘 안 되더라.” (나-4)

나. 부정적 인식

“ 저는 대학 교육에서 창업하면 안 된다고 생각한다. 대학에서 창업 교육을 할 수 있는 전문가가 없다. 최근 대학 창업교육을 말씀드리면 2가지 사례를 봤는데, 지지난주 고대에 창업프로그램 멘토링 갔는데, SK지원 자금을 운영하고 있었다. 학생들이 발표 스킬이 상당히 좋아졌다 예전에 비하면, 발표, 자료 만드는 것, 프로세스 검증 스킬 다 좋아졌다. 그리고 청년창업자들이 ‘린’하게 해야 한다, 가설 세우고 검증해야 한다... 엠브이피 등등이 일상어가 되었다. 제가 몇몇 창업 선도대학을 아는데, 교수들이 창업프로젝트를 따는 게 중요하지 운영은 잘 안되는데. 국민대 창업지원단이 있는데, 창업을 하고 싶은 청년들이 가면 멤버들이 팀을 만들어주고, 잘 되고 있다는 생각. 국민대가 잘 되는 것은 창업에 열정적인 000 교수님이 계신다. 그 분이 정말 엄청 적극적으로 프라이머 같은 외부전문가 부르고 노력하기에 가능하다. 철저하게 교수님들 마인드 문제다. 일반적 대학에서는 쉽지 않다. 청년창업사관학교에 나온 친구들이 그 경험이 도움 되었다고 한 사람도 있고 아닌 청년들이 있다. 제가 어제 들은 웃기는 이야기. 1등 수료한 친구가 그 경험을 대기업 취업에 스펙으로 쓰고 싶다고. 그 사이에 창업선도 대학이 있는데 안 맞는다. 국내에서 민간에서 5-6년 전에 민간 창업 스쿨에서 움직이고 있다.” (다-2)

“ 대중과의 커뮤니케이션을 ‘창업’ 자체만으로 몰면 안 되고. 마지막 열매 속에서 성공하고 실패하는 것이 있지만. 생활능력인거다. 수입지출 관리를 잘하고. 뭔가를 만들어낸다는 것은 꼭 창업이 아니더라도. 필요한 생활능력이다. 4차 혁명 시대에는 이런 것들이 필요해. 하면서 커뮤니케이션을 하면 좋을 것 같다. 그래서 창업 DNA가 있는 사람은 창업하고 학자가 될 사람은 학자 되고 하면 된다.” (다-4).

6. 쟁점 ⑥ - 저변 확대 정책의 효과성 : 1인 기업/여성 창업 지원정책

이명박, 박근혜 정부에서 창업을 적극적으로 권장하고, 1인 창업에 대한 지원을 강화하는 등 원 아이템 창업, 일인 창업 등 소규모 창업 지원을 계속해왔다. 1인 창조기업을 선정하며 마케팅이나 1인 창조기업 비즈니스센터 등의 시설지원 등 다양한 지원정책이 펼쳐지고 있다. 또한 “여성창업 케어 프로그램”이나 “여성창업 경진대회” 등 여성 창업도 권장하는 추세이다. 그러나 인터뷰 결과 원 아이템 창업의 경우 시장의 문턱을 넘기 어렵고, 사회혁신기업도 규모의 경제를 추구해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되었다. 여성창업 환경이 열악하다는 평가도 확인된다.

<표10>을 보면 1인 기업과 2인 이상의 기업 생존율에 차이가 뚜렷하다. 즉 규모의 경제가 작동할 수 있음을 의미한다. 한편 여성 창업의 경우 세계은행 조사에 따르면 한국 뿐 아니라 대부분의 나라에서 대체로 기업 활동에 대한 규제가 여성 CEO 기업



에 불리하다고 보고하고 있다(World Bank 2017). 실제로 <표10>을 보면 한국에서 여성 CEO 기업의 생존율이 남성 CEO 기업의 생존율보다 낮은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 원 아이템 창업과 1인 창업은 계속 권장해야 할 정책인지, 여성 창업을 실질적으로 지원할 수 있는 방안은 무엇인지 향후 추가적인 연구가 필요할 것으로 보인다.

<표10> CEO 성별, 기업 규모별 생존율 차이 (2015년)

(단위: %)

| | 1년 생존율 | 2년 생존율 | 3년 생존율 | 4년 생존율 | 5년 생존율 |
|----------------|-----------|-----------|-----------|-----------|-----------|
| 전체 | 62.4 | 47.5 | 38.8 | 31.9 | 27.3 |
| 남자(A) | 64.3 | 50.3 | 41.7 | 34.9 | 30.2 |
| 여자(B) | 60.0 | 44.2 | 35.4 | 28.4 | 23.9 |
| 성별차이(A-B) | 4.3 | 6.1 | 6.3 | 6.5 | 6.3 |
| 1인 기업(A) | 60.4 | 45.6 | 37.3 | 30.7 | 26.2 |
| 2인 이상 기업(B) | 79.3 | 64.7 | 53.5 | 45.1 | 39.0 |
| 성별차이(A-B) | -18.9 | -19.1 | -16.2 | -14.4 | -12.8 |

출처: 2015년 기준 기업생멸 행정통계 결과

가. 원 아이템 창업

“ 또 한 가지 문제는 원 아이템 원 창업. M&A나 같이 붙여서 만드는 것이 아니라. 대기업이 사지도 않지만 붙여서 여러 명이 하는 게 아니라 혼자 한다. 고객은 사지 않는다. 창업의 그런 문화도 어려운 문화이다. 푸시를 너무 세게 넣고 있고 누군가는 그 결과물을 가지고 SK가 250억을 뿌렸다. 지도마다 상생플러스인가? 지역마다 도마다 몇 십억씩. 최대10개의 스타트업을 키우려 뿌렸다. 지원받은 사람이 뭔가를 해야 하는 상황. 어설픈 아이템을 밀어주고 그것이 창업이다 하는 문화. 기존 시장은 받아 주지 않는 상황이다.” (다-3)

나. 규모의 경제

“ 지금은 공공성을 자임하는 조직이 너무 점유율 작아서 못하는 사업이 많다. 규모를 키우려 하는 이유는 그래서이다. 규모가 크면 처우도 좋아질 뿐만 아니라, 영리업 쪽으로 넘어가있는 부분의 성격을 선도할 수 있는 부분이 있다. 또 하나는, 하나의 서비스를 상당 부분 점유하고 있으면 다른 서비스에 영향을 줄 수가 있다.” (가-4)

다. 여성 창업

“ 사회문제를 해결하려면 공감능력이 있어야 하는데, 특히 여성 문제에 있어서는 남성이 공감하는데 한계가 있다. 어쩔 수 없다. 그래서 여성 투자자가 아시아에서 나와서 여성문제를 해결할 투자자가 나왔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한다.” (가-2)



V 맺으며

지금까지 한국사회 혁신생태계의 현 주소를 진단하고 한 단계 진전된 혁신 생태계 조성 방안에 대한 현장의 목소리를 정리해보았다. 주요 논의를 정리해보면 다음과 같다.

1. 정부혁신 없이 사회혁신 없다

혁신가들은 한국사회 혁신생태계는 정부 지원에 과도하게 의존하는 체제로 보고 있으며, 따라서 문제 진단과 대안에 대한 논의의 대부분은 정부 역할에 집중되고 있다. 열악한 혁신 조직들의 상황을 고려할 때 초기 단계에서는 일정하게 긍정적 역할을 해왔던 것으로 볼 수 있다. 특히 혁신스타트업 창업에 필요한 초기 자본(스타트업 지원과 기술창업 지원)과 각종 공간 각종 지원 정책들에 대한 평가는 긍정적인 평가가 지배적이었다. 그러나 현 시점에서의 정부 역할은 긍정적 기능보다 혁신생태계를 왜곡시키는 부작용이 더 크다는 진단에 이견이 없었다. 정부 역할의 부정적인 효과는 크게 (1)규제 (2)지원정책 (3)민관관계 차원에서 나타난다.

1) 규제 혁신

- 혁신가들은 현재의 정부 규제가 변화된 환경변화를 쫓아가지 못하고(예: 공유경제의 부상) 기존 사업주 중심의 잣대를 적용하거나 형식주의(문서중심), 경직된 예산 집행구조가 규제 비효율을 낳고 있다고 지적한다.
- 표면적으로는 소비자 보호를 명분으로 한 인·허가권을 무기로 혁신기업들에게 진입장벽으로 작동하면서 현재의 기득권을 보호하는 기능을 하고 있으며 민간 영역의 자율적 혁신 활동을 오히려 억제하고 있다는 냉소적 태도도 확인되고 있다.
- 이에 대해 혁신가들은 사회혁신을 위한 다양한 실험과 전파를 위해 “규제 샌드박스의 도입”, “네거티브 규제로의 전환”을 통해 혁신산업의 활성화를 보장해야 하며, 소비자들의 선택권을 확대하고, 시장에서의 자율적 규율을 강화하는 방향으로 정책 방향을 전환해야 한다고 주문한다.



2) 정부 지원 혁신

- 지원 정책 중 정책금융과 관련하여 혁신가들은 스타트업에 편중된 지원(사회적 임팩트를 목적으로 한 사회적 기업에 대한 지원의 부족), 위험을 감수한 투자 대신 책임전가형 “연대보증제”의 유지, “대출 중심의 금융지원” 정책을 한계로 꼽고 있다. 대안으로 “실시간 기장제 도입”, “인내투자 자본” 구축 등을 제시하고 있다.
- 특히 재정 지원 이후 효과적인 모니터링의 부재는 문서행정에 대한 과도한 의존과 도덕적 해이, 편법 예산집행을 유발로 이어진다고 비판한다. 특히 R&D 영역에서는 성공률 위주의 양적 평가나 형식 평가에 그치고, 정작 내용에 대한 질적 평가가 누락되는 있어 제대로 된 성과평가체계가 시급하다는 진단도 제기되었다.
- 그 대안으로서 혁신스타트업계는 “엔젤투자”, “사회투자기금”, “사회성과연계 채권(SIB)” 등 민간 투자 시장을 활성화하고, 기업공개(IPO) 및 M&A 시장을 확대하여 혁신 스타트업의 출구(exit) 확보를 원활히 하는 것도 생태계 발전의 중요한 과제라고 입을 모았다.
- 반대로 정부의 실패를 보완하거나 대체하며, 사회적 가치 실현을 목적으로 한 소셜벤처나 사회적 기업, 혁신적 비영리기업에 대해서는 정부의 보상과 재정적, 정책적 지원을 강화하는 등 혁신의 영역별로 차별화된 정책 대응을 주문하기도 했다.

3) 민간-중간조직-정부 간 협력 거버넌스

- 정부와 혁신조직간의 관계에 있어서는 정부의 “갑질 횡포”가 여전하다고 불만을 토로했고, 정부 지원을 대행하는 중간조직들의 기득권화 문제는 혁신생태계의 자율적 경쟁과 협력을 억제하는 요인으로 이해되고 있다.
- 사회적 기금 모금을 독점하거나 정부 지원정책을 대행하는 중간 조직들은 혁신 조직들과 협력적 파트너십을 형성하기 보다는 관료적, 수직적 위계 관계를 우선함으로써 혁신의 걸림돌로 자리 잡고 있다는 지적이다.



2. 혁신역량에 대한 자성

하지만 혁신조직 스스로에 대한 자성의 목소리도 적지 않았다. 스스로의 혁신 없는 혁신조직은 정부 지원의 효과를 스스로 잠식하고 있다고 비판한다.

1) 혁신가 지원 체계의 혁신

- 현재 스타트업, 사회적기업, 비영리 혁신조직의 보상체계는 매우 심각한 상황이다. 혁신이라는 가치에 대한 신념을 약화시키고 결과적으로 혁신인력의 유출을 양산하는 악순환구조이다. 문제는 보상체계의 중요성에 대한 문제의식조차 공유되지 못하고 있으며, 결실의 분배 방법에 대한 논의가 미진하다는 점을 지적한다.
- FGI에서는 혁신역량을 육성하기 위한 공교육 시스템과 정부/민간 영역의 교육 프로그램 혁신이 필요하며, 인큐베이팅 체계가 제대로 작동하기 위해서는 혁신의 경험과 사례를 갖고 있는 현장경험 중심의 교육프로그램으로 전환해야 한다는 주장을 내놓고 있다.
- 혁신역량 구축을 위한 교육 시스템은 “현장 중심 교육(learning by doing)”, “좀비 멘토(권위와 자격에 의존한 멘토링)의 혁신 멘토로의 대체”를 주장하고 있다.

2) 혁신 친화 문화

- 혁신가들은 혁신조직에 비우호적인 사회문화적 환경도 시급하게 개선해야 할 과제로 인식하고 있었다. 즉 혁신을 권장하고 이를 실현하기 위한 창의적인 시도들이 자유롭게 논의되고 상호 교류되어야 한다.
- 그러나 한국사회 혁신생태계에는 여전히 기존 사업영역에 안주하려는 경향, 실력보다 명성, 토론보다 연배와 권위를 앞세우는 수직적 문화(유교문화)가 자리 잡고 있다고 비판하고 있다.
- 또한 언론을 통해 유포되는 혁신가들에 대한 왜곡된 이미지(예: “성실실패의 부재, 재기불능 환경”)나 보편적인 반기업 정서의 미비판적인 수용 분위기도 사회혁신 활동과 우수 인력 유치를 어렵게 하고 있다고 보고 있다.



3. 혁신 생태계 2.0 과제

혁신가들이 바라는 새로운 사회혁신 생태계의 모습은 “정부주도 생태계”에서 “협력·분산·자율 생태계”의 모습으로 이동하고 있다. 이러한 방향으로 전환하는 과정에서 혁신가들의 시각 차이가 두드러진 쟁점들도 나타났다. 이는 혁신 생태계 2.0 시대를 열어가고 정착시켜 나가는 데 핵심적인 문제로 떠오를 것으로 예상된다.

1) 혁신 전략의 우선순위 논쟁 : 역량 vs. 환경, 생존 본능 vs. 자원론

- 혁신생태계 2.0으로 가기 위한 비전과 전략수립과정에서 혁신의 동력이 무엇인지에 대한 사회적 합의를 이루는 것이 중요하다. 자원배분의 우선순위와 정책 수단을 결정하는데 판단의 근거가 되는 출발점이기 때문이다.
- FGI 조사 결과를 보면 생태계 환경개선론과 내부 역량에 대한 자성론이 충돌하고 있다. 혁신가 지원에 있어서도 자칫 정부 지원이 도덕적 해이를 부추길 수 있다는 우려와 사실상 인적자본, 사회적 자본을 갖춘 기업이 성공하는 상황을 고려하면 무차별적인 지원은 자원의 중복지원으로 비효율성을 강화시킬 것이라는 우려가 제기된다.

2) 혁신역량 보상체계 논쟁 : 원칙론 vs. 현실론 vs. 진화론

- 열악한 혁신조직의 보상체계나 심지어 기본적인 노동, 인권 조건에 부합하지 못하는 노동조건으로 인해 혁신역량의 육성과 축적이 제대로 이루어지지 못하는 문제에 대한 혁신가들 사이의 입장차이가 두드러지고 있다.
- 이에 대해서는 보편적 노동/인권 기준에 부합하는 보상체계를 구축해야 한다는 ‘원칙론’과 현재의 열악한 조건 상 불가피하다는 ‘현실론’, 현재 노동사회 환경의 변화에 따른 보상 개념 자체의 새로운 잣대가 필요하다는 ‘진화론’으로 대비된다.
- 혁신 스타트업의 경우 당장의 임금 인상이나 복지 확대보다는 ‘스톡옵션’ 등 성과연계형 보상방안을 확대해야 한다는 대안도 도출되었다.



3) 현 정책 지원의 우선순위 : 청년창업 대 성숙창업, 1인 기업/여성 창업 육 성정책의 효과성

- 정부의 혁신기업 창업지원은 주로 청년실업 문제로 인해 청년창업을 강조하고 있다. 이러한 정책 방향에 동의하는 입장과 오히려 창업기업의 생존과 성공은 실패의 경험과 그 과정에서 축적된 사회자본, 인적 자본에 의존하기 때문에 성숙기업에 대한 창업 지원이 중요하다는 입장이 대립하고 있다.
- 또한 1인 창조기업, 여성CEO 창업지원 정책을 통해 창업의 저변을 확대하려는 정책을 펼치고 있지만, 1인 기업과 여성 CEO 기업의 생존율의 경우 상대적으로 낮은 생존율을 보이고 있다. 이들 정책의 효과성에 대한 심층적인 정책 진단과 대안이 필요하다.

이상으로 각 분야에서 한국사회의 혁신을 이끌어온 혁신가 21인이 바라 본 한국사회 혁신생태계의 문제점과 문제해결의 방향에 대한 논의를 정리하였다. 각 분야 현장에서 도출된 평가와 아이디어가 집약된 논의를 담았다는 점에서 그 어떠한 정책보고서보다 생생하면서도 종합적으로 현 단계의 한국사회 혁신 생태계를 조망하는 분석자료로서 유용하리라 본다. 동시에 그 어떤 정책수요조사보다 혁신영역의 정책적 수요를 파악하는 데에도 유용한 데이터로서 활용할 수 있을 것이다.

이러한 맥락에서 본 보고서는 혁신가들의 목소리를 가감 없이 생생하게 전달하고, 이들의 통찰과 안목을 체계적으로 정리하는데 초점을 맞추었음을 밝혀둔다. 다만 즉 FGI 조사보고서의 특성상 보고서의 내용은 객관적인 현실 그 자체가 아닌 혁신가들의 인식에 반영된 현실이라는 점을 다시 강조하고자 한다. 즉 보고서에 인용된 발언자들의 판단, 근거, 통계적 수치는 주관적 인식의 산물이므로 발언자의 부정확한 기억과 단순한 표현상의 실수가 포함되어 있을 수 있음을 감안해야 한다. 또한 보고서의 정리 과정에서 필자가 정리하는 과정에서의 오독 혹은 편향적 해석의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 응답자들의 인용문을 중심으로 독자의 비판적, 주체적인 수용이 필요하다는 점을 강조하고 싶다.



<참고문헌>

- 곽선화·김미희·강승화·류정란. 2011. 『2007-2010년 사회적기업 성과분석』. 고용노동부·한국사회적기업진흥원.
- 경제관계장관회의. 2015. 『정부 창업지원사업 효율화 방안: K-스타트업 통합브랜드 출범』 15-19. 관계부처합동, 1-23.
- 김정호·한정희. 2014. “제품 전략과 CEO 특성이 벤처기업의 성장에 미치는 차별화된 효과: 조직수명주기 단계의 조절 역할.” 『기술혁신연구』 제22권 1호, 23-58.
- 동아시아연구원. 2009. “미래사회 중산층 변동 전망과 대책.” 미래기획위원회 용역보고서.
- 벤처기업협회. 2017. 『벤처기업현황』 2017년 2월.
- 벤처투자정보센터. 2017. 『Venture Capital Market Brief』 2017년 1월.
- 손을춘. 2014. “사회적기업 지원제도의 문제점과 개선방향.” 『NARS 현장조사 보고서』 29, 1-88.
- 유정주·이가영·엄지혜. 2012. “규제개혁 종합건의.” 『FKI 규제개혁 시리즈』 제12-03호.
- 이숙종. 2010. “한국사회의 양극화 문제와 사회통합.” 이숙종·장훈 편. 『세계화 제2막: 한국형 세계화의 새 구상』, 165-188. 서울: 동아시아연구원.
- 이용희·박수홍. 2014. “벤처기업 창업자의 성공요인 분석을 통한 창업교육에 대한 시사점 탐색.” 『벤처창업연구』 제9권 6호, 231-244.
- 이윤준. “창조경제 시대의 창업 활성화 방안.” 『과학기술정책』 제23권 2호, 10-21.
- 이종한. 2014. “규제개혁시스템 개선방안.” 한국행정연구원 ISSUE PAPER 2014-03, 1-5.
- 2013. “진흥과 규제, 그리고 정부의 역할.” 『KERI Column』 (3월 22일), 1-3.
- 이주선. 2007. “규제개혁추진체계 개선방안.” 한국경제연구원 ISSUE PAPER 07-10, 1-42.
- 이재열·고동현·문명선. 2016. “사회발전과 사회적 가치 평가의 프레임.” 『Social Innovation Monitor』 Vol.3, 1-52.
- 이재열·남은영·전혜정·석재은. 2011. 『저출산 고령화와 삶의 질 1』, 서울: 한국보건사회연구원.
- 이혁우·김진국. 2015. “규제개혁의 창: 추진체계 정비.” 『규제연구』 제24권, 3-37.
- 장용석·김희성·황정운·유미형. 2015. 『사회적 혁신 생태계』. 서울: 씨에스컨설팅앤드미디어.
- 장훈·김병국·정진영 편. 2006. 『경제를 살리는 민주주의』. 서울: 동아시아연구원.
- 최원락. 2015. “네거티브 규제방식 추진동향과 활성화 방안.” 『FKI 규제개혁 시리즈』



- 제15-04호.
- 정한울. 2016. “가치창출 분석틀로 본 사회적기업 2.0의 정책과제.” 『Social Innovation Monitor』 Vol.6, 1-47.
- 조성주·이상명·박병진. 2014. “린 스타트업: 창업 초기기업의 실패 최소화 전략.” 『벤처창업연구』 제9권 4호, 41-53.
- 최병선·최종원. 2008. 『국가운영 시스템: 과제와 전략』 파주: 나남.
- 최병선·이혁우. 2014. “한국 규제개혁시스템의 혁신방안.” 『규제연구』 제23권, 3-33.
- 통계청. 2016. 『2015년 기준 기업생멸 행정통계 결과』 보도자료.
- 미래창조과학부· K-ICT 본투글로벌센터. 2016. 『2015 대한민국 글로벌 창업백서: Korea Startup Index』 (2016년 1월).
- 현대경제연구원. 2013. “최근 규제개혁의 성과와 한계.” 『경제주평』 13-41, 1-14.
- 제18대 대통령직인수위원회. 2013. 『박근혜정부 국정비전 및 국정목표』. 대통령직인수위원회.
- Alter, Kim. 2007. *Social Enterprises Typology*. (www.virtueventures.com updated November 27, 2007, 검색일 2016/05/02).
- Beck, Ulrich. 1994. “The Reinvention of Politics: Towards a Theory of Reflexive Modernization.” in U. Beck and Anthony Giddens, and Lash Scott. *Reflexive Modernization, Politics, Tradition, and Aesthetics in the Modern Social Order*, 1-55. Stanford University Press.
- Colombelli, Alessandra, Jackie Krafft, and Marco Vivarelli. 2016. “To Be Born Is Not Enough: The Key Role of Innovative Startups.” *IZA Discussion Paper No.9733*: 1-33.
- Colombo, Massimo G. and Luca Grilli. 2010. “On Growth Drivers of High-tech Start-ups: Exploring the Role of Founder’s Human Capital and Venture Capital.” *Journal of Business Venturing* 24: 610-626.
- 2005. “Founder’s Human Capital and the Growth of New Technology-based Firms: A Competence-based View.” *Research Policy* 34: 795-816.
- Defourny, Jaques and Marthe Nyssens. 2013. “Social Innovation, Social Economy and Social Enterprise: What Can the European Debate Tell US?” in *The International Handbook on Social Innovation*. Cheltenham, UK: Edward Elgar: 40-53.
- 2012. “The EMES Approach of Social Enterprise in a Comparative Perspective.” *EMES European Research Network Working Paper No. 12/03*.
- Gage, Deborah. 2012. “The Venture Capital Secret: 3 Out of 4 Start-Ups Fail.” *The Wall Street Journal*. (2012. 9. 20)



- Kerlin, Janelle A. 2010. "A Comparative Analysis of the Global Emergence of Social Enterprises." *Voluntas* 21: 162-179.
- "Study of Core Subjects and Strategy of Venture Companies in Each Growing State." *The Journal of e-Business* 7(1): 119-140.
- Nikolaj, Malchow-Møller, Bertel Schjerning, and Anders Sørensen. 2011. "Entrepreneurship, Job Creation and Wage Growth." *Small Business Economics* 36(1): 15-32.
- Mulgan, Geoff, Simon Tucker, Rushanara Ali, and Ben Sanders. 2007. "Social Innovation: What It is, Why It Matters and How It Can Be Accelerated." *SKOLL Center For Social Entrepreneurship Working Paper*, SAID Business School, University of Oxford: 1-52.
- Phills Jr., James A., Kriss Deiglmeier, and Dale T. Miller. 2008. "Rediscovering Social Innovation." *Stanford Social Innovation Review* Fall 2008: 33-43.
- Rodrik, Dani. 2015. "From Welfare State to Innovation State." *Project Syndicate* (2015. 1. 14)
- World Bank. 2017. *Doing Business 2017: Equal Opporetunity for All*. World Bank Group.
- . 2013. *Doing Business 2013: Smarter Regulations for Small and Medium-size Enterprises*. World Bank·International Finance Corporation.



[부록] 정부 창업지원 체계

중소기업청(창업진흥원 운영) K-startup(창업넷) : www.k-startup.go.kr
창업교육/시설공간/멘토링-컨설팅/사업화/정책자금/R&D/판로-해외진출/행사-네트워크/정책자금



1) 비정책자금 영역 : 2017년 정부 창업지원
(중소기업청 공고 제2016-410호, 미래창조과학부 공고 제2016-578호, 2016.12.30.)

A. 직접 지원

| 사업명 | 모집구분 | | 예산 (억원) | 소관 부처 |
|--------------------|-------------------------|-------------------------------|------------|----------|
| | 지원대상 | 주관(수행)기관 | | |
| 창업교육 | | | | |
| ·창업교육지원 | | | | |
| - 청소년 비즈쿨 | 초·중·고등학생 등 청소년 | 초·중·고교 등 | 76.6 | 중기청 |
| - 창업아카데미 | 대학생, 예비 및 3년 미만 기창업자 | 대학, 연구·공공·민간기관 | 20.8 | 중기청 |
| ·창업대학원 | 창업학 석사과정 희망자 | 창업대학원 | 7.2 | 중기청 |
| ·장애인 맞춤형 창업교육 | 장애인 예비창업자 및 장애인기업 | (재)장애인기업 종합지원센터 | 9.7 | 중기청 |
| ·시니어기술창업지원 | 만 40세 이상 (예비)창업자 | 지자체 및 대학 | 47.4 | 중기청 |
| ·스마트창업터 | 예비창업자 및 3년 이내 창업기업 | 대학 등 전문기관 | 98.4 | 중기청 |
| ·대학창업교육 체계 구축 | 대학생 및 대학 교수 등 대학 관계자 | 한국연구재단 한국청년기업가 정신재단, 대학 | 15.5 | 교육부 |
| ·스포츠산업창업지원 | 스포츠산업 예비창업자 | 대학, 선정된 연구·공공·민간기관 | 26. 5 | 문체부 |
| | 스포츠산업 3년 미만 초기 창업기업 | 선정된 창업엑셀러레이터 | | 문체부 |
| 시설·공간 | | | | |
| ·크리에이티브팩토리 지원사업 | 예비창업자 및 7년미만 창업기업 | 크리에이티브팩 토리 | 80 | 중기청 |
| ·창업보육센터 지원 | | | | |



| 사업명 | 모집구분 | | 예산 (억원) | 소관 부처 |
|--|---|------------------------------------|------------|----------|
| | 지원대상 | 주관(수행)기관 | | |
| - 건립지원사업 | 창업보육센터 | 지방중소기업청, 한국창업보육협회 | 30 | 중기청 |
| - 보육역량 강화지원 | 창업보육센터 | 한국창업보육협 회 | 72 | 중기청 |
| .시제품 제작터 운영 | 예비창업자 또는 창업기업 | 지방중소기업청 (경기, 대구, 광주, 부산, 전북) | - | 중기청 |
| .1인 창조기업 비즈니스센터 | 1인 창조기업 및 예비 1인 창조기업 | 공공·민간기관 등 | 66 | 중기청 |
| .장애인 창업보육실 운영 | 장애인 예비창업자 및 창업초기 장애인기업(3년미만) | (재)장애인기업 종합지원센터 | 6.5 | 중기청 |
| .장애인 창업점포 지원 | 장애인 예비창업자 | (재)장애인기업 종합지원센터 | 28.6 | 중기청 |
| .K-Global 빅데이터 스타트업 지원 | 대학생, 예비 및 기 창업자 등 | 대학, 연구·공공·민간기관 | 8.4 | 미래부 |
| .K-Global 스마트콘텐츠 허브활성화사업 | 스마트콘텐츠 제작, 서비스, 마케팅 등 관련 분야의 국내 유망 중소기업 | 정보통신산업진 흥원 | 8 | 미래부 |
| 멘토링·컨설팅 | | | | |
| .선진글로벌 교육 제공(K-Global 기업가정신 및 인큐베이팅 인턴십) | ICT 기반 우수 유망 스타트업, 중소·중견 벤처기업 대표(내국인) 및 해외 진출 가능성이 높은 국내 우수 스타트업 | 정보통신산업진 흥원 | 7 | 미래부 |
| .벤처1세대 멘토링 프로그램운영 (K-Global 창업멘토링) | ICT기반 창업초기·재도전기업, 대학창업동아리 | (재)한국청년기업 가정신재단 | 29. 9 | 미래부 |
| .6개월 챌린지 플랫폼 사업 | 아이디어의 사업화를 준비하는 예비창업자 및 신청일 기준 창업 1년 이내 기업 | 연구개발특구진 흥재단 | 112 .5 | 미래부 |
| .엑셀러레이터 연계지원 사업 | 혁신센터를 통해 검증된 창업기업, '6개월 챌린지 플랫폼' 졸업기업 등 | 연구개발특구진 흥재단 | 91 | 미래부 |
| .우주기술 기반 벤처창업 지원 및 기업역량 강화(STAR-Exploratio n)사업 | 우주기술을 활용한 창업/신사업 창출에 관심 있는 예비창업자 및 기업 | 한국항공우주연 구원 | 2.5 | 미래부 |
| .농식품 클라우드펀딩 컨설팅 비용지원 | 창업 7년 이내 농식품 기업 | 농업정책 보험금융원 | 1.2 | 농식품 부 |
| .농촌현장 창업보육 | 창업 5년 미만 농식품 기업 | 농업기술 실용화재단 | 4.8 | 농식품 부 |
| .IP 디딤돌 프로그램 | 예비창업자 | - | 26 | 특허청 |
| .IP 나래 프로그램 | 기술기반 창업기업 | 지역지식재산센 터 | 72 | 특허청 |
| 사업화 | | | | |
| .창업사업화지원 | | | | |
| - 창업도약패키지 | 3년 이상 7년 미만 창업기업 | 창업진흥원 | 500 | 중기청 |
| - 선도벤처연계 기술창 업 | 예비창업자 및 3년 미만 창업기업 | 창업진흥원 등 | 70 | 중기청 |
| - 창업인턴제 | 대학(원) 재학(대학생은 4학기 이상 수료자) 및 고등학교·대학(원) 졸업 후 7년 이내 미취업자 | 창업진흥원 등 | 50 | 중기청 |
| - 민관공동 창업자 발굴육 성(TIPS 창업팀 지원) | TIPS창업팀 중 3년 미만 창업기업 | 창업진흥원 | 150 | 중기청 |



| 사업명 | 모집구분 | | 예산 (억원) | 소관 부처 |
|--------------------------------------|---|-----------------------------|------------|------------|
| | 지원대상 | 주관(수행)기관 | | |
| | (창업사업화 자금지원) TIPS창업팀 중 7년 미만 창업기업 (해외 마케팅 자금지원) | | | |
| - 스마트벤처 창업학교 | 만 39세 이하 예비창업자 및 3년 이내 창업기업 | 대학 등 전문기관 | 121.5 | 중기청 |
| - 상생 서포터즈 청년.창업 프로그램 | 7년 미만 창업기업, 벤처기업 | 대.중소기업협력 재단 등 | 100 | 중기청 |
| .창업선도대학 육성(LINC) | 예비창업자 및 3년미만 창업기업 | 창업선도대학 | 922 | 중기청 |
| .창업성공패키지 (청년창업사관학교) | 만39세 이하의 창업3년 이내의 자(기업) | 중소기업진흥공 단 | 500 | 중기청 |
| .여성벤처창업 케어 프로그램 | 여성 예비(벤처)창업자 | (사)한국여성벤처 협회 | 5 | 중기청 |
| .장애인기업 제품디자인 및 시제품제작지원 | 장애인 예비창업자 및 장애인기업 | 장애인기업종합 지원센터 | 4.7 | 중기청 |
| .패키지형 재도전 지원사업 | (예비)재창업자 또는 재창업 3년 미만 기업 | 창업진흥원, 정보통신산업진 흥원 | 125 | 중기청 미래부 |
| .K-Global Re-Startup 민간투자연계지원사업 | 7년 미만의 창업기업 | 민간기관 | 50 | 미래부 |
| .K-Global Startup 공모전 | ICT분야(SW, IoT, DB등) 예비창업자 및 창업기업 | 정보통신산업진 흥원 | 10 | 미래부 |
| .K-Global 액셀러레이터 육성 | ICT 및 SW 분야 예비창업자, 재도전 기업, 스타트업, 벤처기업 | 액셀러레이터 | 18 | 미래부 |
| .K-Global Startup 스마트 디바이스 | 스마트 디바이스 분야 중소, 벤처, 창업기업 및 예비 창업자, 학생 등 | 공공기관 | 14 | 미래부 |
| .K-Global 스마트미디어 | 신규 스마트미디어 서비스 아이디어를 가진 중소·벤처 개발사, 1인 창조기업 등 | 중소·벤처 개발사 등 | 7 | 미래부 |
| .K-Global DB-Stars | 데이터 활용 BM(아이디어)을 보유한 연 매출 5억원 미만의 스타트업, 개인개발자 | 한국데이터진흥 원 | 4.5 | 미래부 |
| .K-Global 클라우드기반 SW개발환경지원 | 예비창업자 및 스타트업 | 정보통신산업진 흥원 | 4 | 미래부 |
| .K-Global 시큐리티 스타트업 | 정보보호 우수 아이디어를 보유하고, 해당 아이디어의 구현 기술을 보유한 예비 창업희망자 | 한국인터넷진흥 원 | 1 | 미래부 |
| .K-Global Startup IoT 신제품 개발지원 사업 | 예비 창업자, 스타트업, 중소·벤처기업 | 예비 창업자, 스타트업, 중소·벤처기업 | 3.6 | 미래부 |
| .K-Global 스타트업 다국적화 지원 | ICT 해외 인력 채용계획이 있고 이를 활용해 조직 구성 다국적화, BM 및 사업아이템의 글로벌화를 희망하는 국내 스타트업 | 정보통신산업진 흥원 | 20 | 미래부 |
| .사회적기업가 육성사업 | 예비창업자 또는 1년 미만 창업기업 | 한국사회적기업 진흥원 | 150 | 고용부 |
| .창업발전소 스타트업 육성 지원 | 예비창업자 및 창업 3년 미만 기업 | 한국콘텐츠진흥 원 | 15 | 문화부 |
| .관광벤처사업 발굴 및 지원 | 예비창업자 및 창업 3년 미만 기업, 창업 3년 이상 중소기업 | 한국관광공사 | 22 | 문화부 |



| 사업명 | 모집구분 | | 예산 (억원) | 소관 부처 |
|---|--|--------------------|------------|----------|
| | 지원대상 | 주관(수행)기관 | | |
| .기술가치평가 지원 | 농식품 관련 IP(품종보호권, 특허권 등)를 보유한 농식품 창업 기업 | 농업기술 실용화재단 | 2.4 | 농식품 부 |
| R&D | | | | |
| .창업성장기술개발 창업기업과제 | 창업 후 7년 이하인 중소기업 | 중소기업 | 1,306 | 중기청 |
| .창업성장기술개발 기술창업투자연계과제 | 창업 후 7년 이하인 중소기업 | 중소기업 | 645 | 중기청 |
| .창조혁신형 재도전 기술개발사업 | 예비창업자 및 재창업기업 (7년미만) | 중소기업기술정 보진흥원 | 38 | 중기청 |
| .K-Global ICT유망기술개발 지원사업(ICT창업.재도전 기술 개발지원) | (창업) 예비 창업자 및 창업 1년 미만의 중소.벤처 창업기업 (재도전) 재도전 기업인의 재창업 기업 * 재창업 기업의 경우 신청일 기준 3년 이내 법인설립 기업에 한함 | 중소.중견기업 | 30 | 미래부 |
| .투자연계형 기업성장 R&D 지원 | 「중소기업창업지원법」 제2조제2호에 따른 창업기업(팀) | 중소기업기술정 보진흥원 | 120 | 미래부 |
| .K-Global SW전문 창업기획사 | ICT 및 SW 분야 예비창업자, 재도전 기업, 스타트업, 벤처기업 | 액셀러레이터 | 15 | 미래부 |
| .농식품 벤처창업 R&D 바우처사업 | 창업 및 벤처 최초 인증 5년 이하 중소기업 | 농림수산식품기 술기획평가원 | - | 농식품 부 |
| 판로.해외진출 | | | | |
| .글로벌창업기업 발굴·육성프로그램 | (글로벌진출지원) 5년 미만 창업기업 (외국인창업) 학사학위 이상 취득한 ①외국인 또는 ②재외동포 또는 ③귀환 유학생 중 예비창업자 또는 3년 미만 창업기업 | 창업진흥원 | 53 | 중기청 |
| .1인 창조기업 마케팅 지 원 | 1인 창조기업 및 예비 1인 창조기업 | 민간기업 | 40 | 중기청 |
| .K-Global 해외진출사업 | ICT융합분야 예비 및 7년이내 기창업자 | 민간기관 | 51.8 | 미래부 |
| .K-Global 데이터 글로벌 | 데이터 분야 스타트업, 중소·중견기업 | 한국데이터진흥 원 | 3.6 | 미래부 |
| .농산업체 판로지원 (A-startup 마켓 입점지원) | 농식품 분야 7년 미만 창업업체 제품 | 농업기술 실용화재단 | 3 | 농식품 부 |
| 행사.네트워크 | | | | |
| .벤처창업대전 | 벤처·창업기업, 청년기업 등 | 창업진흥원 | 2.3 | 중기청 |
| .대한민국 창업리그 | 예비창업자 및 3년 이내 창업기업 | 지방 중소기업청 | 14 | 중기청 |
| .장애인 창업아이템 경진대회 | 장애인 예비창업자 및 창업 1년 미만 장애인기업 | (재)장애인기업 종합지원센터 | 0.5 | 중기청 |
| .여성창업경진대회 | 예비여성창업자 및 2년 미만 여성기업(공고일기준) | (재)여성기업종합 지원센터 | 0.9 | 중기청 |
| .2017 농식품 창업 콘테스트 | 농식품 분야 창업 5년 이내 (예비)창업자 | 농업기술 실용화재단 | 4 | 농식품 부 |
| .대한민국 지식재산대전 | 전 국민 | 한국발명진흥회 | 12.7 | 특허청 |
| 총 계 | | | | |



* 창업기업에 대한 융자, 보증, 투자는 별도 공고

관련 링크

팁스

(Tech Incubator Program for Startup, TIPS) : <http://www.jointips.or.kr/>

TIPS 프로그램(민간투자주도형 기술창업지원, 이스라엘식)은 세계시장을 선도할 기술아이템을 보유한 창업팀을 민간주도로 선발하여 미래유망 창업기업을 집중 육성하는 프로그램. 글로벌시장을 지향하는 기술력을 갖춘 유망한 창업팀에게 과감한 창업도전 기회를 제공하기 위하여 성공벤처인 중심의 엔젤투자사, 초기전문 VC, 기술대기업 등을 운영사로 지정하여 엔젤투자·보육·멘토링과 함께 R&D자금 등을 매칭하여 일괄 지원. 대학 및 연구기관 등과의 컨소시엄을 통해 창업팀에 보육공간을 제공하며, 운영사의 단계별 엔젤투자에 매칭방식으로 창업팀당 최장 3년간 투자 1억원, R&D 5억원 및 추가투자 최대 4억원을 지원(창업자금 1억원, 엔젤매칭펀드 2억원, 해외마케팅 1억원)

산학협력선도대학 육성사업

(Leaders in INdustry-University Cooperation, LINC) <http://linc.nrf.re.kr/>

대학-기업간 산학협력을 통하여 대학교육 시스템을 개선함으로써 취업 미스매치 해소 및 대학과 지역산업의 공생발전을 견인하는 산학협력 선도대학(LINC) 육성. 지역대학의 인재유출 방지 및 취업 미스매치 해소를 위해 산학협력을 통한 교육시스템 개선과 지역산업 성장 견인 목적으로 이공계 일부 학과 중심의 산학협력 사업을 대학 전체로 확대하여 산학협력을 교육·연구와 더불어 대학의 주류활동으로 정착.

2) 정책자금

A. 중소기업진흥원(SBC) 정책자금 융자 : <http://hp.sbc.or.kr>

<2017년 중소기업청 소관 중소기업 정책자금 계획> 중소기업청 공고 제2017-91호



| 사업별 정책자금 | 대상 | 규모 총 3조5850억원 |
|--------------|---|---------------------|
| 1. 창업기업지원자금 | 우수한 기술력과 사업성은 있으나 자금력이 부족한 중소·벤처기업의 창업을 활성화하고 고용창출을 도모 | 16,500억원 |
| 2. 투융자복합금융자금 | 기술성과 미래 성장가치가 우수한 중소기업에 대해 융자에 투자요소를 복합한 방식의 자금지원으로 창업활성화 및 성장단계 진입을 도모 | 1,500억원 |
| 3. 신시장진출지원자금 | 중소기업이 보유한 우수 기술의 제품화·사업화 촉진 및 수출품 생산비용을 지원하여 기술기반 수출 중소기업을 육성 | 5,750억원 |
| 4. 신성장기반자금 | 사업성과 기술성이 우수한 성장유망 중소기업의 생산성 향상, 고부가가치화 등 경쟁력 강화에 필요한 자금을 지원하여 성장 동력 창출 | 8,800억원 |
| 5. 재도약지원자금 | 사업전환, 구조조정, 재창업 지원을 통해 재도약과 경영정상화를 위한 사회적 기반 조성 | 2,550억원 |
| 6. 긴급경영안정자금 | 경영애로 해소 등 긴급한 자금소요를 지원하여 중소기업의 안정적인 경영기반 조성 | 750억원 |

| 창업기업 지원 정책자금 | 내용 |
|-----------------|--|
| 1) 창업기업 지원 자금 | <p><u>사업개요</u></p> <ul style="list-style-type: none"> 우수한 기술력과 사업성은 있으나 자금력이 부족한 창업초기기업의 생산 설비, 사업장 건축·매입자금 및 기업활동 자금을 지원합니다. <p><u>지원대상</u></p> <ul style="list-style-type: none"> 『중소기업창업 지원법』 시행령 제2조 및 제3조의 규정에 의한 사업 개시일로부터 7년 미만(신청·접수일 기준)인 중소기업 및 창업을 준비 중인 자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민간투자연계자금 : 민간벤처캐피탈로부터 10억원 이상 투자를 받은 기업 또는 민간운용사가 선정한 TIPS 창업팀 <p><u>융자 범위</u></p> <ul style="list-style-type: none"> 시설자금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생산설비 및 시험검사장비 도입 등에 소요되는 자금 - 정보화 촉진 및 서비스 제공 등에 소요되는 자금 - 공정설치 및 안정성평가 등에 소요되는 자금 - 유통 및 물류시설 등에 소요되는 자금 - 사업장 건축자금, 토지구입비, 임차보증금 * 토지구입비는 건축허가가 확정된 사업용 부지 및 산업단지 등 계획 입지의 입주계약자 중, 6개월 이내 건축착공이 가능한 경우에 한함 - 사업장 확보자금(매입, 경·공매) * 사업장확보자금은 사업영위 필요에 따라 기업당 3년내 1회로 한정 지원 운전자금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창업소요 비용, 제품생산 비용 및 기업경영에 소요되는 자금 <p><u>융자 조건</u></p> <p>대출금리(기준금리) : 정책자금 기준금리(변동)에서 0.3%p 차감</p> <p>대출기간</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시설자금 : 8년 이내(거치기간 3년 이내 포함) * 시설자금 신용대출은 대출기간 6년 이내(거치기간 3년 이내 포함) - 운전자금 : 5년 이내(거치기간 2년 이내 포함) <p>대출한도</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대출한도 : 1.공통사항의 '개별기업당 융자한도' * 운전자금은 연간 5억원 이내. 단, 수출향상기업(p.4 금리우대기준), 최근 1년간 10인이상 고용창출 기업, 최근 1년간 10억원이상 시설투자기업(금회포함), 여성기업의 운전자금은 연간10억원 이내(청년전용창업자금 제외) |



| | |
|-----------------|---|
| 2) 청년전용 창업자금 지원 | <p><u>사업개요</u></p> <ul style="list-style-type: none"> 우수한 아이디어를 보유한 청년층의 창업초기 운영자금 공급으로 창업촉진 및 일자리 창출 <p><u>지원대상</u></p> <ul style="list-style-type: none"> 대표자가 만 39세 이하로 사업 개시일로부터 3년 미만(신청·접수일 기준)인 중소기업 및 창업을 준비 중인 자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창업성공패키지지원의 경우 7년 미만인 창업 및 예비창업자 * 최종 용자시점에는 사업자등록 필요 <p><u>지원내용</u></p> <ul style="list-style-type: none"> 융자금리 : 연2.0% 고정 융자기간 : 시설·운전 6년 이내(거치기간 3년 이내 포함) 융자한도 : 기업당 1억원 이내 융자방식 : 중진공이 자금 신청·접수와 함께 교육·컨설팅 실시 및 사업계획서 등에 대한 평가를 통해 융자대상 결정 후 직접대출(융자상환금 조정형)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융자상환금 조정형 : 정직한 창업실패자에 대하여 심의를 통해 선별적으로 융자상환금의 일부 |
|-----------------|---|

▶ 지원규모

- 3조 5,850억원
- 기업 성장단계별 특성과 정책목적에 따라 6개 세부 자금으로 구분하여 운영

| | 창업기 | 성장기 | 재도약기 |
|------|--|---|--|
| 지원방향 |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창업 및 시장진입 ○ 성장단계 디딤돌 |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성장단계 진입 및 지속성장 |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재무구조 개선 ○ 정상화/퇴출/재창업 |
| 지원사업 |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창업기업지원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일반창업 - 청년전용창업 ○ 투융자복합금융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이익공유형 |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신성장기반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신성장유망 - 협동화·협업 - 기술사업성우수 - 고성장기업육성 ○ 신시장진출지원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개발기술사업화 - 글로벌진출지원 ○ 투융자복합금융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성장공유형 |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재도약지원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구조개선전용 - 사업전환(무역조정 포함) 및 사업재편 - 재창업 |
| | ○ 긴급경영안정자금 - 일시적경영애로/재해 | | |

| 창업기업지원자금 | 긴급경영안정자금 | 재도약지원자금 | 투융자 복합금융 지원사업 | 신성장기반자금 |
|-----------|----------|---------|---------------|---------|
| 신시장진출지원자금 | 협동화자금 | 협업자금 | 개발기술사업화자금 | |

B. 기술보증기금 : www.kibo.or.kr



1KIBO 기술보증기금
사이버서비스
기술금융(업무)
고객행복마당
기보소개
정부 3.0 정보공개

주요업무 안내
보증지원
기술금융 · 평가
창업지원/벤처 · 이노비즈인증
Tech-Bridge
닫기 ×

보증이용안내

- 보증이용절차
- 보증신청자격
- 보증지원 대상기업
- 기보 전담보증 영역
- 보증관할

보증지원절차

- 보증신청 및 상담
- 보증심사방법
- 보증지원금액의 결정
- 보증한도
- 약정체결 및 보증서 발급

보증상품

- 정책자금 One-stop 지원
- 유관기관 협약지원
- 전자상거래
- 구매자금
- (잠재)수출기업 지원
- 담보여유보증
- 이행보증
- 기타상품
- 맞춤형 창업성장 프로그램
- 고용창출 특별운전자금 지원
- 청년창업 특례보증
- 문화산업완성보증
- 대 · 중소기업 상생협약보증
- R&D 보증
- 지식재산(IP) 보증
- 긴급경영안정보증
- 신재생에너지 상생협약보증
- 예비창업자 사전보증
- 고부가서비스 프로젝트 보증

보증운용정보

- 보증료 안내
- 보증비율
- 연대보증인
- 전자보증제도
- 한도거래보증제도
- 보증업무처리공개시스템

재기지원보증제도

- 재도전 기업주 재기지원보증
- 재창업 재기지원보증

재무자료제출

- 휴면보증료 환급캠페인

보증신청
기술보증기금의 보증신청 바로가기입니다.

보증신청자격
기업의 신용도, 기술력, 사업성등을 감안하여 가능금액을 결정합니다.

기술매매
기술의 매수, 매도가 이루어지는 곳입니다.



| 상품 | 대상기업 |
|-------------------------------------|---|
| 정보통신진흥기금 응용기술개발지원사업 (미래창조과학부) | <ul style="list-style-type: none"> ■ S/W, 컴퓨팅, 차세대통신네트워크, 정보통신미디어, 전자정보디바이스 등 IT 및 IT 기반 융합분야 기술개발기업 |
| 방송발전기금 프로그램제작비용지원사업 (한국전파진흥원) |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방송사업자(지상파, SO, PP, 위성방송, DMB 등) |
| 중소·벤처기업 창업 및 육성자금 (지방자치단체) |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벤처기업, 기술창업기업 등 ■ 지자체*가 요청한 기업 <p>* 부산시, 광주시, 인천시, 대전시, 경기도, 충청남도, 전라남도, 전라북도, 경상북도, 부천시, 울산시, 강원도, 서울시</p> |